

제42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1일(화)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경제부처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
- 부별심사: 경제부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경제부처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종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노동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노동부차관입니다.

○이수진 위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안타깝게도 3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고 현재 4명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붕괴된 5호기 외에도 양옆에 있는 4호기·6호기도 붕괴 위험이 높아 매몰된 분들의 수색 작업이 어렵고 결국 오늘 4·6호기 인위적으로 폭파 해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작업을 위해서 지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오늘 해체 작업에 더 이상의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저희가 기술적인 점검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께서 거기 나가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장관님께서 지난주부터 계속 상주하시면서 전체적인 수습 과정을 지휘·감독하시고 여러 가지 가족들의 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수진 위원 차관님, 사고의 원인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현재 저희가 수사 진행 중이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발파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재해자들이 기둥을 미리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에 철골 기둥에 약간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해서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그런 어떤 원인, 책임 이런 문제는 수사 진행 사항이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위원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용역 업체인 HJ중공업 해체 계획서에 의하면 지난 7월에 보일러동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4개월이나 늦게 진행이 됐고 그런 이유로 사전 취약화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구조물 상부가 아닌 하부를 먼저 취약화하며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사망자께서 일용직 노동자로서 출근한 지 4일 만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렇게 급하게 작업자를 모집하고 또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작업에 투입된 건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이수진 위원 차관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 대책을 내놓는데도 유사한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이런 반복된 사고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있어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기술의 외주화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의 외주화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이

있고 실제로 또 이런 하도급 관행에서 불필요한 불법 하도급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위험에 대한 예방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되어 있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결산 예결위에서 총리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청 구조의 남발이 근본적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도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하고 용역사인 HJ중공업이 다시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준 재하청 구조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상자만 523명이고 그중에 443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 하청, 재하청이 이어지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위험 요소도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며 하청 노동자들은 위험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주 불공정합니다.

차관님, 하청 노동자의 반복되는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도급 남발을 없애고 나아가서는 위장 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적발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로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청 구조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이번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엄벌에 처하고 그다음에 다른 현장에도 만약에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감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다음에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대신에 차관님 계신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입니다.

○이수진 위원 예, 광역교통위원장이시라고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이수진 위원 혹시 지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잘 알고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언론을 통해서 잘……

○이수진 위원 건축물관리법에 해체 작업에 대한 규정을 뒀지만 이번 사고처럼, 이게 건축물이 아니었거든요. 보일러 타워, 철탑 등 이런 공작물 해체 작업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답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이수진 위원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대신에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질의드릴게요.

최근 대통령께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하셨습니다. YTN 지분 매각을 비롯해서 국민의 혈세로 소유한 정부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는 재정 효율화도 아닐 뿐더러 무분별한 민영화, 강제 민영화 문제를 넘어서는 나라 살림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또 정부에는 손해를 끼치고 이를 사들인 쪽에는 고의로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범죄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유재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고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헐값 매각 같은 의구심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 민생 파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옥죄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자산을 억지 매각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 전체 현황이 그때도 그렇고 취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자료 요구를 해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투트랙으로 작업을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일단 현황 조사를 하고요 개별 건건으로 문제가 있는 건은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기재부차관님, 그리고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의 의료 격차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복지위에서 필수의료 강화법이 통과됐는데 법안에 포함된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이 기재부 소관 국가재정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도 곧 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법 통과와 함께 재원이 충실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이게 삶의 질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생산능력 향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게 이러한 길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맞습니다.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기초이자 최후의 보루인 공공의료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인 70%대의 7분의 1 수준인 9% 중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내란 민생파탄 정권에서는 오히려 공공병상이 2500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희생하며 적자 경영으로 돌아선 공공병원들의 경영 회복을 또한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사업만을 하면서 또 최근에는 임금체불 사태까지 발생해 노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관님,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 의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을 다시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께서 공공병원 살리기를 직접 강조하신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해 시설·장비 보강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

와 함께 경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하고 이후 지원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병원의 경영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필수 또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내실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료원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6년 예산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했구요. 혹시라도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자체 내에서 혹시라도 효율화할 부분은 없는 건지 그리고 수가제도를 바꿔서 근본적으로 건보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보건복지부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적극적인 자세 감사합니다.

내년 3월에 통합돌봄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준비 상황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정부 지원도 전체 지자체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해서 183개 지자체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담당 인력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차관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통합돌봄이 사는 곳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수진 위원 사업 시행 초기에 지원 수준에 일정한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지자체를 지원해서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돌봄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그 제도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것은 이 사업에 딱 적합한 얘기인 것 같고요. 치료와 진료, 간호, 재활, 건강관리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이게 굉장히 미흡한 곳도 있지만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갖춰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저희가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예산안조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상은 확대되는데 기준 소득은 올해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현재 저소득 근로자·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월액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1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농어업인은 103만 원이고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는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소득 기준 80만 원의 기준도 모호하게 만드셔 났어요. 그저 예산 총액에 맞춰서 거꾸로 계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이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신규 취득 시에 8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할 경우에

는…… 아니, 그렇게 신고할 유인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A값의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가입자의 실제 소득 대체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차관님, 대한민국 노인빈곤을 감축과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 방안은 재검토돼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기재부 장관님·차관님 판단 중요하고요. 지원 범위는 정부안처럼 확대를 하되 소득 기준은 최소 103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께서 지금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납부를 재개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소득자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걸로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득까지 할 거냐라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의료급여를 선정하고 있는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전체적인 소득 분포 등을 감안해서 현재 지금 정부안 기준이 설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어민 보험료하고 관련해서는 약간 또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농어민 보험료는……

○이수진 위원 조금 짧게 정리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농어민 전체의 소득 보장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이렇게 저소득은 조금, 어려운 저소득자분들에 대해 타기팅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소득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수진 위원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회가 식사 제공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24년 12월 우리 복지위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요.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이 올해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일에 추진 의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지금 현장에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어르신들이 부식비 지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부식비로 460억 원이 신규 반영돼야 된다고 하는데 재정당국 입장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부식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삶의 질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이수진 위원 장관님,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총 5조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 그중 1조 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한 추가 소비 창출입니다. 결론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민간소비 증대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얼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본예산은 4579억 원이고 이것으로 발행은 5.5조 발

행 예정입니다.

○**이수진 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이어야 됩니다. 현재 전통시장에는 성남의 전국 최대 전통 시장인 모란 오일장처럼 일정한 공간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정기 시장이 133개가 되는데 이 중의 45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기 시장 중에 상시 점포가 있는 방식이 아니라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중기부가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시다.

장관님, 민간에서 오신 분이니만큼 현실의 필요성을 우선해서 유연하게 사고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중기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관련 법 통과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 취지로 봐도 시장제도 관련된 부분에 좀 개선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실에 협의드리고 개선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국토부장관님 대신에 위원장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이수진 위원** 국토부가 지난 10월 1일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안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위반건축물은 의도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건축법을 어긴 경우도 있지만 건축법을 잘 몰라 관례에 따르거나 또 건축 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또 그런 건축물인지 모른 상태에서 매입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회가 이에 대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입법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조만간 특별조치법 관련 입법 논의가 있을 텐데 국토부가 2014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적용 범위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포함됐지만 근생빌라가 빠졌습니다. 근생빌라도 생활시설로 허가받았는데 서민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합니다.

근생빌라는 건축주가 건축 사용승인 허가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분양하고 주택으로 알고 분양받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무제한으로 부과받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시고.

제가 85㎡ 이하의 근생빌라를 포함해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했

습니다. 근생빌라 문제도 이 특별조치법 시행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현재 특정건축물 정리법 12건이 발의되어 있고요. 조만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그 근생빌라도 함께 포함해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하십시오.

○**전종덕 위원** 기재부차관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국유재산 중 외평기금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모든 매매의 세부내역을 계획, 실적, 날짜, 금액 등을 포함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임대 국유재산을 매각한 내역하고 그 내역의 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또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예결위 심사 때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국유재산 매각을 지적하면서 기재부장관님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자료제출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불성실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횟수만큼 세부내역이 그렇게 비례해서 올 정도였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내역을 보면 이게 어느 부처가 한 건지 헷갈리게 매각한 건지 제대로 받았는지를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매우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성실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차관님께 답변을 한번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방금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확인을 해 주셔서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앙 그리고 지방 협력 그리고 상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기재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재부의 예산실장님, 예산 설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년도 부산시 예산 별 지장 없이 잘 준비되고 있겠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꼭 좀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예.

○이성권 위원 PPT 첫 번째 페이지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로써 5극3특을 주장했습니다. 저 100%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지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목적과 의지와 별개로 또 결과론에 있어서는 균형발전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한편으로는 균형발전의 브레이크를 밟는 이중적인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결산심의 때 제가 기재부차관님하고 민생회복소비쿠폰을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행안위에 있다 보니까 지방 곳곳을 국정감사를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제가 속도를 빨리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시지요.

차관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좀 하락하고 있지요, 추세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성권 위원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단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세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성권 위원 맞습니다. 지방세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림을 살 수 있는 능력들이 갈수록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한번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경제 상황이 좋아야 됩니다. 이건 지난번 PPT 때 제가 한번 썼었지요. 기억나시겠지만 작년도 2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까지의 지역별 GRDP 추이를 보면 하락세를 계속 거듭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왼쪽 표 하단에 보는 것처럼 건설업이 GRDP 하락을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건설업의 경우도 서울과 지방 그리고 또 서울 간의 혹은 수도권 간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모습을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국토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장관님 안 계시고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입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사실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의 미분양 상황이 양극화돼 있는 것 맞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것 한번 표를 보면 이번에 지방 국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올해 1월 달 대비 최근 8월 달까지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전국 평균은 8.27%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다시 나누어 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25.91% 그리고 지방은 1.69%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미분양 해소, 결국은 이 부분은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으로서의 취득세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 번이나 나왔지만 사실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쪽으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 억제 쪽에 맞춰 왔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더더욱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아마 인식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지방세 세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습시다만 상위 4개의 세원이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를 해 봤거든요. 취득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방소득세 내려왔고요 재산세 내려왔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총량은 늘었지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율 변경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율을 2018년도에 15%였던 것을 단계적으로 21%, 23.7%, 25.3%까지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세원이 좀 더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더욱더 지방의 세원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는 심각한 구조 속에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이 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공감하실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성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가 보면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 PPT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채무 현황 이것도 한번 분석했습니다. 이거는 기재부의 자료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채무가 24.5%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재까지 따져 보니까 44.4%입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24.5%에서 44.4%로 총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방정부의 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고무줄로 따져 보면 탄력을 잃은 고무줄 같아서 한번 당기면 잘못하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기업이 지역에 소재를 하면서 거주를 하면서 세금을 내야만 지방세도 들어오게 되는데 인구구조도 2019년도에 크로스되고 난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지방 인구는 갈수록 감소, 급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고, 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지금 지방의 현실.

이 상황에서 지방에 좀 도움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오히려 거기에 더 악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채무도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비율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입니다. 이것은 의무경비지요. 이 부분은 결국은 지방정부의 재량지출을 막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나 이런 추세에 대해서 차관님 공감을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금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지방정부 사회복지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또 중앙정부도, 저기 보면 지방정부 34.9% 돼 있는데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예산과 관련된 결정권을 쥐고 있

는 것은 정부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정부는 거기에 따라가는 종속적인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증가율의 추세는 지방정부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 중에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재원을 지방정부는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다음 PPT를 보시면, 결국은 지방정부들이 빚을 냈습니다. 부채를 또 늘리는 거지요. 기금과 지방채를 합산해서 1조 700억을 냈고요. 이것은 저희가 17개 광역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매년 내는 이자만 하더라도 134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제가 조금 더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요즘은 자연재해든 인재든지 간에 사회적 재난이 많은 시기인데 전라북도와 대구시의 경우는 그 재원 조달에 있어서 재난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 이것은 전액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전용을 해서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빚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대구시 산하의 기초단체인 북구나 수성구, 달서구도 그런 양상을 좀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빚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구조화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어린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들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의 문화사업 같은 데서 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를 한 상태에서 재원이 조달된 경우까지 있었다. 물론 중앙정부도 8 대 2에서 9 대 1로 매칭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통을 감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방은 더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결정할 때 8 대 2로 설계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9 대 1로 바꿨고, 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제가 그때 계속 주장한 것처럼 하려면 중앙정부 전액으로 해야 된다, 지방정부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저기 보면 보조금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두고 총괄적으로 짧게 한마디 해 주시고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정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지출 효율화든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쓰든 아니면 다른 기금을 쓰든 간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금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민간소비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 할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75%를 했고 서울 외 지역은 90%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대규모 지방정부에 재원 부담이 가는 것은…… 이번에도 저희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열심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일단 소통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충분한 소통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자체에다 일일이 다 확인한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적인 위반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에 부담 주는 것은 저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재정승수효과가 확실하게 보장된 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합니다. 저는 재정승수효과가 없다고 보는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행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방정부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다음 질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 나와 계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기후부1차관 나와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차관님 계십니까?

PPT 한번 보시지요.

저것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녹조 사진입니다.

○이성권 위원 차관님은 어디서 취수된 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차관님 식수를 어디에서 취수된 물을 먹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아마 한강……

○이성권 위원 한강의 상류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이성권 위원 그나마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과—경남의 일부지요, 동부경남이 해당되겠지만—부산시는 낙동강의 최하류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나요? 잘 모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냥 단적으로 녹조 하나만 놓고 보면요 올해 녹조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 5월부터 발생했습니다. 작년까지는 6월부터 발생했거든요. 한 달 앞당겨져서 녹조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녹조가 발생한 기간도 올해 들어서 최대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수질이 안 좋으니까 녹조가 발생하는 거겠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그래서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오염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걸 정부가 항상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면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2000년 대비 2025년에 줄었어요. 그러나 양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산업단지는 개수가 늘고 입주업체도 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수질, 공업용수 수준이…… 상단과 하단은 보면 연도별인데 상류, 중류, 하류를 보시면 됩니다. 상류, 중류, 하류를 보면 하류로 내려올수록 공업용수와 같은 등급으로 나타납니다. 이 물을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마시고 있거든요. 30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환경부 때 계획을 세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있었습니다.

○이성권 위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낙동강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 길이가 긴 반면에 중간중간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수질이 좀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포함해서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정책까지 검토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맞습니다. 2021년에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세웠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2023년에 약간의 수정을 합니다. 이것 되고 있습니까?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부처가 어디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기후부입니다. 저희 부입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지금 약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재정,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취수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아닙니다. 위원님, 두 가지가 결합돼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저기 보여 주신 것과 같이 기존 계획하고 수정 계획에 따라서 취수하는 물 양들이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성권 위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자체적인 행정 단위에서의 계획의 변경보다는 취수해야 될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환경부 차원에서 뭘 하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하는 회의도 하고 있고 의견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 노력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줘 보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현재 실제로 주민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부산시, 경남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지역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종합안을 만드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지속적인 설득에 함께 나서야 됩니다. 그걸 꼭 해 주셔야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주민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필요한데 올해와 내년도 사업에 이 기본설계와 관련된 설계비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이

것은 넣어야 됩니다. 과거에 넣었다가 결국은…… 두 해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결국은 이게 주민들 반대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불용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부분 이해는 갑니다, 행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피력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것은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위원님 말씀 취지 공감하고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성권 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보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사건들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성권 위원 경기도의 선감학원, 부산의 형제복지원 그리고 영화숙·재생원과 같은 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만 형제복지원의 피해자가 광안대교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겠다고 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해서 제가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직접 면담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부산시 차원의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발의했습니다.

PPT 그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왜 마지막 장으로 넘겼는가 하면 영상이 끊기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걸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성권 위원 그래서 1심과 2심이 진행되고 있고 승소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결산 때 법무부장관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해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시 항소나 상소를 하지 말도록 그걸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재판을 끄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희생을 감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승소한 1심이든 2심 결과가 나오고 나면 바로 보상 문제로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성권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들이 있어요.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성권 위원 집단 수용소의 평균 한 42% 정도가 기초수급자들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수급률이 42%.

○이성권 위원 이분들에게 만에 하나 배·보상을 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에서 다시 제외가 되어 버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기초수급 된 이유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인권 문제인데 기초수급에서 제외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해법으로 한센인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생활비 지원이요?

○이성권 위원 한센인에 대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금은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지만……

○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죄송합니다.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금융자산에 해당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계속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걸 동일하게 적용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생계급여 제도가 가지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또 관계 부처하고도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행안부하고 꼭 좀 심도 깊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행안부·기재부·법무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법무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분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 성산의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오늘 장관님들 국무회의 때문에 차관님들 대신 오셨는데요. 기후에너지부의 차관님, 어디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1차관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2018년 23살의 청년 김용균 노동자가 발전소에서 숨졌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정당한 임금이 보장되는 사회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9년 5개 발전공기업과 8개 협력사가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무비를 삭감 없이 전용 계좌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발전소 현장의 현실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시다.

그림을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서부발전이 태안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에서 한전KPS—1차 하청이 되지요—에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1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가 2차 하청업체인 한국과워오앤엠으로 넘기자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은 평균 4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한국서부발전에서는 1인당 1억 3600을 계산해서 내려 줬는데 한전KPS가 7820만 원을 중간에 빼낸 거지요. 그리고 5780만 원에 한국파워오앤엠에 넘겼습니다. 또 한국파워오앤엠은 근로자들에게 실제 4708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1072만 원이 빠지지요. 즉 노동자의 임금 77%가 중간에서 사라진 겁니다.

한전KPS는 공기기업입니다. 그러기에 협약서 없이도 적정 노무비 제도를 가장 충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짜리 쪼개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회사 이름만 바뀐 계약서를 매년 새로 썼습니다. 이렇게 경력은 끊기고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늘 신입처럼 일하고 늘 절반의 임금만 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청업체 경영진 다수가 한전KPS 출신이라는 겁니다. 한전KPS 퇴직한 인사가 하청업체 간부로 내려가서 다시 한전KPS의 계약을 따내는 내부 낙하산 구조입니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먹는 진짜 이유입니다.

차관님, 적정 노무비 제도는 민간보다 공공이 먼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한전KPS가 그때 협약에서는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약에 안 넣어도 지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외주를 유지하더라도 임금만큼은 반드시 공공기업 전용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 당시 시범사업에 빠져 있었지만 노무비 전용 계좌 임금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의무화돼 있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하도급 과정에서 진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전KPS 관련해서 하도급 구조 개선방안이 양대 노총 주관으로 협의체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주무 부서라서 잘 챙겨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잘 챙겨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과기부장관님도 안 나오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차관 나와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R&D 예산 35.3조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9.3% 증가했습니다.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중 단연코 으뜸이고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는 매년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좋은 의지의 천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R&D 재원 배분에 산업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다 녹여 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줌 부탁드립니다.

밑에 파란색은 정부 R&D 예산이고요 위에 녹색은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9

조, 약 120조인데 202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23% 정도, 민간에서 76% 이런 비중입니다. 매년 총금액은 늘어나고 있고요. 24년은 정부 부분이 좀 줄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나누어 보니까 경기도가 51.3%고 서울이 15.9%, 대전이 9.3%입니다. 민간하고 정부 다 포함해서요. 나머지 시도는 다 합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개발하는 데하고 산업단지하고 분리돼 있다는 거지요.

대개 지방에 굉장한 산업단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데하고 산업단지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그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갈수록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격차가 점점 가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음 것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화면.

국비 R&D만 따로 통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2020년에 31.7%였는데요, 수도권 이. 그런데 2024년에는 약 34.4%로 수도권은 8.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제가 있는 경남을 보면 2020년에는 그래도 9.7%의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2024년에는 6.3%로 줍니다. 갈수록 줄어들지요.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더니, 다른 지역도 대체로 조금씩은 주는데 경남은 아주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보니까 이게 연구개발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관이 사실은 연구중심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남에는 연구중심대학이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카이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공약으로 해서 광주과학기술도 만들어지고 그 뒤에 대구경북과학기술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울산과학기술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 지는데 산업현장·제조현장의 중심인 경남에 이런 연구중심대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R&D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연구개발은 딴 데서 하고 제조는 여기서 하고 서로 분리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주근접이 중요하다 하듯이 연산근접이 중요하지 않느냐. 연구개발과 생산하는 산업단지가 같이 가까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큰데 경남 창원에 그런 게 없다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특히 정부에서는 과기대 중심으로,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그날 다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대학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카이스트의 분원을, 분관을 경남 창원에 설립하는 게 어떻냐. 지난번, 오래된 논의이기도 합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방 과학기술원이나 분원 설립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 지역대학과의 관계 또 학령인구 감소 문제 또 재정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허성무 위원 옛날에 학령인구가 많을 때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소해서 안 된다는 말은 그때 주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단입니다. 결단을 내려서, 그리고 정원을 많이 뽑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정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장관님이 안 나오셨는데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렇게 생각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남권에 유니스트가 같이 연구 중심으로 활동……

○**허성무 위원** 그것은 경남권이 아니고 울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울산 지역에 있습니다만 그쪽의 동남권 특화 분야들이 다 연계해서……

○**허성무 위원** 자꾸 동남권으로 묶지 마세요. 동남권으로 묶어서 경남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 계신 고위 관료들은 동남권으로 계속 묶지만 실제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철도 같은 경우에도 경부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경전선은 피해 가고 지금도 진주는 거의 부산까지 왔다가, 마산·창원도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밀양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벌써 120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동남권에 묶어서 이렇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반드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여러 가지 사항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새로 완전한 과기대를 설립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분원 정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가 꼭 있어야 될 거라는 걸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님도 안 나와서 차관님,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태양광 산업을 비리의 온상으로 적폐로 몰아서 굉장히 수사도 많이 하고 감사도 하고 했습니다. 감사원, 조달청, 검찰까지 동원해서 전국을 이 잡듯이 뒤졌고요. 그렇게 하니까 일부 극소수의 비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일부의 일이었고 감사원이 점검한 전체 12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전체에 비취 보면 이 산업 전체를 적폐로 볼 만한 그런 게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아주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이후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조달청, 검찰, 지자체까지 연쇄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은 삭감되었고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언제 감사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결제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또 언제 털릴지 모른다면 신규 투자 확장을 꺼렸습니다. 산업을 움직이던 사람과 기업이 동시에 위축된 것입니다.

표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셀 시장 점유율입니다. 2017년부터 통계가 지금 쪽 나와 있는데요. 2021년을 보면 우리 국산 셀이 시장을 35.1% 점유하고 있었는데 24년에 가면 4.9%로 줄어듭니다. 물론 중국산 저가 공세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외국의 공세가 있을 때 정부가 막아 내는 여러 가지 방법,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탄압함으로써 그냥 국내 산업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저희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중국산의 위협도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걸 지키고 방어하기보다는 적폐로 몰고 감사하고 수사하고 탄압해서 오히려 무너짐을 재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PPT 하나 더 보여 주십시오.

이건 모듈 시장 점유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66%였습니다. 23년에는

70.9%가 우리 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가면 41%로 줄어듭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LG전자는 태양광 패널 사업 아예 포기했습니다. 국내 1위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인 OCI 역시 사업을 접었습니다. 한화솔루션 음성 공장도 1800명의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으며 폐쇄했습니다. 기술인력은 중국으로 빠져나갔고요 중소기업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도 있었지만 상대국의 이런 공세가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그것을 제도적·행정적으로 막고 국내 기업을 보호·육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탄압하고 수사하고 적폐로 몰아서 이렇게 밀어내니 국내 산업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안 나와 계신데요.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허성무 위원 예산을 보면, 기재부차관님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허성무 위원 그다음 그림 보여 주십시오.

22년에 1조 3300억이었던 재생에너지 예산이 25년이 되면 8600억으로 줄어듭니다. 계속 줄지요. 어려울수록 버팀목이 되어 줘야 되는데 더 어렵고 그 산업을 아주 죽일 작정으로 이렇게 갑니다. 한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과 국민이 먹고살려면…… 얼마나 그 부분을 경쟁력 갖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망가트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의 이런 과도한 감사·수사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태양광 산업에만 그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산업에 같이 미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의 속도도 낮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믹스의 균형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차관님·장관님들께서 이제 공무원들에게 용기도 북돋아 주셔야 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업무가 산자부에서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갔지만 어느 부서에서 하든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고위공무원들, 차관님·장관님들의 리더십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대답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후부 국정과제의 가장 우선순위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입니다. 그 확대 과정에서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차관님, 예산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 목표 다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탄소중립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저희의 산업경쟁력, 시장점유율도 같이 높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말씀을 해 주셨습시다마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저희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 좀 띄워 주시고요.

지난 9월 대정부질의 당시 본 위원은 김민석 총리께 윤석열 정부인 2023년, 공장이 있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시설이 있는 제조업 9%가 사라진 사실을 심각하게 언급하며 원인이 뭔지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대책기관들과 협력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서를 만드는 심정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24년 통계가 안 나왔는데요. 지금 24년 통계 보면 역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오히려 늘어났던 제조업이 23년·24년 2년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었습니다, 8.3%·6.1%. 전체 제조업 수가 58만 개 정도 되는데 2년 사이에 8만 개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우리 제조업의 근간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정말…… 이것은 우리 통계청 자료입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이것의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대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지금 총리님 안 계시지만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구조가 암만 이렇게 변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대한민국 산업의 백본(backbone)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고요, 전후방 효과도 높고 해외 충격에서 완충작용도 합니다.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서 정확한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기재부차관님,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탄소중립 이런 과제 아래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위상 위원 세계 주요국들의 공통적인 에너지정책의 전환,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최근에 AI 혁명하고 관련해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믹스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전력원을 가져갈 것인가,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주요 나라들이 원자력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런 지금 당장의 흐름과 아울러서 같이 봐야 될 것은 현재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기에 현재 가능한 부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원전을 또 짓는 데 한 15년이 걸린다, 원자력발전이 급증한 에너지 수요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12차 전기본 계획 공론화를 전제로 신규 원전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 원전 건설 후보지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위상 위원 그리고 공정기간도 충분히 단축할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일부는 단축……

○김위상 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은 8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원전의 전력생산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12g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위상 위원 석탄이 한 820g 그리고 천연가스가 490g, 태양광이 27~48g. 그러니까 원전은 실질적으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그리고 기후부 장관의 탈탄소정책이라는 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것이 지금 발전 방식 중의 하나가 원전입니다. 실제로 원전은 탄소 감축에 있어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30 NDC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2018~2024년까지 총 8900만t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의 6500만t을 전력 부문에서 감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결과가 이렇게 감축으로, 전력 부문에서 감축이 많이 나타났는데 전력 부문만큼이나 감축에 중요한 것이 수송 부문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전기와 수소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저탄소에너지가 충분해야 합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위상 위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간헐성 문제로 인해서 전력수급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원전과 같은 기저전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2035년 NDC 달성을 위해 정부가 상정한 발전원별 에너지믹스 시나리오에 대한 예산, 지금 차관님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26년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전하고 관련된 사업비 규모도 늘렸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비 규모도 늘렸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있는 전력수급계획 같은 경우는 2025년 금년 2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향후 곧 12차 전기본을 저희가 할 계획인데요. 그 계획이 만들어진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87%의 국민이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보다도 6.2%가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엔비디아에서 공급받는 GPU를 가동하기 위해서 충분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위상 위원 세계 각국은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정부만 부지 선정을 미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굉장히 많이 대고 있습니다.

전력수급 안정성과 전력요금, 전기요금 영향 측면에서 어떠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에너지믹스를 고려할 때는 비용 측면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전력공급의 안정성 그리고 시차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2024년 실적을 보면 원전으로는 저희가 31.7%를 충당하고요 재생에너지는 9.0%만을 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여당과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NDC 설정은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은 고려하지 않고 국익은 뒤로 한 채 NDC 수치만을 경쟁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계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산업계는 정부 지원 없이는 48%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NDC 관련된 논의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정부는 확정돼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정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정부가 감당을 하고 산업계가 감당할 부분은 산업계가 감당을 하고 이렇게 서로 협업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추계는 완료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위상 위원 차관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산업계를 지킬 수 있을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배출권 구매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2030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발전사의 배출권 구매 비율이, 발전사에서 구매한 배출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높여 가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한 2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최대 4조 2000억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의원실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26년도에 1조 4030억 원 수준에서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 2030년도에는 4조 1262억 수준으로 대폭 뛰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부채가 지금 207조 원입니다. 207조 원인데 매년 4조 원씩 추가 비용이 늘어난다면 심각한 재정 부담이 안 있겠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위상 위원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에너지저장장치 그리고 송전망 확충, 계통 안정화 작업 등에는 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한전에 정부의 지원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한전하고 관련해서는 한전이 공기업이니 한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전이……

○김위상 위원 정부의 지원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빛도 많고 또 에너지고속도로 등 관련 인프라를 깔려면 한전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전이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그 부분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배출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 비용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발전사는 한전에 전력 구입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한전에. 그리고 한전은 기후환경요금으로 국민에게 청구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지요, 정부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전기요금 개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김위상 위원 차관님, 기후환경요금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위상 위원 기후환경요금은 전기 사용자에게 회수하는 구조로 돼 있지요? 기후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속도면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할지 예측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추산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전기요금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부담하시는 부분 그리고 산업 경쟁력에 미치

는 부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기후환경요금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전력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에 전가될 것입니다. 원전 비중의 확대 시에 배출권 비용 절감으로 인한 기후환경요금 억제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기재부가 평가를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요금의 증가는 결국 국민이 내는 돈이고 숨겨진 세금과도 같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을 국민이 어떻게 내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후환경요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기요금에 있는지 없는지도 국민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잘 알려 내야 됩니다, 알려 내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정정책이 분명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서 기재부가 꼼꼼하게 잘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평가하는 2035년 NDC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총 소요 비용은 얼마이며 항목별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걸 다 재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규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NDC 목표가 지금 발표된 상황이니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김위상 위원** 예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께 다른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국민취업 지원제도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위상 위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22년도에 1조 4963억 원, 내년 예산은 1조 128억입니다. 올해하고 거진 동결 수준에 가까운데 부족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선발 기준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올해 초에 선발할 당시에, 올해 초에는 72점이던 국민취업 지원제도 제1유형 청년 선발형이 몇 점으로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예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2점에서 올해 상반기에 90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청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구직자의 60에서 70% 이상이 기준 미달로 제도에 접근조차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개정된 점수표를 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15점을 줍니다. 그리고 2년 이내 취업한 기간이 총 30일 미만일 때는 -16%를 주기 때문에 아예 바로 미달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도 못 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차관님 보시기에도 이게 허들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위원님 말씀은 필요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꼭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약간 기준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은 25년 대비 26년에 5만 명가량이 증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위상 위원** 예,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증가한 것은 맞는데 점수가 이렇게 높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려서 고정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이 사업 중간에 선발 커트라인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증액안이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혜택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도 사업 효과성은 기본적으로 담보돼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지금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대인 거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위상 위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제대로 보듬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부총리께서도 오늘 아셔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시다. 차관님이 잘 생각하셔서 합당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화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효과적으로 적정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수**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을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동북아의 물류 중심 향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오늘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병진 위원** 예,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왜 11일로 정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도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알고 계신데 겸손함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96년도, 30년 됐지요.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공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홀토 자 있지요, 열십에 한일 있지요, ‘十, 一’로 정했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 지금 200만 5320명이더라고요,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가 인구가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농가 인구가 그렇고.

그다음에 가구 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경영체 기준으로 하면 100만이 좀 무너졌습니다.

○이병진 위원 무너졌습니다. 90만 9000으로 무너졌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국무위원들의 뿌리는 뭐다? 농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촌입니다.

○이병진 위원 저도 지금 평택에 3대째 살고 있지만 팽성읍 노양2리 산 1번지, 시골에 제 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농복합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농촌지역에 수만 명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시도가 17개가 있고……

행안부장관님, 시군구가 몇 개 있습니까? 226개가 있어요.

읍면동이 몇 개 있어요, 행안부장관님? 차관님이신가? 3551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26개 시군구 중에서 적지 않은 시군구가 지금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한 57%가 된답니다, 한 130여 개가. 그런데 그중에서 또 57개가 소멸 고 위험에 노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에서 한 25%가 시군구 중에서 고위험에 노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방치하면 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안 됩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우리는 KTX·SRT·GTX, 평택에서 부산 2시간이면 갑니다. 사통팔달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디에 살아도 뜻만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으로는 잘 안 가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를 놓고 찾아가게 하고 다리도 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유혹을 하고 유인효과를 만들어 내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 몇 표를 득표하셨어요? 1728만 7513표, 득표율은 49.42%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공약하셨어요? 공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촌기본소득 보장한다고 공약 안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약하셨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공약은 실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병진 위원 거의 50%가 지지했던 말이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선택을 받겠다, 주인의 선택을 받겠다고 언명하셨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말아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실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병진 위원 해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꼭 움켜잡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서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 각론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10~12개밖에 안 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7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병진 위원 7개입니까? 7개밖에 안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이것 새 밭의 피 아닙니까? 이것 좀 넓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은 2년 동안 시범사업 기간이라서요, 위원님.

○이병진 위원 시범도 시범이지만 찾아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유인하는 거란 말이지요. 농촌의 효과가 뭐가 커요?

기획재정부차관님, 우리 국정과제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 몇 번이에요, 중요한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께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모르니까 여쭙보잖아요. 저도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안다고 또 까불면 안 되니까 말이지요. 저도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병진 위원 40번, 41번, 42번 그 주변에 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국정과제가 있단 말이지요. 농촌이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도작이 푸르고 또—산림청장도 나왔지만—탄소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나무와 숲이 기후위기를, 자연재해를 완화하는 보충 역할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농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효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만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건데 지금 하는 출발점에 섰단 말이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만 하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혹자는 이게 포폴리즘이다 또 내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포폴리즘이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업이 근본이다라는 데 그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10만㎡밖에 안 되는 땅에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오늘 왔다 갔다 할 텐데……

오늘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또 어디 가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원주 갑니다.

○이병진 위원 1시간 2시간이면 금방 가잖아, 1시간 10분이면. 그렇지요? 원주 한 100km가 넘는데.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나라에서 농촌으로 유인하는 일련의 작업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 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동안 좀 소홀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소홀히 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기본소득은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점차 확대돼야 되고, 예산 타령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백안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축차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그 효과, 그 효과를 우리가 확인해 나가자……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더욱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점심 무상급식, 처음에는 예산 없다고 얼마나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다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한 걸로.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에서는 우리가 전산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농업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이병진 위원** 농림축산부가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차관님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농림축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기획재정부도 열심히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차관입니까, 박정희 정부의 기획재정부차관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민의 기획재정부차관입니다.

○**이병진 위원** 더욱더 똑똑합니다. 국민의 정부의 기획재정부차관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명 국민의 정부를 이재명 정부라고도 칭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욱더 직설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또 농림축산부장관으로서 우리 역사의 거보를 내딛는 일련의 작업이 바로 농업기본소득입니다. 이것 말년에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1년 차, 2년 차에 해서 체제를 잡아서 역사적인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지켜야 되고 농림부와도 협업해서 이걸 꼭 완성할 수 있도록, 국민 그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농어촌이 그동안 소외받은 측면이 있는데 사람이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역강부약 대동 세상, 기본사회 구현, 바로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말씀드렸는데 농림식품부 산하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한국농어촌공사……

○이병진 위원 기반시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저수지만 해도 3427개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1376개를 잘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소위 태양광화시켜서 사업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봤어요.

혹시 그런 보고서 본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력료 제세금 등 고정비 20년 대비 약 3배는 증가했는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산 팔아서 운영비 하고 유리관리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1376개의 저수지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기가 3.3GW라고 합니다. 원전 하나 지으면 1GW의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3.3이면 원전 3개 이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 짓는 데는 10~12년 걸리는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은 2~3년 걸립니다.

어떤 게 효율성 있고 경제성 있습니까, 기재부차관님? 10~12년 걸리는 게 효율성 있어요, 2~3년이 효율성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빠른 게 효율성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지역 수용성도 뛰어나고 환경성도 뛰어나요. 이런 저수지 같은 데는 반발 수요도 적거든요. 오염 문제도 얘기하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그것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두 번째 한번 보면 보수가 안 돼 자산매각을 한 40% 하고 재생에너지는 6%밖에 농어촌공사에서는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산을 팔지 않고 돈 벌 수도 있고 국가의 전력산업에,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놀리고 있다, 놀리고 있지 않다,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질의 주신 취지로 봐서는 조금 더 활용할 여력이 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조금이 아니고 명약관화하잖아요. 너무 중립적 표현을 쓰시고 조심하는데, 놀리고 있어요. 저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역량을 투자해서.

제 얘기가 틀렸어요? 맞아요. 저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저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당정대에서 53~61%, 재생에너지 비율 높이자고 엇그저께 모여서 협의도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병진 위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런데 공사는 부족한 유지관리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서도 정부 출자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이 지적했듯이 1조 3000억에서 8600억으로 줄었던 말이지요. 이제는 이전에 투자했던 만큼만 복귀해도 활화산같이 타오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관련 기술이 사실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지금 셀 기술 같은 경우 우리가 먼저 개발했는데 중국이 그것을 원용해 가 가지고, 테스트베드가 뛰어나니까 사막이라든지 안 까는 데가 없어요. 산에 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톱 오브 톱이 중국이 됐잖아요, 공급망을 다 갖춰 가지고 말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겼고, 이런 사업을 우리는 국내에서만 하지 말고 외국으로까지도 진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의 그런 계획 한번 제대로 보고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단도 만든 것 같은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우리가 농업시설 기반 있어, 공유 내수면 활용해 그리고 오염도 없고 기술도 뛰어나. 그렇지요? 유지·발전, 디벨러프(develope)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농어촌공사를 포함해서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원을 잘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우리 농촌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 국민주권정부의 우선사업이에요.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이거지요,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동의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 올렸으니 기재부, 농림부 잘 협업해 가지고 꼭 성과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임광현 예.

○이병진 위원 AI를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AI가 대세입니다. 우리 국세 분야에서도 AI 시대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바로 저기 미국 국세청 같은 경우 AI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정보기술국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를 했대요. 거기에 10조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디지털 조직 CDIO라고 있는데 그 조직이 정부기관 조직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의 인력은 우리 국세청 인력의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민 국세 품질 제고를 위해서 또 3대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또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는 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조직·인력 신설·확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체 인력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세청장 임광현** 우선 예산은 미국 국세청은 10조, 영국 국세청도 1조 이상 하는데요 저희는 한 1300억 원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이미 자료가 전산으로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요. 인력 문제도 AI 빅데이터 분야의 석박사급 외부 인력 4명 정도를 내년에 채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전산 전문가인 전산직 직원들이 우리 국세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카이스트 등에 AI 위탁 교육을 보내서 내부 인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용만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안 계셔서 차관님께서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용만 위원** 이번 경주 APEC 개최 성과에 관해서 차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성공적인 APEC 개최에 애써 주신 정부 그리고 각 부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APEC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님과 정부 부처도 있지만 국민들의 성원에 따라서 성공을 한 거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장관님께서 안 계시긴 한데, 장관님께서 7월에 취임을 하시고 매월 미국을 오가시면서 협상 전반을 이끌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APEC 기간 중에도 한미 무역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셔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도 장관님을 아주 터프한 협상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번 APEC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과를 한 세 가지 정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한미·한중 정상외교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제일 먼저 들고 싶고요. 대규모 투자유치를 했다는 것 그다음에 AI 분야의 협력이, GPU 26만 장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협력이 강화됐다는 것들을 들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만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APEC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이벤트가 아니고 무역·투자 질서, 안보, AI·디지털 전환 그리고 민생·안전 같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묶어 낸 성과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제가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과도 몇몇 만나면서 그분들께서 평가하신 내용도 들어 봤는데 그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던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다음에 일부 극우세력에서는 이 성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편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쟁이 아니고 사실과 절차, 비교와 결과로 팩트 체크를 좀 해 보고 싶고요. 우리 정부가, 정부뿐만이 아니지요, 나아가서 국가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사실관계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라 하더라도, 같은 당에서 가신 대통령님이 꾸린 정부라 하더라도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하는 차원에서 더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부터도 비판을 할 건데요. 그리고 어떤 정부든 비판을 안 받는 정부는 온전한 정부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 공세는 보면 이게 비판이 아니고 왜곡입니다, 왜곡.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여론도 흔들리고 국론이 갈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외교, 경제 협상력이 약화되는, 국익이 저해되는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과의 통상협상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신뢰와 일관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밀실 합의다, 백지 외교다라는 이런 정치적 공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상대국이 ‘한국의 내부에서 이런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합의가 순조롭지가 않구나’ 혹은 ‘친미, 친미 하고 외치더니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는 순간 향후에 있을 우리 협상,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대국의 양보의 여지도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공세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국익 저해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상협상에서는 일관된 합의와 메시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같이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주장을 해요, 왜곡되게. 백지 외교 프레임, 자동차 관세협상,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엔비디아 GPU 관련된 내용인데……

PPT 좀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합의문이 없다, 공동성명이 없다’ 이렇게 정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과거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세협상을 보면 정상 간의 정치적인 타결이 있고 나면 국내 절차, 정치 일정, 이견 조정 같은 것을 거쳐서 정상 간의 타결 이후 최소 한 달이나 최대 세 달까지도 걸려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EU 모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에 아직 공동합의문을 발표는 못하지만 자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알려 드리는 것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알린 다음에 이상한 내용이 나온다는 부담을 져야 되니까 사실 안 알리고 싶겠지만 알려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일본은 올해 7월 22일에 정상 간의 협상이 타결이 되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문서화되고 3개월 뒤에 합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7월 27일경에 트럼프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 간의 협상이 타결이 되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난 8월 21일에 공동성명, 조인트 스테이트먼트(Joint Statement)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EU는 아직까지도 내부 추가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양국 정상 간의 정치적 타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팩트시트나 공동성명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계획 수립하는 절차, 이것은 보편적인 절차인 거예요. 맞지요, 차관님?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래서 문서가 없어서 문제다, 아무런 합의 근거가 없다, ‘백지 외교’라는 표현이 사실은 절차에 대한 오독이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되는 게 보편적인 절차인 걸 다 알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인데 차관님이 보시기에 미일, 미·EU 사례에서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지금 협상 내용이 절차상에 본질적 차이가 있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상 간의 합의 이후에 디테일을 서로 간에 협의하면서 문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EU나 일본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합의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 조율이 돼 가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협상이 좀 끝났고 마무리 단계고 안보 분야 팩트시트 협상이 남았다고 보도가 됐는데 어느 정도 사실인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구체적으로 분야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대부분의 작업들이 마무리 중이고 미국 내에서 부처 간에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약간의 시간이 다른 국가들도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게 보편적 절차인 거예요.

그리고 3500억 달러 혈세 반출을 운운합니다. 야당 수석대변인에게서 이번 협상으로 3500억 불, 국민 1인당 950만 원의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얘기까지 해 주셨어요. 또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액 현금 투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보면 현금 투자는 총 2000억 달러로 하기로 했고요. 연간 투자 상한도 200억 달러로 제한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나머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투자도 투자 외 보증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차관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의 협세를 미국으로 반출했다 이런 협상이 이루어진 게 맞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원에서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최선을 다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만 위원** 차관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외신 평가 볼까요? 뉴욕타임즈, ‘한국이 일본보다 덜 부담스러운,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결과가 타국의 협상 기준점이 될 것이다’. 로이터, ‘무역 의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국제사회, 세계 주요 언론들은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잘못된 평가를 하는 순간 신뢰를 잃지요. 그리고 어느 언론사들도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히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도 인정을 하는데 왜 우리 자국민이 이 성과를 깎아내리는 듯이 표현 합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자화자찬은 경계를 하되 이게 실적인지 실패인지에 대해서 구분도 못 하면 안 될 것이고 산업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자동차 관세협상도 한번 볼게요.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상호관세가 예고가 됐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용만 위원** 그리고 실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때 우리 자동차 산업이 감당을 해야 했던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25% 관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으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후방 연관효과나 고용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제1위 산업입니다. 그래서 25% 관세가 장기화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포함해서 우리 산업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김용만 위원** 저는 그래서 정부가 25%에서 15% 인하한 게 단순히 10% 조정한 게 아니고 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방어선을 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0%였던 관세가 15%로 오른 게 무슨 성과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한미 FTA에 의해서 0%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U와 일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쟁국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실제로 관세가 부과가 됐었지요, 4월부터 10월까지?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0%였던 게 아니고 25%였던 게 맞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렇게 출처도 알 수 없는 이런 주장들 이것 다 가짜뉴스예요.

그리고 우리 최대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실제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에 모두 25%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0%가 아니었던 거예요. 친미, 친미 하지만 미국에서 부과를 했던 거지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이번 협상을 통해 가지고 15% 수준으로 조건을 확보한 게 맞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협상을 통해 가지고 연간 한 3조 원 정도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의선 회장님이 ‘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그 신세를 꼭 갚겠다’.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게 도움도 안 받았으면?

그래서 이번 협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통상 협상 이어가게 될 건데 이런 가짜뉴스들 때문에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 끼치면 안 됩니다. 산업 정책에 장관님하고 차관님께서 같이 책임을 지시고 계신데요,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팩트시트가 발표되면 또 MOU가 서명되면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제 전의 질의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GPU 공급 관련해서. 세계 최대 AI 기업이지요, 엔비디아에서 한국에 GPU 26만 장 공급하기로 한 게 역사적인 협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언론들도 ‘한국과 엔비디아가 AI 동맹을 체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모 의원님께서, 제가 이름을 적어 났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모 의원님께서 이런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민간의 성과를 정부가 가로챘다. 성과 위조다. 도둑질이다’. 그런데 정작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전 세계 AI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지원 덕분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지금 들어 보니까 차관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대통령님하고 젠슨 황 대표하고 자리에서 같이 배석을 하셔서 가지고 위치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때 차관님도 계셨나요, 거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니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과기정통부 부총리께서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김용만 위원** 거기에서 우리 두 차관님 혹은 장관님께서 민간의 성과를 흠쳐 온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번 엔비디아의 최신 GPU 26만 장 한국 공급 계획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안팎에서 이것은 대한민국 새 정부에서 AI 고속도로 구축 등 강력한 AI 육성 의지를 밝히고 또 구체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AI GPU를 구매를 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향을 이끌어 내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만 들어 봐도 도둑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어서 2차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GPU 이번에 확보한 건 가지고 우리가 이 GPU 수량을 운용하기 위한 전력도 없다는 식의 비아냥대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GPU 26만 장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순차적 공급을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이 AI 인프라 이것을 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 계획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저희 정부가 공급받기로 한 GPU를 수용하기 위해서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는 작업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이런 마중물 역할에 화답을 해서 민간에서도 AI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AI데이터센터를 조금 더 순조롭게 민간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특별법도 지금 한민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제정 작업 중에 있고요. 또 말씀하신 전력 문제에 대해서도 26만 장 정도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전력 수급 계획하에서 충당 가능한 범위입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GPU 확보에 따른 전력 문제에 대해서 기후에너지부와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차관님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분들께서도 전력이 없다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국제 협력 성과를 가지고 도둑질이라고 하지를 않나. 아니, 이게 무슨 단순 정쟁할 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 신뢰를 운운하는 건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잘되는 것을 질투한다 그래 가지고서 마치 이런 국익을 포기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의 발언들은 저는 용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도 앞으로는 이런 비판, 실제 근거가 있는 과학적 비판은 잘 수용해서 개선을 하되 국익을 해치는 이런 무분별한 비과학적인, 말 그대로 가짜뉴스 식의 공격들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국민들께 알려 드린다는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공식 발표를 통해 가지고 바로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울산 울주군 출신 국회의원 서범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좀 허탈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국무위원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아껴 보려고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심한 말까지 하면서도, 이런 논쟁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범죄자 일당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성남시민 내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7800억 원, 지금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지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적반하장 식으로 이걸 비난하는 사람을 더욱더 공격하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것 정치적인 논쟁은 차치하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

○서범수 위원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 차치하고, 경제적인 논점으로, 78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중간에 붕 떠서 범죄자 일당에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단 재정 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출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고요. 세입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확보가 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다른 또 앞에 선행절차가 있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선행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관련해서 의혹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서범수 위원 그 내용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는 계실 거고.

○금융위원장 이익원 그게 분식회계도 있었고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2010년인가요, 2010년에 아마 금감원에서 그것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서범수 위원 그 대주주가 아마 11년 징역이 확정이 됐고.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서범수 위원 그와 비슷한 시기에 민 특검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 매도를 했고 증권사 직원에게 정보를 준 사람은 네오세미테크의 전 감사…… 공교롭게도 이 민 특검 그다음 증권사 직원, 전 감사 모두 대전고등학교 동기인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지금 금융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 때 지금 현재는 조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중

결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종결된 사안입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지금 그래서 다시 또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서범수 위원** 그 당시에 아마 고발되고 통보된 사람이 13명인데 1명만 기소가 되고 12명은 무혐의 처리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13명 중에 민중기 특검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다면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 들어가서……

○**서범수 위원** 검찰과 경찰에 맡기실 게 아니고 금융위나 금융감독당국에서 직접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게 역할 분담이 있어서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거기에 자료 요구라든지 과거 기록 부분 같은 경우 아마 협조 요청이 있으면 그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춘석 의원님 것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것도, 그러니까 체계가 저희들이 인지해서 먼저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는 게 있고요. 그런 단계를 받아서 검찰에서 하다가 또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통 역할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왜 검찰과 경찰에만 맡겨 놓느냐는 거지요, 금융당국에서 먼저 조사를 해도 되잖아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보통 그쪽으로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범수 위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पै가망신당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 주겠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पै가망신 1호, 2호 해 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신가는 아실 것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서범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금융당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재수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경찰에만 맡길 게 아니고.

○**금융위원장 이억원** 역할 분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합동 대응반을 해서 지금 몇 건을 계속해서 아주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엄중하게 어떻게 조치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잘 좀 조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후환경에너지차관님, 11월 5일 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몇 개소, 4개소 지정을 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그때 5개소 지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범수 위원 전남, 제주, 부산, 경기 아닌가요? 5개인가요? 경기, 부산, 제주, 전남.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아, 4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범수 위원 4개인데요. 그중에 당초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울산, 충남(서산), 경북(포항) 추가 논의 후에 재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왜 이 부분은 탈락이 되어서 재추가 심의하도록 되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분산법 취지에 사업계획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이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 다시 심사를 할 예정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그건 정확한 일자 는 나오지 않았고요. 아마 해당 지자체에서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좀 보완한 다음에 다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네 곳 모두 공통적으로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모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모델들이……

○서범수 위원 왜 그러면 보류된 세 곳,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LNG 열병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분산에너지법에 맞는 게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그거는,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저희 국정과제고, 사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것은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자꾸 위원회에 맡기시는데요 위원들 면면을 보시면, 이번에 다 바뀌셨지요, 세 분 빼고? 에너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세 분 빼고 다 바뀌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후환경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원전 전문가였던 정범진 교수, 정용훈 교수, 박주현 교수 등이 물러나게 되고 나머지 전부 탈원전 인사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의논이 되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위원님, 지금 저 위원님들이 대부분 탈원전 인사라는 건 좀 과하시고요.

○서범수 위원 탈원전이라는 건 좀 과하다 참시다, 기후환경 관련 전문가들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기후환경 전문가도 있고 에너지 전문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에너지위원회 사람을, 위원을 바꿔서 전체적인 정책을 정부에서 ‘우리는 노터치합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자꾸 뭔가 탈피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때도 논의 과정이 있었겠

습니다만 단순히 이게 뭐 재생에너지다, 아니다 이것만을 고려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에너지원 포함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요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202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들여서 한 1400억 규모로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을 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잡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은 재생에너지가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다른 전력원들도 적절히 믹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아예 탈원전으로 가는 겁니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지금 탈원전이라고 한 번도, 정부가 그렇게 탈원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서범수 위원 정부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탈원전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그게 아닌 척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이 바뀐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고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지만, 원전 같은 경우도 안전성이 담보된 경우에 원전을 적절히 섞어서 에너지믹스로 가지고 가겠다는 게 일관된 방침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믹스를 해서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전부 재생에너지 지역으로 특화사업을 지정한다는 게 맞습니까? 보이는 게 다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아니, 재생에너지 쪽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계획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에너지원만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말씀 그대로 에너지믹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만들 수 있도록 분산 좀 해 주십사,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당연히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고용노동부차관님, 장관님은 현장에 나가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울산화력발전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옆에 있던 4·6호기 발파작업을 해서 조금 전에 발파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안전을 최종 점검하고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해서 지금 아직 구조되지 못한 분들을 구조할 계획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지금 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끊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과연 그래서 처벌만이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처벌만이 능사냐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지난번에 저희가 9월 15일 날 산업안전 대책을 발표했는데 상당 부분 산업안전을 위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예방 지원사업을 강화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예방과 지원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야 될 규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저희가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지원과 교육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지금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너무 강 대 강, 강하게만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일단 작업 중지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느냐 하면 안전진단을 하려면 작업 중지를 시켜 놓고 안전진단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작업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해야 그게 실효성 있는 안전진단이나오는 거지 중지시켜 놓고 안전진단을 들어간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소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작업 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넓은 범위, 지금 작업 중지 관련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예를 들면 1만 평의 어떤 사업장이 있다고 치면 한 곳이라도 조그맣게 사고 나면 전체 작업 중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장에서 혹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다른 사업장에 있는 것도 전체 중지를 시킨다 이거지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휴직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70%를 받는다. 자기네들은 작업을 해서 100%를 받고 싶은데 70%밖에 못 갖고 간다.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작업 안 하면서 70%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작업 중지와 관련해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범위를 세밀하게 좀 구분을 짓는 게 안 맞겠느냐는 현장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작업 중지라는 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가 구호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고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부차관님 와 계시나요?

장관님이십니까, 차관님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 2차관입니다.

○**서범수 위원** 우리 지역에 UNIST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울산과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 학교가 15년도에 국립대학에서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문제는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출연 인건비가 180억이…… 저것 한번 보십시오. 15년에서 16년 정부출연금인 375억에서 193억, 180억이 빠져 버립니다.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패썹죄에 걸려서 그렇다, 이게. 국립대학에서 과기원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하는데, 그래서 저것과 관련해서 UNIST가 정부 지원 비율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 정부 지원 비율이 제일 낮다, 제일. 49.0%밖에 안 됩니다. KAIST가 55.9, GIST가 56.0, DGIST가 69.8. 이 부분을 늘상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가지고, 학교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인재들이, 좋은 교수를 고용을 하면 몇 년 못 견디고 다른 데로 다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국토부차관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대광위원장입니다.

○**서범수 위원** 대광위원장이십니까?

어제도 계속 부동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공급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정부나 우리 국토부에서는 수도권의 공급 대책 이야기만 하지 지방,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일절 이야기를 안 합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 지방 실정은 알고 계시지요? 수도권은 공급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거고 비수도권 지역은 분양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급이 너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는 언제쯤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그 시점은 제가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지금 현재 매주 장관께서 두 차례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서범수 위원** 점검만 하실 게 아니고 비수도권도 어느 정도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내 주셔야 된다,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치기 하시지 말고요 비수도권도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기재부장관님,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특정한 수치는 아니고요. 지금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함으로 해서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추는 쪽은 검토 가능하다 이런 애 기입니다.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우리 세수는 큰 타격을 입었고 또 향후 5년간 세수 결손만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중산층·서민들은 가계부채와 물가 부담으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 이고 청년세대는 지난 10년 동안 실질소득 증가율이 거의 1%대에 불과해 희망의 사다리가 끊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배당 활성화를 이야기 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초부자감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배당소득 30조 원 중에 상위 1%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10%가 약 91%를 가져갑니다. 이것을 1인당 평균 배당소득으로 보면 상위 0.1%가 7억 9500에 달하고 하위 50%는 1만 2000원에 불과합니 다. 다시 말해서 개미투자자나 소액투자자가 받는 소득이 아니라 극소수 자산가의 불로 소득에 해당됩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세율을 낮추면서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 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그러면 역대 정권마다 매번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장관님께 서 그 답변을 입증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되면 배당의 촉진 효과가 있 을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세소위에 서.....

○전종덕 위원 혹시 그런 근거나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그러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게 현실 작동 사례를 한번 보 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2024년 배당금으로 3530억 원을 받 았고 세금 납부 후에도 1943억 원을 실수령했습니다. 만약에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지

면 세후 배당금은 2910억 원으로 1000억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소액 주주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은 배당소득의 91%를 가져가는 상위 10%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될 뿐 배당 활성화나 소액 주주에게 낙수효과가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경제학자들도 배당과 주가의 상관관계 명확지 않다, 이것은 결국 초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축소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라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소득에는 최고 45%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종목당 50억 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큰 수익에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본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 체계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분리과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고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분리과세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은 조세정의와 응능부담의 원칙을 훼손하는 초부자감세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상향하거나 누진 구조를 강화해 초고소득자 세부담률을 합리화하고 자본·부동산 과세 체계를 통합해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코스피 4000선도 넘어섰고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혹시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지난번 결론이 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종덕 위원 어떤 토론회에서 조세실장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것은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저희들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종덕 위원 배당소득세율이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도 장관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상향하고 소득 과세 체계 통합

을 통해서 공정과세, 조세형평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돼야 한다는 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의향이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저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조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초부자감세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고 세수부족은 복지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건강보험법 108조의2, 건강증진법 부칙 2항에 따라 보험료 수입의 일반회계 14%, 기금 6% 해서 총 20%를 국고지원 해야 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종덕 위원** 건보재정 20% 국고지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기본적인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의무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국가들의 경우 대만은 36%, 일본은 39%, 프랑스는 55% 비율로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2026년도 국고지원 비율이 14.4%로 지난 윤석열 정부 십사점……

다시 하겠습니다.

2026년 국고지원 비율이 14.2%로 지난 윤석열 정부의 14.4%보다 더 적은 예산입니다.

PPT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법적 의무 미이행으로 부족분이 17조 61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건보재정 20% 국고지원 의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고지원율이 내년도에 한 14.2%로 좀 낮은 상황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1078억 원 정도 확대했으나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증액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국가장기재정 방향하고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어서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국고지원 의무를 당연히 이행하는 거고,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재정 상황만 보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건보재정 남용 문제인

데요.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비상진료 지원으로 월 1883억 원을 8개월 동안 총 1조 5000억입니다, 이 건보재정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 사용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임의 사용을 규제하고 민주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의료대란, 의료갈등 때 집행했던 거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 집행했다는 말씀 드리고.

○전종덕 위원 내역은 알고 있으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은 이제 심각 단계를 해제했기 때문에 기존으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남용이 되지 않게끔 지출 효율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건보재정이 26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향후 10년간 적자 누적액이 3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했다가 내년엔 1.48%가 올랐습니다. 이게 다 국민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많은 보험료,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보험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국가 의무 부여를 하지 않는 이 모순된 행정으로 인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20%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재정 효율화 방안과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다음도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병수당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누구나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로 채택된 상병수당의 본사업이 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유일한 국가지요.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시에 설계 기준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치고 시범사업 숫자도 너무 적고 홍보도 안 되어서 실효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윤석열 정부 때 사업 예산을 무려 75%를 삭감했습니다. ‘아프면 쉬세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법과 제도, 예산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26년 상병수당 예산이 49억입니다. 이것은 22년 초기 예산 146억보다 97억이 적습니다. 그래서 ILO 130호 상병급여 협약에 따르면 그 치료에 필요한 기준을 최소 52주 이상 보장하고 급여 수준도 이전 소득의 60%—계산을 하면 일평균 9만 1000원 정도 됩니다—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비해 약 5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병수당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혹시 계획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26년 예산은 지금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지속하는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27년부터 본사업 도입을 위해서 그간의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에 대한 우리나라형 모형을 만드는 걸 내년에 하고 도입 준비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형 설계하는 과정 중에 국제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정말 생계 걱정 없이 아파도 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꼭 상향해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27년 전면 도입은 가능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상병수당이 단순한 부가급여가 아니라 법정 급여 항목으로 명목화해서 제대로 상병수당 제도가 운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요.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아프면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법적 근거와 모형 설계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재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기재부차관님께서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보배가 되려면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도 인력도 기반도 모두 부족한 상태라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6년 예산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보니까, 첫째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방비 부담이 큼니다. 그리고 둘째, 전담 인력이 필요 인력 대비 68% 수준이고 인건비도 9급 1호봉 기준으로 수준이 낮고 이렇게 해서 돌봄의 질 하락이 우려됩니다. 26년 예산에 777억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거 전국 사업인데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비율도 그동안의 복지 사업 평균 보조율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큼데요. 이런 조건에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국비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검토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통합돌봄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결소위 과정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종덕 위원 전담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아예 없는 곳이 1500곳이나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 대비 32%, 읍면동 기준 대비 68% 수준이라 더 인력 확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래서 현재 기재부에서 기준 인건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기준 인건비뿐만 아니라 행안부 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기준 인력을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행안부가 지자체 수요를 받아서요 어느 정도 기준 인건

비에 반영할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거기에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2400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하는 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기존 인건비와 인건비 지원 두 가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인건비 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 또 인건비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전담 인력이 없는 곳 아까 1500곳 말씀드렸는데 전담 인력이 최소한 1명 이상은 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번에는 기재부장관님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비닐 한 장에 의지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두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바라는 30만 국민의 염원이 경찰 차벽에 막히기도 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벌써 8개월째인데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MBK는 투자 없이 자산 매각과 배당만 반복하고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감독하지 못했고 LBO 방식 매각 위험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감독 부재 속 투기 자본의 구조적 약탈입니다.

저는 MBK는 이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하고요 정부는 MBK의 사기적 금융거래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안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위원장입니다.

○전종덕 위원 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같은 경우는 검찰에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지금 조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신속하게 조치해서 빠르게 조사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재부장관님까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은 한 기업인의 일만이 아니라 일자리, 국내 유통 생태계, 납품 중소기업, 농산물 유통 등 우리 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

PPT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국민의 일자리 30만 개가 상실되고 입점업체, 납품업체,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큰 사회적 재난이자 공공경제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 때도 항공산업에 대해서 수백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구성과 공적자금 투입 등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 의향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금 정부도 홈플러스 사태에 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고 특히 납품업체라든지 또는 고용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 하면서 필요한 지원은 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업회생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M&A 이런 실사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 특히 금융위하고 저희들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회생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갑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정부 측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금융위원장님, 산업통상부장관님, 경제부총리님, 과기부총리님, 국세청장님 이렇게 다섯 분 질의할 거니까요. 다른 분들은 좀 편히 계셔도 되고요.

먼저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박민규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안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교보생명 등 금융사들로부터 선순위 대출을 받았고 랜턴그린에너지라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로부터는 후순위 대출을 받았습니다.

태안에너지는 대출금 차입 이후에 원리금 상환도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출약정서에 적힌 부채상환능력비율 이상으로 지금 현재 재무 상태도 좋고 60억 원의 부채상환적립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대출금 지급이 계약 위반으로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계약 위반 사유는 계약상 후순위 대출을 해 준 채권자가 태안에너지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그 채권자의 과실로…… 채권자가 매입 못 한 게 사유입니다. 매입을 못 한 사유는 올해 2월 당시 산업자원부의 주식취득 인가 거부 때문입니다. 즉 태안에너지라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선순위 대출금 지급이 계약 위반 상태로 중단된 겁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태안에너지는 후순위 채권자 주식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채권단에게 대출약정서상 주식취득 면제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채권단은 대출약정서 변경 조건으로 수수료를 4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잔여 대출금이 744억 원이니까 수수료율만 6%인데…… 금융위원장님, 대출약정서 변경 조건으로 이렇게 6% 상당의 수수료 45억을 요구하는 것 금융계에서 일반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서……

○박민규 위원 그렇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좀 과해 보이는데……

채권단은 태안에너지가 귀책사유가 있는 업체에게 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까지도 가로막고 공사비 지급용도 대출금 집행을 요청하자 주식취득 못 한 후순위 사채권자의 미지급 이자까지도 같이 지급하라는 강요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채권단의 법률자문 용역비조차도 태안에너지에 요구하는 등 국내 금융사들로 구성된 채권단의—제

가 보기에는—부당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단은 태안에너지에 대한 어떤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 헤지펀드사인 KKR에 대출채권 양수도 우선 협상권을 부여합니다. 현재 상황도 잘하고 조만간 대환대출로 채권 전액을 갚을 예정인 건실한 국내 태양광 기업을 흑자 부도시켜서 외국계 펀드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채권단의 행위들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소비자법 위반 행위가 커 보입니다.

이미 금감원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멸절한 태양광 기업—국내 최대 규모입니다—외국계 펀드에 헐값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파악해 조속히 조치하시고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말씀 주신 내용이 10월 말 질의하신 대로 금감원 민원으로 접수돼서 지금 금감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함께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매우 이례적인 것 같으니까요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서 국내 최대 태양광 펀드가 원리금을 잘 반환하고 있는데 해외 헤지펀드에 부당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 여부를.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박민규 위원** 다음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문신학 차관님 대신 나오셨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박민규 위원** 먼저 산업통상부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감사합니다.

○**박민규 위원** 사실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에서 기초 자료 이런 거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언론에는 산업통상부 많이 좀 스포트 받으셨어요, 기재부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기재부와 관계 부처들이 다 함께해서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박민규 위원** 차관님, 반도체·이차전지 이런 국가핵심전략산업 중요성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미래기술 확보하고 국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해서 글로벌 초격차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입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차 추경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기준의 일관성 부족, 예산 규모 한계 등이 지적됐는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보니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민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경제부총리께 좀 여쭙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차

관님이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기업 지원, 아무래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업 지원의 양대 축인 세제 지원과 인프라 지원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의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대규모 투자 이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지원 효과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율이 높아졌거나 투자액 증가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커지더라도 최저한세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적용되면 공제액의 상당 부분이 이월돼서 결국 투자 대비 실질적 지원 효과가 바로 다가오지 않는 지원 제한 점도 있습니다.

인프라 지원의 경우에도 입법 취지와 달리 정부 고시에서 지원을 단년도, 투자 계획은 다년도 사업이지만 단년도에 한정하고 법령과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지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공정인 반도체 팹(fab) 구축 비용 20조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경우 10.8조 원 54%, EU의 경우는 6조 원 30%, 미국의 경우에는 5.5조 원 27.5%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그런데 우리 정부 지원은 현재 1.05조 원, 5.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쟁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을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국의 정책을 검토하여서 우리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부총리님,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 예산심의에서 제기된 인프라 지원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예산의 편성 및 지원을 할 때 이러한 첨단산업,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도 검토해서 법과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의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진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화단지에 대해서 국고 지원 비율도 상향하고 지원 한도도 늘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정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경쟁력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한정된 재원을 곳곳에 잘 분배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고생이 많은데 또 이렇게 초첨단 산업의 대규모 자본 투자에 대한 걸 고려해 주십사, 그리고 기준이 좀 더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민규 위원 다음은 과기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쟁으로 좀 바뀌고 있지요? 결국 인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R&D 투자 규모가 세계 5위권이지만 현재 이공계 인재 육성 환경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27년, 내후년부터는 석박사 인력이 급감하고 이공계 기피와 의료 분야의 쏠림현상 그리고 우수 인재들의 해외 유출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한국공학한림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업계·학계 응답자의 무려 80%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국가과학자 제도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인을 어떻게 대우할지 보여 주는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세계 수준의 과학자를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연구자로 예우하고 특히 정책자문과 전략기술 설계, 국가제도 수립에 참여하겠다는 제도로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8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안되고 정부도 취지에 공감해서 이번에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다만 시기가 8월에 결정된 거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발표돼서 국가과학자 제도 추진에 대한 예산은 현재 정부안에 없습니다. 이 좋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싶은데 의견 어떠신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 국가과학자는 영예성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학자 20명 그리고 젊은 국가과학자 포함해서 한 수백 명 규모로 운영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기존 제도랑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예산 투입이 큰 건 아닌데 다만 과학기술계의 정책 수립과 과학기술계에 좀 더 유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관련돼서 저희 예결위하고도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다음 임광현 국세청장님, 제가 기재위에서 많이 말했던 내용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국세청 송무 직원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점 제가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보니까 조세소송이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해만 1620건이고 특히 소송의 90% 이상을 외부 대리인 선임 없이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국세청 직원들이 세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업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조세소송에서 이긴 직원들에게 승소장려금 지급하고 있는데 참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보이는데 2005년 이후 20년째 승소사례금 예산이 5억 80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장 임광현** 맞습니다.

○**박민규 위원**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 직원들이 소송 이겨도 승소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결뿐만 아니라. 특히 23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24년에는 승소장려금의 36%인 3억 4000만 원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고 올해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이 부족할까 봐 지급 대상의 70% 수준만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연간 수천억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등 국세청 송무 직원들에게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될 텐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연도별 조세소송 규모가 무려 16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

세청에서는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특채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 직원들이 외부로 다시 나가는 인재 유출 현상이 심각합니다.

반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승소포상금 예산은 10년 이상 5억 8000만 원으로 계속 동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액 소송 같은 경우에는 1건만 이겨도 국세 수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변호사나 내부 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포상금을 좀 올려 주시면 저희가 국가재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많은 예결위원들께서 같이 들으셨을 텐데요.

다음 화면 좀 봐 주시면, 아까 조세소송 대리인 선임 예산 이것조차도 우리가 국세청에서 변호사들을 특채해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소송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부족해서 나가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더 어려운 점은 소송대리인 선임 예산 자체도 82억 원에서 올해는 69억으로 좀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이어서 구윤철 부총리님께도 계속 어려운 예산 다 재정했는데 제가 또 증액을 얘기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보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9월 국세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도 인정받았고 그래서 그 결과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게 국세청 송무 직원들의 노력 덕분인데요.

부총리님, 예산의 한정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한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계속 부총리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산업통상부 얘기할 때 얘기드렸지만 정말 관세협상 많은 부처들이 고생했지만 저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별로 돋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준 기획재정부 직원 전체, 특히 부총리님이나 차관님들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 수립도 결국은 국토부랑 금융위원회랑 같이했지만 기본적인 통계나 데이터 그리고 기본적인 정책 조정 과정에서 과거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를 했던 노하우와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윤철 부총리께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기획재정부가 조금 더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간단하게 자본, 노동 그다음에 기술혁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또 자본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린 이것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가는 과정들을 차분히 하고 있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기술혁신 또한 국가 R&D를 정상화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잘 잡은 다음에 산학 협력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제성장률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이 심각하고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고요 또 우리들이 부담해야 될 65세 이상 고령,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했고요. 이런 상태들에서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여간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제가 정책 토론회에 참가했을 때 ‘우리 저출생 어떻게 막을 거냐?’ 하면 기재부 고위 관료들은 저에게 이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기가 쉽지 않다. 예산 대비 효과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도리어 생산성, 특히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기획재정부가 향후 이재명 정부 4.5년 남은 이 상태에서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그다음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하여튼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출생·고령화 상황하에서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초중고·대학 교육을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아마 교육부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기부총리 중심으로 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거나 또 AI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인다면 노동생산성이 굉장히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인력이라든지 또 고령 인력들도 제가 민간에 있을 때 보니까 지혜를, 벤처 창업하는 젊은 청년들하고 연결해 주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직업훈련이라든지 적응 훈련하고 AI대혁신교육이라든지 기술 쪽의 이해를 높여 가지고 총체적으로 대응해야지만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동부 그다음에 과기부, 교육부 등 해서 그런 쪽에 전략을 수립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응원드리고 함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제가 질의를 여러 장관님들한테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부총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큼니다. 제 지역구가 인천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 주셔서 같이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배준영 위원 차관님이 계십니까?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입주 사업체의 47%가 소재하고 연간 투자액이 63% 그리고 전체 수출액의 73%가 있는데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화가 있습니다. 강화는 사실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선택이 돼서 식량안보라든지 에너지, 관광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취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부분 쪽에 대해서 신청이 이루어지면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에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알뜰주유소 아시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배준영 위원 전체 주유소가 1만 725개인데 알뜰주유소가 1305개입니다. 그런데 알뜰주유소를 하는 이유는 다량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공동구매한 만큼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저희 영종 같은 경우에는 알뜰주유소가 꼭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다리를 건너서 물으로 가려면 30분 이상 걸리고요 100원 이상 비싸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을 위해서 알뜰주유소를 공모하고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담당인 석유공사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서 타기팅해서 알뜰주유소 전환할 데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배준영 위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님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배준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인 굴업도라는 작은 섬을 다녀왔는데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정전이 여러 번 되고 그래서 펜션에 불이 꺼지고 그리고 냉장고의 음식이 다 상하고. 그런데 이게 한국전력공사에서 한전MCS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도서지역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적은 운영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가 나가 버렸는데, 아우성인데 그것을 웅진군의 예산으로 설비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된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가 독립돼 있는 섬인 모양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 고르게 잘살고 남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지역에서나 기본적인 권리로서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굴엽도, 백아도, 지도 이런 섬들이 정전으로,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좀 잘 살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웅진군이나 이런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예산으로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게 한전과 정부가 그리드가 독립되어 있는 섬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갯벌 해루질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여기 해경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나와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얼마 전에 영흥에서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대응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부장관님, 그래서 이게 해경 관할서 사고 은폐 의혹이니 뭐니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해루질을, 물론 관광이라는 목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사고가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출입 통제 장소도 늘려 가고 있고, 이 통계를 보시면 되겠지만 5년간 갯벌·갯바위 고립 사고가 983건이고요 사망자가 115명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하고 애꿎은 해경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이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저희들이 해경하고 이런 사고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해경하고 사고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해루질 자체를 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그걸 하라고 하는데 이 위험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해수부에서 마련해 달라는 제가 그런 부탁을 말씀드린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도를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양수산부 관련된 시설들이 전부 부산이나 이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검사를 받으러 전부 남쪽으로 부산까지 4시간 차 타고 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 당국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 가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부총리님, 저것 보십시오. 해마다 1만 명이 내려가요. 1만 명이 내려가는데 이것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 수도권의 적당한 데 한 군데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연안어선 출입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접경지역은 플러스마이너스 30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접경지역이지만 우리 테리토리(territory) 안에 있는 밑의 쪽은 24시간 365일 다 해도 되는데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국방부하고 해수부랑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일출·일몰 플러스마이너스 30분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저도 어촌지역이라서 면밀히 제가 좀 얘기를 들어 보니까 30분이면요 엄청 빨리 가도 그물을 풀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에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물을 풀어 가지고 날이 밝을 때 어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미니멈 시간이 1시간이 거든요,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으로 해 주시면 어로 소득 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저희들이 어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어민들의 의견은 그겁니다. 그런데 국방부하고 좀 협의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어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국방부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가보조항로 관련해서 해수부장관님께도 좀 여쭙보겠는데요. 저희가 나래호라고 있습니다. 진리-울도 항로인데 이게 국가보조항로로 민간 선사와 계약해서 하는 건데, 저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인천항에서 덕적 본도로 바로 가는 게 있고 나래호라고 그래서 자도들만 도는 배가 있는데 해누리호가 다니다 보니까 나래호를 올해 말부터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덕적도가 본도인데, 저 PPT 보시면 알겠지만 굴업도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건진료소도 없고 행정지원센터도 없고 우체국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나래호가 끊기면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 당국에 말씀을 하셔서 이게 국가보조항로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좀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제가 조금 전에 국토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지난 이십몇 년간 대규모 큰 사고가 안 났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30km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31km, 38km 해 가지고 인하대병원이라든지 길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의 나리타공항이라든지 히드로공항이라든지 기타 공항은 6~7km 정도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님이 주관하시는 대규모 대테러 훈련이라든지 감염병 관련된 사태라든지 차를 타고 30km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6000건의 긴급환자가 있었는데 KTAS 1:2라고 그래 가지고 그 게 15%가 넘고요. 올 상반기에는 1200건의 응급환자가 실려 나갔는데 그중에 24% 정도가 KTAS 1:2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은경 장관님께서 장관으로 계실 때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 재난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장관님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관할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바꾸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하든지 하는 건 있는데 근원적인 책임은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좀 논의를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보여 드리는 것은 한국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기는 하지만 법을 바꿔 가지고 저렇게 병원도 만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항공사도 필요하면 그런 대규모 재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병원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더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나면…… 제가 분명히 이 자리 예결위 회의장에서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꺼번에 드리는데 한번 장관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규모 대량 환자 발생이나 테러 또는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해했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 주변의 인구나 또 운영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루고루 검토를 해야 돼서 다른 나라의 사례나 아니면 인근의 의료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장관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셨어요?

○배준영 위원 예. 그런데 다행히 지난 5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관님은 보건·안전에 대해서는 진심이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재난에 대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좀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이나 분석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이라도 해서 좀 자료를 모으고 분석한 그런 기본 자료부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기존에 검토가 된 게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단 방향이 서면 그 방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요. 현재는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다음번에 또 여쭙볼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산업통상부차관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영종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건너가다 보시면 끝자락에 삼각주 모양으로 땅이 있는데 그게 110만 평이나 됩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배준영 위원 영종 유보지 110만 평입니다. 수도권에 그렇게 110만 평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싸라기 땅인데 그게 개발이 안 된 이유는 공항 근처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LH가 그것을 샀는데 적정하게 처분을 못하고 개발을 못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도와주셔서 이제 바이오특화단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이오특화단지도 하려 그래도 여러 가지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인천시나 저의 의견은 이게 국가산단으로 지정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도권이긴 하지만 용인반도체단지 역시 산업통상부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통상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후에도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국토부 누구 나오셨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대광위원장입니다.

○배준영 위원 대광위원장님이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저 땅이 70%가 LH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하면 LH가 지금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해쳐 나가야 될 게 많은데 그러려면 저 땅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이오특화단지로 지금 선정됐지만 국가산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을 또 지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권한이거든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국가산단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LH에도 판로가 생기고 인천에도 판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사회적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이 청년입니다. 청년만을 위한 정책 설계나 예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효과가 입증된 청년 정책이 있다면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청년미래적금은 과거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을 계승해서 청년들이 종잣돈을 모으고 금융 습관을 만들게 하겠다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납입금의 12% 적립이 가능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이 현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몇 년씩 묵묵히 일하고 있는 기존 재직 청년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신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상을 신규 취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진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소기업부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정책 부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윤석열 정권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면서 장기근속을 유도한 정말 성공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공제 가입 청년재직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일반 청년재직자의 근속기간보다 2년 4개월 정도 더 깁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인력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이게 중소기업가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도 일몰 이후에 이것을 재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정부 매칭이 없는 우대 저축공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신규 취업자에게는 금융위의 정책이, 기존 재직자에게는 중기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청년이 시작의 기회와 지속의 희망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정책은 이미 중기부가 추진해 온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도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면 됩니다. 장기근속 청년에게 명확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이미 제가 한번 질의를 했을 때 기재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부처 간 협의를 좀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진욱 위원 이어서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멈춰 세운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 만족도와 사업지속 희망도가 아주 높았던 대표적인 청년 체감 정책이었는데요. 사업 종료 직전인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에서 전국적으로 약 5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5000명에 가까운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안 없이 이 사업을 중단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산단청년통합바우처로 확장한 후 후속 설계안까지 마련돼 있었던, 연장 의지가 아주 높았던 정책입니다. 사업의 발전적 개편 단계에 있었던 제도를 윤석열이 끊어 버린 셈입니다.

당시 조사에서 청년들이 바랐던 대로 산단 근로 청년의 교통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화, 복지, 교육, 주거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미래적금, 내일채움공제 시즌2, 산단청년성장바우처 이 축이 연결될 때 비로소 청년은 내일을 준비할 자산을 쌓고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일터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진욱 위원 송미령 장관님 지금 안 계시는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차관입니다.

○정진욱 위원 차관님, 저는 오늘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고 농민 소득을 높이면서 탄소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농 태양광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림부 안에서 영농 태양광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있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현장에서는 약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용어보다는 농업을 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영농 태양광으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태양광 중심이 아니고 영농과 태양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3~61%로 정했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5GW에서 78GW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성환 장관님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영농 태양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농 태양광은 사전 준비만 잘하면 1GW의 설비를 농한기 몇 달 사이에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데, 농지정리를 우리가 그렇게 해내지 않았습니까? 농한기 잠깐 사이에 그 농지정리를 다 끝냈거든요.

영농 태양광의 대전제는 영농 태양광이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영농 태양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전국의 농지를 훼손함이 없이, 난개발 없이 질서정연하게 설치되기 위해서는 저는 주관 부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농 태양광의 전체적 지휘는 국무총리께서 하시고 주무부서는 농민, 농업, 농촌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동의하고요. 다만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부도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산업부라든가 또는 기후에너지부가 함께 추진하고 또 행안부도, 지자체가 또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함께 추진하는 추진단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정부가 즉시 곳곳에 영농 태양광 시범단지를 지정해서 최소비용의 최적의 설비를 찾아내고 실제 수익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전국에 실시하는 준비를 26년 안에 모두 같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농 태양광은 농민과 농촌에 현재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배분하고 또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저항도 있겠지만 오히려 농림축산부가 지금 달려들어야 할 일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어떤 획기적 전기로서 영농 태양광을 바라보고 새로운 개발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농촌에 돌릴 것인지 또 농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계에 지금 전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영농 태양광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길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산업부차관님, 문신학 차관님 계시네요.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인공지능은 국가 제조 경쟁력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근거한 협업지원센터, 현장에서는 그걸 디지털 전환 DX, AI 전환 AX 해서 DX·AX 혁신센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충청, 경상권에는 있는데요 광주·전라권에는 현재까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기업들이 AI 데이터 기반 전환을 추진하려고 해도 컨설팅이라든가 또 인력 양성 지원을 받을 전용창구가 없는 실정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특정 지역을 배제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확대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11억 수준으로는 현실적으로 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도 넓히고 예산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라권에 DX·AX 혁신센터 신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설팅 및 현장형 AI 인력 재교육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20억 원의 증액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사실은 가능하면 예산의 구체적 수치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AX·DX 혁신센터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예산의 내역을 꼼꼼히 보니까 예산을 늘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구윤철 장관님,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김운덕 장관님 안 계시고 차관님 계십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저는 대광위원장입니다.

○**정진욱 위원** 마침 잘 나오셨습니다. 제 지역구가 광주광역시 남구인데요. 광주 남구에 오랜 숙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일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지역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해소하는 사업이 있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혼잡도로라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래서 제 지역 진월동 서문대로에서 봉선동 대화아파트 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PPT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봉선로라고 돼 있는 곳의 배후지가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가장 밀집돼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출발해서 서문대로 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특히 나주 혁신도시라든가 전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 지역구 남구에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전남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도로, 목포까지 가는 국도 1호선입니다. 그런데 봉선로를 통해서 백운광장 오거리를 거쳐서 서문대로로 빠지면 광주의 거의 모든 차들이 저 백운광장 오거리를 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광주도심의 전형적인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그런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한 500m 가는 데 20분 걸리고요. 그리고 다시 서문대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데 1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2021년부터 터널 사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좀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하고, 이번에 하려고 보니까 벌써 비용이라든가 건설비가 늘어나서 한 300억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 774억인데 만약에 이번에 못 하고 또다시 추진하게 되면 아마 1000억이 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라든가 실시 계획을 이전에 몇 차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해서 어떤 실시 계획에 보완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선정이 원래 연말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2월에 이런 대도시권 교통체증 도로에 대한 사업 선정이 되고 그게 그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사업 선정이 좀 늦어지지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목표는 금년 말이고요. 한두 달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지금 아마 추진되는 경과로 보면 거의 한 2월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에 기본 계획이나 실시 계획 예산이 못 들어가고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결국 이제 추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자칫 추경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총리님께서 이걸 부대의견을 붙여서 이번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2월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걸 그대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 주셨으면 하는데, 웃으신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어쨌거나 위원님, 저희들이 소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제가 억지를 쓰는 건 아니고요. 부대의견을 붙여서 다음에 사업을 하는 이런 방식은 이전에도 항상 있어 왔고 최근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총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신학 차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사실은 자율주행차를 뛰어넘는 이후 AI 시대에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이다, 매출액이 가장 큰 분야가 될 것이다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지컬AI 쪽에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데 정부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휴머노이드 생산이라든가 또 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은 사실은 아직까지 좀 미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문 차관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가전 또 광산업 같은 기계·센서·부품 생태계 기반이 지금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가AI데이터센터 등의 AI 연구 인프라가 있어서 그걸 모두 갖추고 있는 거의 유일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점을 활용해서 피지컬AI 기반 휴머노이드 제조 혁신센터를 구축한다면 휴머노이드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도 선도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광주의 휴머노이드 시험 생산 및 품질 평가 인프라 구축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광주를 휴머노이드 생산 허브 및 기술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 차관님 견해 짧게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말씀해 주시면 또는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기부장관님 안 계시고 노용석 차관님 그리고 또 지식재산처 차장님……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예, 차장 나왔습니다.

○정진욱 위원 차장님 계시네요.

함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고 피해자는 끝내 폐업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코오롱 그룹의 자회사 코오롱베니트의 기술탈취 사건입니다.

중소기업 솔컴인포컴스는 2011년 코오롱베니트로부터 한국거래소에 납품할 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 미들웨어 개발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코오롱 측이 돌연 계약을 해지하더니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기업의 소스코드를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솔컴인포컴스에서 도용한 것이 쓰여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장물로 대한민국의 거래소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판에서는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일부 침해만 인정돼서 배상금을 고작 2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소송은 8년이 걸렸고 그사이에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차관님, 대기업은 기술을 베끼고 중소기업은 증거를 못 찾아서 집니다. 저도 지난 8월에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서 현장조사, 자료열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해액 산정을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담은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술탈취 분쟁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 대응하려고 해도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처 차장님,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이런 사업이 있지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인데요. 지역 중소기업들의 반응과 수요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예, 지금 현재 올해도 3분기에 사업이 마감됐습니다.

○정진욱 위원 3분기에 조기 마감됐고, 내년도에는 지방은 수요가 커져서 71.9억 원인데 국비 정부안은 42억 원입니다. 국비 증액 매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시 부총리님께 또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드시 이 사업이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전처럼 대기업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매칭을 해 주시면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각별히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부산 사상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윤철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님하고 구윤철 부총리님, 시간이 허락하면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띄우려고 했더니 영상이 안 돼서……

전재수 장관님, 해양수산부를 맡으셔서 가지고 참 고생 많으신데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좋은 정책이라든지 정책의 연속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2023년 7월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법을 추진했어요. 거기에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외항선과 동일하게 내항선박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현재 내항선원은 외항선원보다 고령화로 인해서 선원 부족 사태가 나잖아요. 장관님이나 저나 부산이 지역구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2023년 7월 달 이후로 외항선원들의 비과세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외항선을 타는 우리나라 선원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러 근로조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항선원에 대해서도 저희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게 고령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승선수당을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외항선원 수준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원들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해수부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4월 달에 조세지출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선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원, 그러니까 해기사 포함입니다. 이것을 제한 없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항은 쿼터제로 해 봤어요. 12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선원 승선은 가능한데 해기사 고용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원은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래서…… 내항선원이나 외항선원이나 동일한 선원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내항선원은 짧은 항해시간이고 또 외항은 물론 업무 강도 이런 면에서 근무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구윤철 부총리님, 방금 해양수산부장관님 이야기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대식 위원** 2013년에 장기간 해외선박 근무 등 근무여건 열악과 또 2024년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이유로 외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외항선원의 비과세 확대가 선원의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걸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대식 위원** 또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인데 내항선원에 대해서만 이게 빠져 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그런 의견서가 전달되고 이러면 이것 적극적으로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또 해수부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령화되면서 내항선원의 선원 구하기 어렵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도 고민이 많은 이유가 국내는 사실은 동일하게 비슷하게, 여기 해 주면 또 다른 데도 ‘나도 안 해 주냐’ 하는 이런 게 사실은 고민이고요. 어쨌거나 이쪽은 저희들이 세법소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국가가 위기사태 때 내항선원은 언제든지 동원이 될 수 있는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대식 위원** 그래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또 이공계 인력의 발명 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지금 상향을 했습니다. 유독 내항선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매년 6월 둘째 주, 셋째 주입니까? 금요일은 선원의 날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5대양 6대주에 떠 있는 선박의 70%, 80%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이고 선원강국이고 해양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수적인 이러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 소득세법 개선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대식 위원 세계 196개 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각국 문화에 관계되는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올해 APEC 우리가 훌륭하게 치렀잖아요. 연타석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외교 역량과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런 유네스코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난 16일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잘못했는지 기재부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행사를 준비하는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어요. 제로예요, 제로. 이것 왜 그렇습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잘못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절차, 협의 이런 걸 거쳤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연말까지, 내년에 하려고 하면 지금 연구용역이라든지 실사단 대응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필수요건, 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 가지고 가는데 제로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제행사 같으면 국제행사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절차도 있는데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꼭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내년 4월에 유네스코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에서는 이 국제행사에 추경예산 5억 2000만 원을 스스로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8억 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에서는 움직임이 발 빠른데 중앙부처에서는 전혀 안 돼 있어요. 내년 예산 178억 원이 반영했다고 해서 올해 준비 이것을 확보를 하나도 안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부총리님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시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대식 위원 이 유네스코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게, 세계 각국보다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부담금도 있고 유네스코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

는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톱10, 산업화·민주화를 거치면서 성공의 역사를 이룩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됐으면 국제적인 행사는 세계 속의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세계 속에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께서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이 예산이지요?

○김대식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게 지금 178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뭐 부족한 게 더 있으신 모양이네요?

○김대식 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게 준비금 자체고 올해 무슨 추경이고 뭐고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제로로 지금 돼 있더라고, 국가유산청에 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게 신규로 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178억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 정부 예산이, 지금 이게 국가행사로 해 가지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부 예산이 제로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178억 5000만 원……

○김대식 위원 그래서 178억은 내년도 예산에 꼭 포함시켜서 국제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돼서 올 APEC과 동시에…… 세계 각국에 나가 보면, 우리 부총리님도 많이 나가 보시지만 한류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기회를 저는 과감하게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대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 사망 원인에 따르면 부산은 주요 질환 사망률에서 전국 최악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장질환 사망자 35.6명, 10만 명당입니다, 전국 1위. 뇌혈관질환 사망자 22.4명, 전국 2위. 암 사망률 85.9명, 전국 3위. 이거 왜 부산이 이럴까요?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이것을 진단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만성질환은 좀 복합적이어서요. 일단은 건강 행태나 아니면 검진이나 의료 이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작동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 부산 문제는 이러한 의료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공공의료 핵심 축인 부산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것 부산

시에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사태를 겪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병상 가동률은 38.9%에 불과합니다. 의사 충원율 74% 그리고 연간 적자 규모가 179억으로 35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이게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이후에 아직 경영 정상화가 안 돼서 연간 한 15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운영비도 한 6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병원의 자구노력 이게 다 합쳐져야만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 갈등 때문에 또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고 인건비가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인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의 병원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전체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이러면 결국 이게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거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립, 시립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 물론 코로나 때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환자들이 유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컸다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대식 위원 이것을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들 종합적으로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심사를 하든지 원천적으로 조사를 해 보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저희 국정과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게 국정과제여서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공립,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포함해서 지원·육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산의 근황이 가뜰이나 부산시가 돈도 없는데 의료원에다가 174억 출연금을 또 지원할 정도인데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부산대학하고 통폐합을 해 가지고 아주 건실하게 좀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든 그런 것을 좀 지적했어요, 지방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장관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그냥 이게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내년에 공공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17개 시도의 세부적인 그런 상황까지를 구체화시키기는 어려워서 지방정부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료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이것 국가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빚내서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개의 부처가 100조 이상을 쓰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아십니까? 그렇지요, 100조 이상 쓰고 있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137조……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처가, 이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주고 나면 다시 거두어들 이기가 힘들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거대 한 부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야 돼요.

미래에 점점 인구는 줄어들어 가고 앞으로 청소년들 또 청년세대들이 다 갚아야 될 빚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다고 평평 쓰고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그래도 병원은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는 우리가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복지부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해수부장관님, 지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완전히 이전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12월 31일까지 원샷으로 완벽하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김대식 위원 완전하게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부산으로 내려가면 주거 문제 이런 것은 별문제 없습 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지금 중앙정부 차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대책에 만전의 준비를 다 끝냈고 현재 부족한 부분들 좀 있 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전하기 전에 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산의 동구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구의 오피스텔 값이 보통 50만 원, 80만 원씩 이렇게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부 하위직부터 보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되는데 상위급에 있는 분들 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고 생각을 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러니까 가족 관사도 있고 개인 관사도 있는데, 거기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만 내려오게 되면 점수가 좀 작아 가지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내려오게 되면 가점이 주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부족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전 전까지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 위원 공직자들이 부산까지 내려오시니까 그런 부분은 장관님이 부산에 대해

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만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잘 좀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의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경기 오산의 차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APEC 때 AI 이니셔티브를 포함해서 한국의 AI 전략들이 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컨센서스를 맺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직은 정부가 시작된 지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이 AI가 만드는 큰 전환, 글로벌 전환 앞에서 한국이 그 어떤 때보다 미래를 먼저 읽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국 국내 정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를 같이 구축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은 아마, 한국은 아직까지도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자본과 데이터 그리고 기술에 대한 초격차가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본과 데이터의 초격차는 사실 2024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AI 투자는 한국의 한 90배 정도 되고 그리고 인구 관련해서도 한국의 5200만 인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사실 중국의 14억 인구나 아니면 기존에 미국계 기업들이 가졌던 그 많은 데이터량에는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가진 글로벌 AI 전략들이 지금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선 자원 조달이 문제였으니까 자본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초기에 잘 구성이 된 것 같고요. 블랙록을 비롯해서 여러 글로벌 자본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 자본의 흐름들을 만들어 냈던 것도 주요했고 몇몇 기술 쪽의 빅테크 기업들과 한국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APEC을 계기로 저는 한국이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주도 국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센터, 아태 AI센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컨센서스가 한국에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이 AI 거버넌스 센터, 협력체가 지향하는 부분들이나 이 부분들이 사실 아시아·태평양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의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우리가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아·태평양 AI센터가 다자기구 기반의 글로벌 협력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논의 중입니까, 아니면 이제 논의가 어느 정도 완결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시아·태평양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측면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데이터도 사실은 그동안에 영어 중심의 데이터에 많이 의존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쨌든 양질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그 중심으로 AI 학습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체

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초석을 다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지호 위원 부총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데이터 같은 구조 혹은 투자 같은 게 국내에 있는 자원과 국내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하면 어쨌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3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워낙 내수시장이나 국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국내의 동원할 수 있는 자본들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데이터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국가의 데이터들과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AI산업 생태계가 한국을 넘어서 적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민간과 공공기관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정부가 가진 AI 기본사회라는 논의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의료랑 교육 혹은 다른 기타 필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AI로 강화시키는 게 한쪽이고 다른 쪽으로 산업적으로 풀어 보면 3차 산업에 대한 AI 전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라는 어떤 프런티어 모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으로 치면 브레인을 만드는 데 너무 치중한 나머지 손발이 될 수 있는 생태계는 구성해 놓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조 강국으로서 처음으로 나간 게 제조AI라는 부분이기 는 하지만 실제 한국의 GDP에서 제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하지만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8%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3차 산업의 비중이 전체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 AI 이전의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인간 지능에 기반한 시스템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3차 서비스 시장, 필수 공공 사회서비스의 부분들이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니즈는 한국 같은 국가들보다 개발도상국 혹은 중진국에서 훨씬 더 격하게 느끼고 있고 그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국가의 주도성, 공공성을 유지한 채 시스템 전환들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민주화된 국가고, 우리는 어디를 식민지로 만들거나 위협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사회 안보 영역에 가까운 의료나 아니면 금융, 복지, 재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AI로 시스템 전환들을 하게 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민간기업에 의존하기도 어렵고 아직은 중국 같은 국가는 굉장히 위협적이라서 한국이 나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AI 기본사회,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AI 기본사회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3차 산업의 AI 전환 과정을 우리가 이끌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산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료시장만, 그것도 미중중 의료시장인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장만 2032년경에 2경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국가도 어떤 기업도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AI 전략이 고식적으로 다른 데서 하고 있던 특정 산업 영역에 집중할 게 아니고 불과 5년 안에 올 이 전환들, 사회에 대한 전환들을 우리 산업동력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총리님께서 AI 관련된 주무부처로서 다른 부처와 협력하실 때 하나는 여러 부처에,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처가 맡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AI 전환이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AI의 전환이 다음 5년간 그리고 다음 10년간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그리고 복지시스템에 대한 AI 전환을 다음 5년, 10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그리고 고용 부분에 대해서 AI가 받는 충격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는 AI 주무 부처로서 다른 부처들이랑 반드시 협의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은 너무나 지엽적입니다. 이 정도의 지엽적인 예산들의 프로젝트들은 지금 주요 선진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서 나갈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글로벌 사회시스템의 전환들을 산업동력으로 삼을 겁니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혹은 빠르면 2년 정도 앞선 모델들을 우리가 먼저 레퍼런스 모델로 만들고 그 과정을 APEC과 같은 혹은 다른 식의 다자간 협의체 혹은 양자 간 협력체계 안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시장을 열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에 일단 계획된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도 여쭙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얘기인데, 저는 보건복지부나 몇 개 주요한 AI 전환들을 먼저 맞이하게 되는 부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AI 전환들은 기존에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사람 지능에 기반한 시스템을 전환시켜 나갈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 공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쓰고 있고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지방 필수의료, 인텔리전스가 모자라는 거지요. 헬스케어 쪽 인텔리전스가 모자라는 것을 의대생을 늘려서 15년 뒤에 이 의대생이 나왔을 때 그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쪽은 의사지만 한쪽은 AI를 하는 입장에서 10~15년 정도 기간을 두고 보면 반드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Artificial Intelligence)가 휴먼 인텔리전스가 메우는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공백들을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차피 이렇게 갈 거지만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레퍼런스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중요한 산업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은 수출입이 되지 않지만 의료 인공지능은 수출입이 되고 기존의 전통적 의료시스템은 수출입이 되지 않지만 AI에 기반한 의료시스템은 국경 없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경의 시장이 지금 공백 상태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디 지방 필수요료를 메워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전통적이고 고식적인 휴먼 인텔리전스에 의존하는 생각들이 아닌 AI가 어떤 식으로 이 1차 의료시스템에 도입이 될지, 예를 들어서 1.5차 의료시스템이라는 것이 기존의 1차 의료진과 AI가 결합돼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국립의료원, 지방 국립의료원, 보건소까지 이어지는 공공의료시스템의 디지털 전환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아주 먼 지역의 낙후돼 있는 의료를 높일 수 있을지를 장관님께서 충분히 계획하시고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국립대병원, 지방의

료원 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원까지 포함한 공공 분야에서의 AI 기반의 보건의료시스템 만드는 것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이나 부처에서 올렸었던 안들은 AI 관련해서는 지역적인 프로젝트 단위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프로젝트, 우리가 돈 내서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사 와도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없는 것들은,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모자란 부분들은 외부 자원들에, 외부 기술들에 의존해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 하나면 의료시스템은 AI 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반의 계획들, 복지시스템은 향후 5년간 복지시스템이 AI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넘어갈지, 휴먼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통합된 모델들은 어떻게 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너무 생각이 예측하기 쉬운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조AI, 의료시스템을 AI로 전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경쟁이 있고 훨씬 더 제한된 영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3차 서비스 산업들을 어떻게 이뤄 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것은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들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장관님들께서는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AI 전환 계획들을 적어도 다음 5년, 다음 10년의 계획들을 꼭 세우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문제들에 대해서 의제가 나와서 저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서 한국은 경제 관련 활동인구가 극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글로벌 인재, 이민청과 같은 형태로 한국에서 모자란 휴먼 인텔리전스 인력들을 해외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 생태계에 통합시킬지 한 가지, 그리고 그 안의 인력들이, 우리의 교육돼서 나왔던 한국의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한국 생태계로 어떻게 들어올지, 그리고 이것은 산업부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인력의 이동 없이도, 인구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는 실제 이민과 같은 인력의 이동 없이도 우리가 가진 인력 생태계가 국경을 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고.

저는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AI가 만드는 대량 실업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국정기획위 안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은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걸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고 우리 노동시장을 바꿀 거라는 것은 여기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 부처가 그런 예측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AI가 우선 바꾸는 방식은 한 사람에 대한 생산성을 극도로 높일 거기 때문에 예전에 다섯 사람이 했던 일을 한 사람이, 특히 신입 청년들이 아닌 삼사십대 혹은 사오십대 기준에 완전 고용이 돼 있던 그룹들이 생산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급격히 나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몇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AI의 고용 영향이 어떻게 될지, 저희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게 3~5년 단위로 급격한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이재명 정부 4년 차, 5년 차 때 국내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AI로 인한 고용 영향, 실업률의 증가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하고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져 있는지,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만들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대량의 실업이 예상이 됐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청년실업은 IT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산업 분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와 같은 것을 특성화해서 AI 전환보험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아마 직업의 절반 정도가 다른 직업의 형태로 바뀌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가진 생산성이 늘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 왜냐하면 수요자가 크지 않았을 때는 시장 자체는 커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랬을 때 실업들이 한쪽으로는 예상됐을 테고 직업들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어도 고용노동부는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AI 전환보험 혹은 이것과 결합된 AI 기반의 업스킬 패키지(upskill package)가 통합되어서 우리가 실업이 예상되는 그룹들한테 일종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량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제조 AI 등 모든 부분들이 다른 한쪽으로는 노동력의 전환들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 5년에 일어날 실업에 대한 혹은 노동 전환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노동부차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간 AI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모델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받았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AI 전문가와 한국고용연구원을 통해서 AI가 도입됐을 때 청년·장년·산업별로 여러 가지 노동계에 미치는 변화와 충격을 분석을 하고 산업 전환과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축의 하나는 탄소 전환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A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적 틀이 직업훈련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용장려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차지호 위원 우선은 AI로 인한 대량 실업에 대한 추계를 만들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차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연도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내년 초까지 마련토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만찬 정회 전까지 휴식 없이 계속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 답변 등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국무위원 등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예산심사에 참여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구윤철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승원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헐값으로 매각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대통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도 1000조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더 매각하기가 쉽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도라든가 아니면 부당한 특혜가 개입할 여지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의원실의 검토결과인데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런데 고민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행안부하고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어쨌건 지금 국유재산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유재산 그다음에 이번에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심이 총리님이시니까 그 밑의 행안부장관님과도 함께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는 김에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최근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요. 10월 18일 자 그다음에 10월 24일 자 등등 메모를 보면 이것은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구나 또 무력 충돌을 오히려 유인했구나라는 것이 나올 정도의 놀라운 메모가 등장하고.

10월 18일 보면 국군의 날, 그러니까 2024년 국군의 날 그때 군인들의 행진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이 술을 마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10월 3일 날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그다음에 10월 9일 날 두 번째로 보내고 그다음에 10월 10일 날 또 보냈다가 무인기가 북한에 불시착하는, 추락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은 무력 충돌을 유발하기 위한 계획이고 이게 안 되니까 10월 18일 날 더 강도가 높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그런 휴대전화 메모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의문이 기재부에서 채권, 유가증권으로 있던 32조인가요, 32조를 10월·11월 달에 갑자기 대량으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장기 혹은 중기에 있는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유동성이 높은 현금화시켜 갖고 32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비상계엄 혹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에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 불이익,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상황들이 나온 이상 이것은 의원실에는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급격하게, 쉽게 말해서 급격하게 떨어로 팔면 당연히 손해 보고 파는 것은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한 손해도 좀 추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일단 실태를 파악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원 위원 반대로 지금 잠자고 있는 돈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430조 규모의 퇴직연금인, 정확히는 431.7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퇴직연금이 금융사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형이 주된 것이고 대부분 원금보장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잠자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금융사의 수수료를 떼 내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자료화면을 보면 2024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15%, 퇴직연금은 4.77%로 3배 이상 격차가 나고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도 국민연금은 5.43%, 퇴직연금은 2.31%로 2배 이상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형으로 하다 보니 지금 금융사들이 보시면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보여 드리면 운용관리수수료 0.158% 그다음에 자산관리수수료 0.178%, 펀드비용 0.078%, 그래서 전체 0.414%를 안정적으로 금융사들이 가져가면서 이걸 400조로 봤을 때 약 4000억 정도의 수수료를 금융사들이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금융사들이 자금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수수료 떼 가기 장사에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직연금, 즉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원금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약형으로 해서 지금처럼 운용하시고 또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연금의 관리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퇴직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런 연금을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

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좋은데요. 지금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들께서는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어떤 자산 운용에 있어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쟁적인, 연금이 발생함으로써 지금 현재 금융사가 누리고 있는, 아까 말한 0.414%의 그런 안정적인 수수료를 거기서 더 인하를 시킬 수 있고, 경쟁 체제로 돌입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도 좋고.

또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대형화를 시켜서 운용을 하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관리공단을 갖다가 공적 관리기구로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 400조 원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벤처 또 혁신기업, AI,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리고 그 규모가 국민연금의 1300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400조 이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

또 여기서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점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퇴직연금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계약형 또는 기금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나 관계부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기금화까지는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선택형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퇴직연금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좀 뭐랄까요, 더 세계 공공성도 보장하고 수익률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게 기금화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나아가야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 방향이 정해지면 아마 기금 공사화 또 공단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승원 위원 꼭 좀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검토 결과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승원 위원 다음은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계신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김승원 위원 제가 오늘은 프랜차이즈업을 상장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또 상장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데, 심사하는 데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상장이 요새 대세이고 또 수십 군데가 상장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것 몇 군데에서 상장 신청을 하고 있는지, 심사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김승원 위원** 프랜차이즈를 상장을 시켰더니 예컨대 가맹점은 수익이 악화되고 또 상장으로 인한 수익을 가맹점에 전가하면서 뭐랄까요, 비용이 상승하고 그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연쇄효과가 나타나고 또 가맹점은 상장된 본사로부터 여러 가지 무리한, 과다한 수수료라든가 비용 전가를 받게 되니 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고 또 폐점이 잇따라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장할 때 투자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수익을 내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지금 주가는 오히려 1년 만에 반토막이 나거나 3분의 1 토막이 나서 투자자한테도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장할 때 가맹점 쪽의 일하는 사람들이 스톡옵션을 많이 갖고 있어서 결국에는 본사라든가 또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을 하다 보니 가맹점주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사할 때 이런 상장 요건에 있어서 예컨대 가맹점 매출이 얼마인지, 또 상장할 때 조달한 자본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등을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대개 상장하면서 조달된 자금을 해외에 진출할 때 쓰겠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상장시키고 1년 후에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2% 혹은 3%밖에 안 됩니다. 결국 그 돈 갖고 그 돈의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유명한 더본, 백종원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보면 2024년도 매출 4600억 중에 수출액은 135억으로 2.9%에 불과하고,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 교촌치킨 관련해서도 해외 매출액 비중이 5% 미만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촌치킨 자료가 나오는데요. 해외에 투자하겠다, 해외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상장 당시의 목표는 결국에는 실현되지 않는 과장이었다, 거짓말에 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그냥 하나씩 보면서 검증하실까요.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첫 번째 자료화면은 더본코리아가 상생을 한다더니 상장 후에 납품 단가를 62% 인상해서 가맹점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필수 품목의 납품 단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료화면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이요.

이것은 가맹 본사의 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톡옵션을 이렇게 대량으로 갖고 있어서 가맹점주들과의 상생보다는 스톡옵션 실현을 통한 그런 이익 실현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맹점 본사라든가 주주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 표를 보여 드리는 내역이고요.

다음 자료화면이요.

이게 지금 해외 진출이라든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매장의 증가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결국은 그것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가맹점에 대한 그런 손해 전가를 통해서 결국은 가맹점이 폐점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더본코리아가 상장 당시에는 6만 4500원이었던 주가가 1년 후에는 63% 급락해서 2만 4000원, 그다음에 교촌 같은 경우에도 6200원이었던 주가가 1년 후에는 37% 하락해서 4000원에 불과해서 결국에는 투자자인 국민들한테까지도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보여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자료화면 보여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상장할 때 뭘 심사하는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700페이지, 1000페이지가량 되는 그런 제안서인가요, 설명서를 갖다가 보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되게 내용은 두껍고 뭘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계획은 자세하게 적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가맹점에 대한 손해 전가라든가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데, 위원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지금도 사실은 정량적 요건, 정성적 요건 해서 정량적 요건 같은 건 재무제표라든지 매출액, 수익성 이런 거고,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 사실 투자자 보호, 경영의 투명성, 내부 지배구조 이런 걸 같이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가맹점 이런 부분들은 상장 이쪽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 비즈니스 구조로 가는 게 상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투자자나 가맹점주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한계를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지금 더본코리아와 가맹점주 사이에 굉장히 충돌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쨌건 이런 프랜차이즈가 상장 심사할 때 해외 매출 비중이라든가 또 가맹점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수익이 어디서 나는지 또 점주와의 상생지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예비심사부터 그다음에 본심사까지 이런 지수들을 반영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우재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년 연장과 시간이 조금 남으면 관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차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도 조금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는 총리님, 경제부총리님 그다음에 중기벤처부차관님께도 질의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년 연장 이슈가 한창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간단할 겁니다. 우리가 기대수명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노년층이라고 하던 걸 사실 하나로 묶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60대 노인과 80·90대 노인은 매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함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한 지금은 이분들의 능력이나 또는 배움에 있어서도 아주 차이가 큼니다.

사실 60대 노인이라고 하지만, 65세부터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한 능력도 있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건 매우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일정 부분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정신적 건강 차원에서도 완전히 그냥 쉬시는 것보다는 조금 적절한 일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지요. 많은 60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단 한번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당장 급여도 급여지만 각종 복지 혜택들,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배제되는 것들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직장을 계속 다니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의 60대는 일자리에서 완전 벗어나기에는 조금 이른 세대가 아닌가,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70대분들조차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은 게 각종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근로가 젊을 때의 근로와 완전히 같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하고 달리 지금의 60대 또는 70대는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또한 능력도 있으신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시절 완전 열정이 넘치고 창의력이 넘치고 그다음에 기력이 넘칠 때 그때의 근로와 완전히 같은 형태의 근로를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생산성을 바로 낼 수 있는 시기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약간 의문을 품게 되는 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기호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선호하는 고용조건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은 사실 60대가 넘으면 조금 여유롭게 일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조사한 내용을 보면 60대의 근로를 보면 가면 갈수록 돈은 벌지만, 일은 하지만 여유롭게 일하고 싶다는 이런 근로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을 때랑은 조금 다르지요. 20대, 30대에는 무조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또 야근도 열심히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승진하고 조금 더 연봉도 많이 받고 조금 더 성공해 보겠다 이런 형태의 선호가 많았으면 60대 근로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씩 여유롭게 일하고 싶다,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싶다 또는 아니면 손주도 좀 보고 그렇게 일하고 싶다 이런 층의 수요가 점점 더 올라가서 65세를 기점으로는 완전시간선택제, 나는 좀 여유롭게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70대분들은 완전 그냥 ‘아이고, 나는 승진 이런 것보다 그냥 좀 여유롭게 일하면서 손주도 좀 보고 이렇게 일하고 싶다’라는 선호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60대, 사실은 노인을 하나로 정의하는 게 이제 끝나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기노인·후기노인으로 나

뉘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장년층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하나의 연령대층을 오히려 정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정년 연장은 60대 근로의 이런 특성을 좀 무시하고 너무 일괄적으로 해서 그냥 정년을 연장해서 젊을 때의 근로와 똑같은 형태로 근로를 시킨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말씀처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수요의 다양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그 맥락 속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과의 차이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보면 저출생·고령화에서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금 더 촉진해야 하는 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런 논의 TF가 구성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까지 확일적이라기보다 좀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일단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자체가 사적연금으로서 소득의 크레바스를 메우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60대 근로의 생산성이라는 부분, 원래 임금이라는 것은 적정임금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지요. 가장 생산성이 높고 가장 열심히 일할 때, 그럴 때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 게 맞다면 사실 일정 부분은 너무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의무화해서 적정한 직급 또는 적정한 임금에 맞춰서 그렇게 다시 한번 근로조건을 맞추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다양성이 있는데, 또 하나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사실은 60대라고 해서 무조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논의들이, 지금 아마 노사를 포함해서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두 번째,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했을 때 누가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정년으로 퇴직하고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16% 정도 된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84%의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겠지요. 희망 퇴직도 있을 거고요 또는 폐업 때문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구조조정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자영업 등으로 해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정년퇴직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84%라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16% 안에 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년 연장 이슈가 너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분들께만 유리한 이슈가 되지는 않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대기업과 여기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보는 것보다는 제가 보

기에는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대외적으로 같이, 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사와 같이 청년세대와 상생을 이루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 혜택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

최근의 여론조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세대에 있어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높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이게 특정 세대한테 뭔가 이익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만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식의 접근은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연속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쉬었음 청년이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42만 정도에서 50만 넘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도 월별로도 매월 몇만 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40만 명에서 25년 8월 통계로 하면 45만 명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률이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지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비교를 하면, 대기업에 있어서 청년과 장년층의 비율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를 제가 하나 보여 드리면요 과거에 2004년에는 대기업 기준으로 고령자—55~59세입니다—가 2.9%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기준으로 9.3%, 과거에 청년은 13.7%였는데 지금은 7.3%입니다. 지금은 대기업 기준으로 해서 고령자가 청년보다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이 추세를 더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자체가 너무 대기업의 고령화에 기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저하 부분에 미칠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의 악화라는 점에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획일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우려들도 같이 균형 있게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조화롭게 뭔가 이렇게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저는 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넘기는 겁니다. 기업이 끝까지 책임지고 고용을 해라, 고용을 유지하라고 넘기는 거고요. 반대로 정부에서 조금 이런 부담을 떠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은퇴했을 때 그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거지요.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도 훨씬 더 많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고용 안정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가 훨씬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혹시나 퇴직하더라도 그리고 재고용이나 이런 부분, 새로운 직장을 찾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이라든지 불안을 국가가 어느 정도 메워 주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혹시 장년층 고용 지원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올해 한 5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청년은 얼마나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청년은 한 1조가 조금 넘습니다.

○우재준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노인일자리사업은 얼마나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한 110만 개 정도 자리인데요. 예산은 한 1.5조,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우재준 위원 2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조 3500억 정도 되네요.

총리님께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총리님, 장년층 이런 노인 일자리는 복지 사업입니까, 고용 사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사실은 우리 노인 빈곤율이 한 40%로 되거든요. 40% 같으면 이게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냥 복지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용 형태를 믹스함으로 해서 건강도 찾고 복지도 하는……

○우재준 위원 차이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노인일자리사업을 지금 복지 사업으로 하면 그분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는지를 조금 관심을 덜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분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분들이 그냥 돈을 받아 가는 게 우선이지 이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이분들을 어떤 직장에서 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소영 간사,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반대로 고용 사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짜게 되겠지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장년층 일자리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지 이게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고용 사업으로서 정말 국가가 두텁게 이분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16%가 아니라 84%의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는 그분들을 진짜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또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부처 전체에서 사업 전체를 모아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뭔가 하여튼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약간은 그래도 퀄리티가 있는 그런 노인 일자리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조금만 여쭙보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자동차 관세는 이번에 15%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 팩트시트나 MOU가 되고 나오면……

○우재준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니까 여전히 철강 관련해서는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잖아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철강으로 만든 자동차 부품은 몇 프로나 이렇게 관세가 부과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철강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철강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철강이 대부분 들어간 제품은 현재 50% 관세를 부여받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가 너무 덜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 지역인 대구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전체 수출 1등이고 20% 정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도 조금 지원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이번에 50%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도 철강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히 중소기업들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요 단순한 철근 생산 이런 것보다는 특수강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R&D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비규모 조정할 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한다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우재준 위원** 협정 자체에서 조금 이 부분도, 자동차 부품도 조정될 여지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 동일하게……

○**우재준 위원** 이 부분이 너무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완성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거의 생산을 하겠다고 이야기까지도, 장기적 계획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 업계는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다 여기서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일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 각종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부분,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보도가 안 되고 있고 협상에 이게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중기벤처부차관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세 대응 예산들을 저희가 보니까 다른 부처들은 대부분 올랐어요. 대부분 올랐는데, 중기벤처만 관세 대응 예산이 줄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아마 추경을 포함해서 비교하실 경우에는 줄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수출바우처 예산이 증액됐고 일부 대응자금, 융자 쪽은 정책 대상 효율화 차원에서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다른 부처는 추경을 포함해도 다 증가됐거든요. 거의 재난에 가까운 지금 관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관세 50%면 엄청난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게 적절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정책자금 융자의 경우에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합산을 하게 되면 줄었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관세 피해기업 중심으로 자금 융자, 정책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정말 많은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재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국토부 김용석 위원장님이신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대광위원장입니다.

○**이강일 위원** 지역구 하나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청주공항 얘기입니다. 청주공항의 이용자가 연간 50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넘버 5 공항이지요. 손님은 점점 많아지는데 민간 전용 활주로가 1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활주로 건설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청주공항이 사실은 인천공항 수요를 많이 분담하는데요. 인천공항 여객이 2033년이면 포화되고요 화물은 1년 당겨서 2032년에 포화가 됩니다. 지금 지어도 이 시기를 넘어가거든요. 청주공항을 더 쓰게 되면 경기도 남부권과 경기도 동부권, 충청권, 강원권은 김포공항을 쓰는 것, 인천공항을 쓰는 것보다 40% 이상 물류비, 시간이 절감됩니다. 충청도민들 116만 명 서명으로 이것 청원한 것 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이강일 위원** 공항 새로 지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 1개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또 만들자는 예산도 아니고 건설비도 아니고 조사하는 용역비 5억 원 태워 달라는 겁니다.

예산이 삭감돼 버렸네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른 공항에 수천억씩 쓰는데 겨우 5억도 못 태운다는 겁니까? 충청권에 굉장한 박탈감 줄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한 사업이에요. 이번에 빠지지 말고 검토해서 다시 삽입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겠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부탁드립니다.

농림부입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도 좀 들어 주십시오.

최근 비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고환율 그리고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특히 요소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 큼니다.

2022년도부터 정부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 가격 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이 가격 보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요즘 인건비도 오르는데 비료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농가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가격 보조까지 중단하게 되면 농민들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내년 예산 372억 필요합니다. 반영돼야 합니다.

농림부장관님, 검토하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반영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 한국 증시가 4000선으로 이제 안착해서 4000선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마 5000을 찍고 6000, 7000 시대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하여튼 희망은 합니다.

○이강일 위원 왜 시장이 이재명 정부에 열광을 하지요? 제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보이거든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권 교체 직후 코스피5000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코스피 위원회는 5000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00을 찍고 넘어가자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법 개정, 대주주 기준 완화, 핵심 조치 다 번개처럼 끊임없이, 중단 없이 단행했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의지를 봤고요. 이 신호가 바로 ‘바이 코리아(Buy Korea)’ 열풍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 랠리가 아니고 증시의 본질적 가치가 상승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합니다. 푸른 신호등을 계속 켜 놔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거래소 밸류업 강화, 주주 친화적 세법 개정,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코스피5000위에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잠자는 자사주 처리 문제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폭탄급 재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 기업들이 현재 들고 있는 자사주 규모가 시가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 1%만 소각을 해도 이게 수천억의 시총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들 주가가 평균 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기업들이 자사주를 전부 소각할 경우에 코스피가 3% 넘고 어떻게 보면 시세만 타면 5%, 6% 더 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지배구조의 썩은 고리를 끊는 외과 수술일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는 당연히 주주에게 돌아가야 될 권익인데 한국에서는 오너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신규 자사주의 소각 외에도 기존 자사주 소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강일 위원 국민들이 계속 묻고 있네요. 자사주 소각법 연내 처리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자사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논의하고 해서 국회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강일 위원 자사주 소각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강일 위원 빠르게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회에서……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번 상승장에서 200조 원 수익 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강일 위원 그렇게 되면 2030의 연금 고갈이 확실히 늦춰지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이처럼 주가 상승은 단순히 주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자산을 늘리고 부동산 쏠림을 방지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는 국민경제 정책이다. 지금은 투자의 문을 더 열어야 합니다. 돈이 시장에 흐르게 해야 하거든요. 외국의 직접투자 늘리고 국내 기업들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지만 증시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는 금산분리를 완화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현대화가 논의가 돼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AI, 에너지, 디지털 금융 등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산업들은 산업과 금융이 조인해서 융합되는 구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산업과 금융이 따로 논다면 하나로 힘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업 안에 잠자고 있는 자산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생산적 금융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강일 위원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수익은 국민들과 국부로 나누는 선순환, 이게 가능해집니다. 금산분리의 원칙은 지키되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해안입니다.

부총리님은 경제 수장으로서 금산분리 현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추진 사항이 있으시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라든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함께 또 경제력 집중이라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두 가지 어떤 목표, 이상을 가지고 잘 조화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지금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를 잘 저어야 되니까 노를 같이 저어 주십시오.

정부의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시장에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신뢰를 세우고 금산분리 현대화로 투자의 문을 활짝 연다면 자본시장 선진화, 코스피 5000을 넘어서 그 이상의 시장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이강일 위원 상호금융권이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20% 추가 적립해야 하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이강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쌓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해에 20%를 쌓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올해 내에 장부에 다 계상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를 한 달 정도 연장해서 올해 회계가 아니라 내년 회계에 바로, 1월 달에 충전을 하고 내년 회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적자 구조를 조금 나눌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전부 적자로 가게 되면, 뱅크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잘 얘기 듣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유예를 해 준 측면이 있고요.

○**이강일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다음에 또 암만해도 부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시스템이나 기관 측면에서,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는 좀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예, 충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계를 좀 나누자, 그래서 올해 회계에 하고 내년 회계에 10% 반영하는 것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것도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고하시겠지요? 검토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틀 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정위입니다.

위원장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 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대기업이 이기겠지요.

○**이강일 위원**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하청 기업이 더 많이 이깁니다. 법에서는 이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배상액이 실제 손실을 따라가지 못해요. 소송이 삼사 년 걸리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사이에 열 곳 중에 세 곳 이상이 문을 닫아 버립니다. 못 버티는 겁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신속한 분쟁 해결이 중소기업의 방패가 돼야 됩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중재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원청이 소송으로 가면 중소기업, 하청업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참 싸움의 물을 원청이 다 결정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하도급법에 중재 우선 적용 원칙을 명확히 명기해서 넣어야 합니다. 분쟁 해결 방식을 힘센 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해액을 제3기관에서 검증해서 합의해서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분이 갑자기 이 합의를 뒤집어서 소송으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지금 세븐브로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버티는 쪽이 이기는 싸움, 이게 하도급 분쟁의 지금 현실입니다.

또 하나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은 판결과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하려면 다시 법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또 몇 달 걸립니다. 중재가 진짜 보호장치가 되려면 집행 절차 간소화 또는 자동 집행력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이강일 위원 하도급 분쟁 절차의 속도는 곧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때 공정위가 나서야지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개선 적극 검토하실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또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자사우대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경쟁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경쟁제한 우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 공정위의 규제 기준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단지 네이버 사건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붙어 있는 사건들,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쿠팡 PB상품 리뷰 개입, 알고리즘 조작 의혹 사건, 이거 다 영향을ダイレクト로 받는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플랫폼 시장은 이전의 재래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힘이 더 세집니다. 그리고 한 번 앞서면 후발 주자가 따라잡기가 거의 힘든 그러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깡패지요. 무엇을 보이게 할지 무엇을 숨길지 시장 물을 플랫폼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 상황을 전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긴다? 이걸 공정위가 가만히 놔두면 심판자가 아니지요, 관중석에 있는 관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은 이미 끝났지요. 제 얘기는 공정위가 역할을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 판결 사례는 경제 변화에 발맞춰서 법률이 변하지 않으면 판결이 시대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판례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공정위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최대한 저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던 경제 분석을 보강해서 지금 현재 돈을 더 내고서라도 검색 순위를 높이려는 경제주체들의 명백한 행위를 판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질의를 할 게 있어서.

해외 각국들은 이미 방향이 명확하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이강일 위원 알고리즘 공정성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기업 전략이라는, 시계를 뒤로 돌려서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로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집행이 좀 어려워진 건 있는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자사우대, 알고리즘 차별 그다음에 검색 노출 조작 제대로 규제할 수 없지만 공정화법을 제정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금지 원칙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거래 공정화법 필요하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필요합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또입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서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제는 공정위가 누가 법을 어겼는지 좀 판결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22조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는 허용을 하지만 국내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형성 금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 3월 영풍이 국내에 지분관리 목적의 100% 자회사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한꺼번에 이 회사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대표도 동일하고 회사 목적도 고려아연 지분관리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환구조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이 된 거지요.

국내 법인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매개하고 있다면 공정위는 명확히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기업 간 다툼보다 사모펀드 MBK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MBK가 기업가치보다 단기 차익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로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의 장본인입니다. 이제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인 고려아연 지배구조에도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주권, 자원통제권 누구한테 가느냐, 위험하냐 안전하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공정위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펀드의 경영 개입으로 기업 안정성과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이 부분도 지금 신고 접수되었고요. 법 위반 여부 검토해서 엄중히 조치할 것이고요. 이 기회에 저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해외 자본으로부터, 해외 자본의 공격적인 인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간산업 보호에 관한 법률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시대가 바뀌어서 공정거래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공정거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감사합니다.

○이강일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읍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총리님, 올해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대통령께서 ‘올해 예산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 이렇게 강조하셨지요. 그리고 올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0조 10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과방위에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AI 타이틀만 달면 예산이 중복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관련돼서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을 보니까 딥테크·AI 펀드를 3000억 조성해서 AI 분야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부처, 어느 계정에 있는지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 주신 딥테크·AI 펀드는 중기부 소관입니다. 모태펀드 통해서 운용사 선정하고 민간자금 들어와서 자펀드 결성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리고 AI 혁신펀드도 올해 450억인데 내년에는 또 100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해요. 어디에 쓰는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러니까 딥테크·AI 펀드는 포괄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AI 혁신펀드는 말 그대로 AI 특화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다소 다릅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저는 AI 3대 강국으로 가려면 국민들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신뢰에 바탕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도 힘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뢰를 줬으면 하고.

그래서 올해 10조 예산편성이 됐는데 언론에서는 7조 7000억 이외에는 어디 편성됐는지 못 찾겠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걸 잘 알려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AI, 저도 과방위 소속이라 여러 가지를 살피는데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2033년까지 60만 명을 감축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존이 한 15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40%를 2033년까지 감축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AI 진흥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대변화에 대한 대응도 과기부도 그렇고 여러 부처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AI 시대 준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아, 차관님 나오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노동부차관입니다.

○**이훈기 위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노동자 일곱 분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매몰자 수색을 위해서 4·6호기 발파 작업을 했는데 정부가 사고 수습은 물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제가 차관님께 좀 여쭙보겠는데요.

대통령께서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고용노동부도 산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난해 5월에 삼성전자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2조에 보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할 시 중대재해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사고 나신 피해자분 손이, 그러니까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일시적으로 노출돼서 손이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분은 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신체에 평생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요. 그래서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보기에 명백한 중대재해인데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사고가 아닌 직업성 질병으로 황당한 판단을 해 줬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부과했던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도 국정감사에 삼성 부사장이 나왔는데 이게 질병이냐 사고냐에 대해서 삼성은 답변을 회피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건 사고잖아요, 순간적으로 방사선에 피폭이 돼서 저렇게 된 건데.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법정에 가서 이것을 직업성 질병이라고 그래 갖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삼성은 마치 이 사건에서 삼성이 승소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를 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몇 가지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이번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재해조사표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입법 목적이 달성된 것 아니냐 그 측면에서 과태료를 취소한 거지 이게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걸 판단한 건 아닙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과태료 취소의 근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직업성 질병이라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래서 위원님 그게 조금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라면 이런 건 좀 깔끔히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위원님, 그래서 그걸 저희가 즉각 설명 자료를 냈고요. 현재 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위반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사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KT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동자 여섯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분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세 분은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구조조정 압박 때문에 내가 자살을 했다고 유서도 남겼어요. 그리고 KT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31명이 자살을 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산업현장에서 한 명만 돌아가셔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유독 KT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죽어 가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

나요, 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지금 동료의 자살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트라우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구조조정 관련된 사망사고 관련자들이 한 6명 있는데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로서는 범 위반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용노동부나 과기부에서 가서 간담회 한 번 한 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재명 정부 노동부에서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정은경 복지부장관님, 정신적 산재가 제가 보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판명이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방치 상태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이 원인이 구조조정이라고 유서에도 남기고 드러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계속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정신적 산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산재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기준이 직업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의학적인 것만으로는 제가 의견드리기는 어렵고 고용노동부에서 산재판정기준을 좀 살펴보고 정신질환 쪽, 특히 말씀하신 자살 부분……

○이훈기 위원 저는 고용노동부 또 과기부도 통신사를 관할하기 때문에 과기부총리님 그리고 복지부장관님도 좀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자살도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은 고용부하고 좀 상의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민생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생활비 부담 경감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통신비 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게 통신비가 많이 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와이파이 문제입니다, 무료 와이파이. 그런데 와이파이가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하철에는 공공와이파이가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지하철이 가장 공공적인 대중교통 수단인데 지하철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고, 지하철에는 와이파이를 통신 3사가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와이파이를 안 터져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이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공공와이파이 전국 지하철에 하는 데 100억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통신사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예산은 다른 데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하철은 그냥 통신 3사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저희들은 통신 3사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그쪽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과기부총리하고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사각지대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가장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게 지하철인데 거기서 연결이 안 되고 불편해서 고가의 어떤 요금제에 가입을 하고 아니면 데이터를 더 쓰든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는 정부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부총리하고 과기부총리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재정사업 검토도 좀 해야겠지만 일단은 사업자들이 추가 투자할 수 있는지 먼저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저는 불신인지 몰라도 통신 3사는 자발적으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통신 3사가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게 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통신 3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 왔고요. 아직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 부분 사업자랑 한번 논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대광위원장입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 의원분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초선부터 최다선 의원까지 많은 의원분들이 같이하시고 토론회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안 되니까 이렇게 모임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의 큰 축이 재개발·재건축인데 제가 보기에, 저희 지역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지역구가 인천 남동구인데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는 곳이 한 열여덟 군데 돼요. 보면 규모도 작고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분들이 추진 방식, 진행 이런 것을 모르니까 되게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물어보면 ‘알아서 만들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답답해하고 추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규모 어떤 개발도 중요하지만 중소 규모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국토부가 국민 입장에서 친절한 행정도 하고 좀 이게 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9월 7일 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좀 담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컨설팅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이훈기 위원 전국 12개 지자체 33곳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인천에도 한 5 곳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주민들이 한 그룹이 있고 또 한쪽은 노후계획도시 선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두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그리고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니까 희망고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사업이 오히려 더더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희망고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명확히 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관련한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LH, 부동산원, 저희가 합동으로 그것 관련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역은 올해 도시정비지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정비사업도 또 별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먼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환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최대한 설명과 컨설팅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볼게요.

제2경인선 있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이훈기 위원 이게 지금은 3개 노선을 통합해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사업이 왔다 갔다 해서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인천, 광명, 시흥, 부천, 구로, 관악, 양천 해서 수도권 서남부 한 1000만 명의 주민들이 관련된 철도예요.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사업으로 한다 그랬다 민간 사업으로 갔다 또 노선 변경하고 한 8년째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1000만 명의 시민들은 이 철도가 없으면 교통섬이 되는 분들도 많고 상당히 필요한 철도인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지난 9월 최근에 새로운 노선이 수도권 남부선으로 해서 제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일정이 어떻게 돼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연말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차관 나와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작년 1월에 MBC PD수첩에서 ‘PF 폭탄과 공실 지옥, 위기의 지식산업센터’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이훈기 위원 그렇고, 한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만들어서 인기도 끌고 수도권에서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공급 과잉, 공실률 급증, 관리 부실, 투자자 피해, 금융리스크, 입주제한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수도권 중심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80%에 육박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뭔가 좀 대대적인 수술이나 개선이 필요한데 내년에도 예산이 948억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의 예산이 91억 증액이 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잘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은 비수도권 대상이고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 분양 지식산업센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센터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든지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매월 진행상황 검토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런데 민간과 공공임대형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또 차이가 있고, 이게 지자체에서 매우 희망하는 사업.....

○이훈기 위원 자세한 부분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수 이훈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구의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구의 황정아 위원입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저 또한 현장 연구자 출신으로서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총리님도 과학기술인 출신이시니까 그 말씀에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이

있던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없었다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식민 지배에서 독립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그랬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과학기술인을 꿈꾸게 하겠다, 그 꿈은 이재명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고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도 함께 꾸어 주셨으면 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이자 미래 첨단기술 경쟁을 해쳐 나갈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과학기술인을 다시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과거 인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자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생존을 책임질 강력한 뿌리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중국은 공대에 미쳤고 우리나라는 의대에 미쳤다’. 왜 이런 비정상적인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의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런데 그 반대로 봤을 때 과학기술인들이 안정적인 취업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인재를 이공계로 유인할 만한 보상이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의 43%가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2030 젊은 연구자 층에서는 이 숫자는 70%에 달합니다. 정말 참담한 숫자 아닙니까?

인턴 월급은 해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연구 인프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가 디지털전환, AI, 첨단 제조 등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축이자 국가경쟁력의 전략적 자산은 물론 국가의 생존까지 좌지우지할 뿌리인데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무위원들 모두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윤석열의 R&D 폭거는 안 그래도 척박한 황무지에 물줄기를 아예 틀어막아 버린 꼴입니다. 겨우 심어 놓은 씨앗마저 다 말라죽여 버린 셈인데, 제가 20여 년간 현장 연구자로 살다가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동료 연구자들의 울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카르텔로 모욕당하고 R&D 예산은 5.2조 원이나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삭감되고, 한국에서는 과학자의 길을 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살고 싶은데, 해외로 나가고 싶지는 않은데 연구를 계속 이어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국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공계 연구개발 분야인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구직 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해에 모두 2만 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나 급증했습니다. 최근에는 파산 사유에 개인회생을 위해서 퇴직연금까지 갚 과학기술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청년과학기술인들의 파산이 심각합니다. 30대 청년과학기술인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2022년 2명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그 6배에 달합니다.

그래 놓고 윤석열은 감히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고 싶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분노가 치밀니다.

부총리님, 과학기술에는 구조적 저출생·저성장이라는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인재들이 다 해외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인재 유출에 기름을 끼얹은 셈인데 그러면 연구개발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 폭거 때 과학기술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그런 폭거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하고 절실히 뛰었기 때문에 R&D 예산 이제 획기적으로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의 정부안이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과학기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 기반으로 우수한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연구하고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과학기술인들이 염원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무시한 체제는 망했다’, 이 말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나라가 흥할 수 있다.

부총리님, 100% 성공하는 연구가 있습니까? 실패는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부총리님도 LG에서 엑사원 개발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그 시행착오들이 성공을 향한 자산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패 없이 성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심은 실행력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R&D 예산안 국회에 제출되었고 과기부총리 역시 신속하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D 예타 폐지법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과학기술인을 옥죄던 PBS 제도 역시 30년 만에 폐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도 행정적 통제를 최소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시스템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여 주는 그 진정성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올해 4대 과기원 수시 경쟁률 어땠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황정아 위원** 카이스트, 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16.1% 늘어난 2만 442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시 경쟁률이 2026년 14.14 대 1까지 전년 대비 15% 급증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올해 의약학 계열의 수시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21.9% 감소한 11만 2364명, 즉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적었다

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AI, 반도체 등 첨단 신산업 도약과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의 이공계 중심 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과학기술인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번 정부가, AI든 첨단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학생들의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진학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이미 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 정지해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정부가 낼 수 있는 가속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정책을 더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예산을 확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해서 현장에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회의에서 발표된 국가과학자 제도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대표를 뽑고 예우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공계의 롤모델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인재들이 국가과학자로 선정될 것입니다.

부총리님, 하지만 지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과학자 제도를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왜 이 사업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국가과학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영예성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석학 중심의 국가과학자 선발뿐만 아니라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젊은 과학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젊은 과학자를 위한 국가과학자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여야정 모두가 동의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어떤 정당도 이 사업을 협상을 위한 볼모로 삼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말 한마디에 급증한 글로벌 R&D 이제 재정비할 때고, 진짜 풀뿌리 기초연구도 이번에 대폭 증액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연구 현장에서 생애기초연구라는 사업명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3.4조 원으로 올해 대비 14.6% 증액시키고 과제 수는 1만 5311개로 대폭 확대해서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기초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내년에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소규모의 장기 기본연구를 복원해서 2000여 개의 과제를 신규 편성했고 연구 기반이 취약한 집단에도 더욱 탄탄하게 연구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연구 단가 상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술 분야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과제 규모의 다양성도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윤석열이 폐지시켜서 생애기본연구라는 사업명 자체는 사라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에만 2000개 이상의 기본과제를 투입해서 풀뿌리 연구 생태계 회복을 견인할 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기본연구 그러니까 풀뿌리 연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시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기본연구 1200개의 과제 단가도 약간 상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7500만 원 수준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기존 6200만 원 정도 수준의 연구단가가 일부 상향 조정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예우를 증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 문제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매년 약 5000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인력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에 막혀서 제대로 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비과세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을 꼭 채운 사람이 4771명, 매년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그 비과세 한도를 약간 늘려서 7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로또 당첨금에 불과하는 세율보다 더 높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이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되면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후에 해당 발명권을 소속 기관이나 기업에 승계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로 풀어서 과학기술인들이 효용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저희도 현장과 여러 소통을 통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보상금은 합리적인 비과세 수준 그리고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과기인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했을 때 따라오는 성과입니다.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과기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하는 벤처·스타트업들 그리고 딥테크 기업들을 더 육성하고 과기인 우대 정책을 잘 시행하면 그 회사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더 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또한 지금 출연연들의 청년 신진 연구자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인건

비는 더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R&D 규제는 풀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연구개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출연연들의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내년도 출연연의 인건비 증액이 겨우 3.5% 증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율을 2배인 7%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추가 재원은 280억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사실 전체 R&D 예산의 0.08% 수준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연구자의 보수를 합당하게 주는 것이 과기인 예우의 첫발이고 처우 개선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어떤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연연 연구자들의 인건비 부분은 보수 수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재정 당국하고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계적 논리에만 매몰되어서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막아 왔던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검토의견을 저희 의원실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AI 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해서 행정서류라는 족쇄는 풀고 창의성이라는 날개를 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는 연구데이터 특별법이라도 제정하고 ‘평가’라는 단어는 없애고, 평가라는 건 사실 누군가를 재단하는 그 끝을 의미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변화와 경험의 축적을 중시하는 만큼 ‘리뷰’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실패까지 연구개발 역량이 환류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에서, 과기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자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번에 국민보고회 때 발표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현장의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들, 특히 행정부담 완화 그리고 연구개발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그리고 평가가 아닌 리뷰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저는 R&D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서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R&D 예타 폐지법도 기재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곧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R&D 예산안이 미국의 경우 251.8조, 영국 38.4조, 프랑스 48.4조, 일본 48.2조, 독일 42.7조에 이릅니다. 우리로서는 역대 최대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물론 절대량을 모두 따라잡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들겠지만 국가 총지출 대비 5%를 R&D 투자에 확정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은 이 목표에 약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재정 여력이 된다면 AI와 R&D 예산은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소위 과정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는 김성희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갑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자리 확인을 좀, 국토교통부장관님 거기 계시는군요. 그리고 관세청장님과 과학기술부장관님 그리고 부총리님 계시고, 나머지 분들에게 질의를 드릴 계획이 없으니까요 잠시 이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안 되는데요.

○**김성희 위원** 안 되신답니다. 죄송합니다. 긴장을 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일단 방금 황정아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얘기 그냥 아신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과학시설이라고 불리는 라온 중이온가속기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것 2011년부터 추진해서 작년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고 미국에 있는 미시간주립대학교 FRIB하고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가속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조 5000억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인재들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17년 이후로 퇴직자가 24명인데요. 그중에서 21명이 연구직입니다. 최근 5년간 퇴직 연구자는 16명인데 연구직 5명 중의 1명꼴로 퇴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조 5000억 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고 그 인건비 몇 푼을 아끼자고 지금 기계를 잘 못 쓸 판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과장으로 느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요 연구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낮은 임금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유사 기관의 박사들의 임금 하한액, 그러니까 가장 낮은 액, 규정상임금 하한액이랑 비교해 봐도 80%에 그치고 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급여가 낮으니 애국하려고 들어와서 애국을 하다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성함은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박사님 어떤 분은 사기업으로, 어떤 분은 또 해외기관으로 나갔고, 지금 3개월 만에 나가신 분도 있는데 이분은 낮은 연봉을 이유로 들었고요. 제가 안타까운 분은 그다음 분인데 가속장치 전문인력으로 12년 동안 근속을 하셨는데 결국 사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

다. 빚분리 분야의 전문인력도 근속연수가 8년이었는데 심지어 이분은 월급이 많이 오르지도 않는 타 정부출연기관으로 가셨어요.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고 내가 대우받는다든 생각도 받을 수가 없으니깐 베테랑들은 빠져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저경력자들이 채우고 있는데 이 저경력자들도 들어와서…… 최근 보면 박사후 3년 과정에 있던 A씨는 낮은 연봉을 사유로 채용되자마자 나갔는데 얼마인지 봤더니 5500만 원이었고요. 다른 한 분은 박사후 과정 6년이었는데 24년에 채용이 됐는데 이분도 낮은 연봉으로 최종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연구소 제시 연봉이 6100만 원이었습니니다.

그런데 임금을 아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방금 언급하셨던 총액인건비 문제인 건데, 연구소 전체를 총액으로 묶어 놓고 이 안에서 돈을 굴리려고 하니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직보고, 다른 연구소에 있는 행정직들의 정상적으로 인상되는 임금을 억제시키고 그 남은 돈으로 박사들 임금을 조금 더 주려고 이거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기부장관님, 제가 설명드린 것에 큰 무리는 없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직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경제부총리님하고도……

○**김성희 위원** 부총리님을 쳐다보시는데, 부총리님께서도 아까 보셨지만 기본적인 인건비는 최소한 줘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1조 5000억 원짜리를 국가가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연구인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총액인건비로 묶어 놔서 문제가 된다 이러면 이런 돈은 과감하게 늘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기부와 협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을 봐 주시고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세청장님.

○**관세청차장 이종욱** 차장 나와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차장님이시군요.

마약범죄가 지금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데 수문장으로서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마약사범이 14년 1만 명에서 2만 3000명으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늘고 있는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압수율 통계에 따르면 대략 6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보다는 해외에 가서 현장에서부터 틀어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데 관세청 차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렇게 해서 출발국에서 함께 공조를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관세청도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 중이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합동단속 어느 어느 나라들이랑 하고 계십니까?

○**관세청차장 이종욱**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 태국 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하고 있고요. 추가로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하고도 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말씀 잘 주셨습니다. 캄보디아도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보면요 마약 수입국이 다양화되면서 캄보디아 적발 건수는 125%가 늘었고 중량 기준으로는 약 2300%, 이게 700g 들어왔다가 16kg 들어온 거니까 좀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캄보디아도 주요국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캐나다 같은 경우도—큰 게 적발이 됐으니까 그렇겠지만요—지금 중량상에서는 증가율이 3400%까지 나오기도 하고 멕시코 같은 데도 눈에 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범죄조직들이 새로이 진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호 세관 간에 합동단속 작전을 제안하는 대상국과 사업 내용을 좀 보다 확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합동 작전을 펴는 것이 단속망을 우리 정부 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요. 최근의 국내 마약 유입 국가, 밀수 방식을 전부 다 엄밀하게 분석해서서 세관 간의 국제공조 대상 국가를 좀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예, 관심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김성희 위원** 다음은 기재부장관님께 좀 여쭙볼 일이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관련돼서인데요. 23회계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량적으로는 사업이 좀 증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한데 운영 방식에 좀 개선점이 보입니다.

배출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배출을 억제하고……

○**김성희 위원** 배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배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금, 기재부가 이걸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이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시는 국민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내뿜고 있는지, 정부가 기후위기에 총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전에 물어봤더니 기재부에서는 법 개정을 먼저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게 예시를 보면요 경기도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이 미비된 상태인데도 지금 배출사업에 대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출 분야를 들여다보는 것은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법 얘기 하시니까 제가 또 법을 들여다봤는데요. 관련 법령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항을 보면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24조에 보면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배출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봐도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봤더니 배출사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방대해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도입 초기에는 일단 감축사업으로 이것만 선택하고 집중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4년 차가 진행됐으니깐 저희가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금 온실가스 감축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NDC 계산할 때도 보니까요 이걸 조금, 저는 진짜 좀 효과가 있는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까지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부분은 빼고 해서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예산, 그래서 진짜 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을 줄일 수 있는 것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평가나 플러스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일단 부총리님이 그렇게 말씀 주신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최초에 등장한 문서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었고 여기에 보면 단순히 감축사업뿐만 아니라 배출사업에 관한 평가·관리까지 고려했다는 점도 나와 있습니다. 재정제도 내용에 보면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발생·감축량도 측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난주 2035 NDC 대국민 공청회 자료에 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동안 감축량은 8860만t인데 앞으로 30년 동안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가 그 3배가 넘는 291만t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얘기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부가 좀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잘 감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030 NDC와 2035 NDC를 달성하고 나아가서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정해진다는 점 좀 각별히 유의해서 로드맵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차관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대광위원장입니다.

○**김성희 위원** 대광위원장님, 저희 지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고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딱 고양에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한강에 32개의 교량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이 교량 중에서 통행료를 받는 게 딱 하나만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김성희 위원** 일산대교인데요. 2008년 개통 이후에 17년 동안 고양 파주 김포 등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1.8km 이 짧은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지금 매일같이 통행료를 내고 있

습니다.

심지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38년까지라 아직 한참 남았고요. 최대 왕복 4800원, 연간 17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운 이동권인 교통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할 때는 민자를 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한강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를 건너는데 어느 지역은 나라가 지어 준 다리로 건너고 어느 지역은 민간이 지어 놓은 다리에 돈을 내고 건너는 선택권이 있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다리 옆에다가 이게 너무 막히니까 다리를 짓고 돈을 내고 건너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백번 양보해서 이렇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리 말고는 건널 다리가 없는데 그 다리 안 건너고 다른 다리로 건너려면 그 아침에 막히는 자유로에서 20분, 30분씩 이동해야 다음 다리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간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00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국가도 같이 호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비를 보태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시다만 나머지 31개의 다리가 전부 다 나라에서 놓은 다리고 그 동네에서 다리가 건널 게 그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일산대교를 국유화를 해서, 즉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손해 보게 해서는 또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여러 가지 장기적 전망을 갖고 투자를 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값을 치르고 국가가 매입해서, 사실 공사비를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무료화 관련한 그간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법적 근거 문제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지자체에 이런 유사한 민자도로가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형평성 그리고 무료화의 편의, 그렇게 해서 경기도하고 또 기초지자체 간에 아직 분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지금 혹시 기재부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것 현물출자해서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라도 넘겨받는 것도 검토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일산대교가 경기 서북부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고양 파주 김포를 잇고 서울 외곽지역을 상생 발전시키는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함께 애써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또 국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공 DNA 이런 부분 등을 지금 우리도 계속 유지 또는 발전시키고 있는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80년간 저희가 해방 이후 특유의 성장 DNA를 가지고 근대화나 또는 민주화 또 글로벌화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시장, 도전 이런 부분 등을 원칙적으로 부흥시켰고요.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의 ‘이봐, 이것 해 봤어?’ 또 마지막에는 안타깝게 됐지만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런 어록도 있었고, 기업이 잘되는 것이 내가 잘되는 것이라는 울산 현대제철의 슬로건도 우리는 귀담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도전과 혁신 이런 부분 등은 결국 정부의 친기업 정책, 시장에 대한 믿음 등이 아주 크게 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도전, 성장 DNA 이런 부분 등이 쇠퇴되지 않나 하는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장관님,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한 93.6% 정도.

○강승규 위원 그렇습니다. 93.6%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옛날 통계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110% 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계 기준으로 한다면 하더라도 2016년에는 96%였고 이 이후에 계속 보급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보급률이 100% 또는 100%를 넘는다 하더라도 신규 주택은 계속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고 청년 등 신규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5년 동안 28차례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런 내 집 마련의 기회의 꿈들을 오히려 주택값 폭등으로 청년들에 또는 신규 주택 수요자들에 아픔을 준 바 있습니다.

또 중도실용 정부를 표방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에 이런 부분에 많은 중도실용 정책을 추진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 5개월 만에 보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비아냥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준 2가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2배나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원망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저는 신문에서, 저는 원래 서울의 지역구에서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도심 재개발, 특히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까지 참전하셔서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도시의 여러 가지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문제는 어느 도시든지

큰 문제입니다. 도시를 어떤 시가지를 개발해서 쓰다가 이것을 외연, 신도시로 외곽으로 나갔다가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다시 구도심, 원도심으로 와서 재개발을 하는 그런 도시의 어떤 성장 관리 역사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에서는 수십 년 전에 롯폰기라는 개발을 민간기업이 한 10여 년, 20여 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서 아주 성공적인 개발 사례가 있고요. 관광, 여기도 국무위원님들도 한 번은 다 가 봤으리라고 봅니다. 또 최근에는 동경역 일대 재개발해 가지고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이 원도심의 공동화 또는 도시재생 문제 등이 계속 반복되는 데 파리의 퐁피두센터도 그렇고요 또 뉴욕 중앙역의 원 밴더빌트 개발도 그런 사례고 또 라 데팡스도 수십 년 전에 했지만 사실 그런 신도시 개발인데 굉장히 도시의 전통과 현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어울릴 수밖에 없다는 게 도시개발의 큰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등을 혹시 역사 어떤 경관 이런 문제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정쟁이나 정치적 잣대로 도시개발 정책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상가 개발을 고밀도 개발해야 한다 그런 주창론자는 아니지만 세운상가 개발 문제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삼십 년 동안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를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해서 도심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계천 주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등을 민주당 정부에서도, 여야가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시장의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장관님? 제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제가 정치적으로 지적하는 겁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기본적으로 도심을 활기 있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보다도 이런 것이 정쟁의 잣대로 자칫 도시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관리 문제가 그렇게 비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장관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쭙본 겁니다.

김성환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강승규 위원 이재명 정부가 AI 전환 시대 이래 가지고 첨단산업 개발, 누구보다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고민을 많이 해 오셨는데 실제 장관님이 상임위에 있을 때 제11차 전기기본하고 그때 원전 추가 신규 건설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수급계획도 합의를 하고 해풍법도 저희가 합의를 하고 또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법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되신 이후에 신규 원전 추가 짓는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때는 신규 원전을 짓겠다, 어떤 때는 또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는데 실제 어떠십니까? 신규 원전 지으시겠습니까? 제11차 전기기본상의 발전원 등에 대해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아니, 다른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 11차 계획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다 포함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발전원 비율을 보면 3, 3,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재생에너지는 3, 3, 3, 1입니다.

○강승규 위원 1이지요. 원전이 30% 정도인데 지금 계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만약에 AI 전환 등 첨단산업에 많은 전력이 소요가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지금 현재 10%에서 20~30%로, 지금 장관님은 한 30%까지 생각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최대한 빨리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게 갔을 때 원전 비율은, 아까 추가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발전원 비율에서 원전 등이 낮고 또 탈탄소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LNG 발전이나 석탄화력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실제 전기요금 그다음에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재생에너지도 충분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최근에 재생에너지 가격이 많이 빨리 낮아지고 있어서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믹스하고 석탄을 빨리 폐지해서……

○강승규 위원 지금 계통으로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계통 문제 때문에? 계통이, 지금 아무리 지원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송전망이 그렇게 지어질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일부 허수도 좀 있고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충청지역에서 변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송전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들도 만만치 않던데요, 지원법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남에는 30개의 석탄발전소가 조만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거기에 생기는 송전망의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이건 충남만이 아니라 제가 가서 상황을 살펴보니깐 현장에서는 실제 저희가 뭔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계통이 그렇게 급격히 발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AI 전환 시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 첨단산업 경쟁에 쓰려면 전기요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탈원전 부분에 너무 집중하시다가 이런 산업계의, 지금 규제 부서로 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시장의 어떤 어려움을 장관께서 이쪽 산자부에 계셨으니까 그쪽 규제 부서를 생산적인 환경에너지부로 어떻게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에너지 믹스를 잘하고 빨리 탈탄소화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AI를 잘 가동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기재부장관님, 오늘 환율이 지금 한 1463원대인가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강승규 위원 지금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는, 이렇게 고환율 유지되는 이유가 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강승규 위원 복잡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 때 우리 경제에, 어찌 됐든 수출 기업 등은 저기 할 수도 있지만 경제에 또 먹구름 되지 않을까요, 장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어떻게 또……

○강승규 위원 이런 부분이 혹시 관세협상의 후폭풍 등으로, 관세협상이 아직 MOU라든가 팩트시트가 안 나왔지만 이런 데 대한 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관세협상 그다음에 투자 환경의 변화, 지금 여러 가지 통상 질서의 변화 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솔직하게 이 어려움을 호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데 관세협상을 하고 나면 1차 2차 또 장관님 정책실장 할 때마다 바뀌어 가지고 저도 지금 산중위에서,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왔습니다만 국민들이 너무 혼동스러워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부 발표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님,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제가 충남 홍성·예산 지역입니다. 충남의 서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충남 서부지역이 철도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장항선이 유일했고 장항선의 복복선 전철화 문제도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제 지역구는 홍성까지 작년에 겨우 개통이 됐지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개통돼서 실제 복선 전철이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 홍성 이하 지역, 광천부터 군산 이런 지역들까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이 장항선 복선 문제에서 하나 큰 문제가 서부지역의 유일한 철도교통이었던 장항선의 복선화 문제가 이렇게 지연되는 데다가 신창까지는 복선화와 전철화가 되고 거기에 수도권 전철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공약을 걸었지만 수도권 전철이 전철화가 되면 예산·홍성까지 오리라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비효율적이다, 수도권 전철이 이렇게 무한정 연장될 때 비효율적이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 홍성에는 내포신도시가 들어서서 충남도청이 들어서 있고 내포신도시가 10만 목표로 했지만 이제 겨우 4만 5000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진하니까 굉장히 원망이 많아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원망도 많고 정치인들 공약,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기 홍성전철역에 대한 수도권 전철 운영을 공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 국토부에서 여기에 전철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수도권 전

철 운행 계획이 있습니까? 공약 지키실 겁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지금 저희들은 장항선, 지금 말씀하셨던 복선 전철 공기가 많이 늦어졌는데 그런 지연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통을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개통이 아니라 홍성까지는 전철 복선화가 되어 있는데 수도권 전철, 청량리·서울·종로 등에 운행되는 1호선 전철이 그쪽까지 운행해야 되는데 신창까지만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전철이 왜 홍성까지는 안 오냐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공약을 걸었어요, 홍성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장 운행하겠다. 그런데 제가 철도청 등에 물어보면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장관님, 공약 지키시겠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 시설의 승강장이라든지 스크린도어……

○**강승규 위원** 승강장은 플랫폼만 좀 높이면 돼요.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그런 시설 개선들이 더 추가가 돼야……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냐는 거지요. 저도 공약을 걸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철도청은 꿈쩍도 안 하고 있지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철도청에 계속 점검해 봤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실 건지 제가 국토부와 철도청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서 언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서해선, 서해 준고속전철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여당 정부든 야당 정부든 엉망으로 해 가지고 10년 동안 건설해서 지금 반쪽의 반쪽만 건설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겨우 지난해부터 타당성검토 용역이 들어가서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기본설계비 20억을 반영했던데 서해선과 경부축을 연결한 7.2km의 연결축 구간을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렇듯 충청도 서부지역은 철도교통에 대해서 정부에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항선 복선화,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부분 등에 대해서 또 수도권 서해선의 연결 구간 등에도 국토부가 단단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장관님들, 식사 잘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부총리님,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필수의료로 책임지는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추 기반으로 지역소멸 예방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어떻게 키우고 지킬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저희들도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올해 6월 결산 기준으로도 한 35개 중 29개 지방의료원이 적자고 최근 3년 연속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또 지방의료원연합회에 따르면 연말 기준 약 1500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올해 6월 기준 여전히 62.7%에 불과한데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한 결과 일반진료 중단과 수익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재정위기는 결국 경영 실패입니까, 아니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책무 수행의 결과입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경영은 또 어렵고 이래서 어쨌거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가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지방의료원의 적자 구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구 노력도 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금융기관 등을 통한 차입, 물품대금 지급 유예 등 비상경영을 실시 중이지만 유동성 위기 해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5년간 1만 명이 넘게 공공의료 현장을 떠났고 임금체불도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원은 임금체불과 노사분쟁 등 경영 한계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무너진다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해 오히려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공의료원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돈과 그다음에 의료 인력의 이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영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보다는 경영혁신, 필수의료 강화 사업 등 현재 우회적 형태의 제한적 지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난 회복을 위해 필수의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지원, 회복이 예상되는 2027년까지 집중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대해 현재 예산편성한 것보다 약 633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복지부 질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부와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직은 소위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이러한 경영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복지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계속 경제부총리님, 통합돌봄 관련해서요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 분야가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정부안을 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부안은 재정자립도 상위 20%, 시군구 46개를 제외한 183개에만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6개 시군구도 재정자립도가 20 내지 30% 수준으로 예산이 미지원될 경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전국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29개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내년 3월 되면 전국 확대도 하고 또 제도 안착을 위한 재정지원 요구 확대도 있어서 이것도 예결소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무엇보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도 시범 사업 당시 5억 원보다 낮은 평균 4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까지 대상으로 포함된 본사업에서 노인만 대상으로 했던 시범 사업보다 정부 지원이 적다면 과연 정부가 통합돌봄정책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원 단가 인상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예산 증액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박희승 위원 최근 전북 순창을 비롯한 7개 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렇지만 7개 지역만으로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한데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이미 많은 의견이 제기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장관님은 농해수위 종합감사 당시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경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 답변을 하였고 ‘국회 심의를 통해 증액이 되면 최종 관문에서 탈락한 전국 5개 지자체 모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긍정적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부총리님하고도 의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의견 주신 것들을 저희는 계속 경청하고 있고요. 소위 단계에서 그 부분도 정부 안에서 더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군 중 49곳이 신청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장수, 진안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이미 사업 역량이 검증된 것 같은데요. 예산 증액에 따른 추가 지역 선정 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어 기선정된 7개 지역과 시행시기가 달라지는 문제 발생 등이 우려되는데요. 추가 지역은 지난 10월에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승 위원** 또한 낮은 국비보조율 40%는 지방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3%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국고보조율을 50% 정도로 상향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현장에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에 따라 국비보조율 50% 확대, 그다음에 1차 선정 지역 추가 반영 등을 위해 약 170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됩니다.

현재 기재부는 어떤 입장이며 부처 간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 고민은, 지방의 어려움도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광역하고 기초 간에도 서로 간에 떠넘기기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지만 중앙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것은 어쨌든 농림식품부와 잘 상의해서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정은경 장관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복지 질의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립비 지원 외 운영비 등 예산 지원 방식을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지원 방식 등 현재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행안부가 운용 중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립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을 활용해서 건립을 지속 지원하는 방안과 또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건립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이 어렵다면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만약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추가 증액과 운영비 지원 약속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복지부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은 정부 내에서 어떤 재원을 쓸 건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행안부하고 협업 과제로 국정과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인데 법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다 보니 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인구감소지역의 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11개소에 연간 약 6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한데 정부의 긍정적인 증액 검토를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박희승 위원 저희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말씀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장관님, 2021년 겨울에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폐사하는 국내 첫 집단 폐사 사례가 나타난 이후 매년 100억 마리에 달하는 꿀벌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응에 때문에 당시에 꿀벌이 상당히 많이 폐사했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런데 그중에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계속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분별한 농약 사용인데요. 최근에는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올해 1월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에 대해 꿀벌 유해성평가를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특정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농약을 국내에는 시기나 목적에 따라 일부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제보에서도 벌 농장 하나가 해당 계열의 농약인 클로티아니딘 때문에 폐사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서 농약 사용에 대한 통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농약 성분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잔류독성, 꿀벌에 유해한 잔류독성 이런 것들을 사용금지해라 이런 경고문구도 표시를 하도록 강화하고요. 조금 더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복지부의 정은경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희승 위원 아프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오랜 시간 상병수당 도입을 논의해 왔지만 여전히 본사업이 시작되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를 짚어 보고 양과 질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가 계속 지적해 왔지만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상병수

당 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역이 좀 제한되어 있고 홍보나 예산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미흡한 설계로 집행률이 저조했고 낮은 평가로 예산은 또 감액됐고 결국 2025년 전국 전면 도입은 연기됐습니다. 실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이 되었는데 이게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희승 위원 연례적인 예산집행도 부진이 반복됐습니다. 2022년에는 35%, 2023년에는 32.4%, 2024년 60.7%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 들어 올해 8월 기준으로 69.3%로 집행이 양호합니다.

그런데 정책 대상자의 형태를 고려한 예산추계의 어려움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 인지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범 사업이 부실, 미흡하게 진행됐던 측면을 인정하고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진행되고 있는 2·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본사업을 27년에 도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예.

또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도 문제입니다. 지금 10% 수준에 불과한데요.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환자 1인당 연구지원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2022년 1단계 의료기관 참여율인 17.5%보다 되려 낮아진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무래도 상병수당을 받기 위한 진단서 작성에 적절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평가해서 본사업 할 때는 적절한 수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상병수당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내 국민과의 약속을 이번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후보자 시절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속도도 중요하지만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3단계를 모두 합쳐도 시범사업 지역이 적어 상병수당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은 제외되는 문제 또 소득 제한, 보전금액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다양한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각 모형별로 말씀하신 재원조달 방식, 적용 대상, 보상 수준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모형을 개별적으로 다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아플 경우 실직으로 이어지기 쉽고 노령 빈곤으로 악화될 우려가 큼니다. 사업 대상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제노동기구 상병급여협약을 보면 상병수당은 보장기간이 최저 52주 이상,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단계도 150일,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한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간, 급여 수준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제기준과 비교를 해 보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재정추계를 해 보면서 본사업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희승 위원 상병수당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이고 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이미 국가 단위의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부가 내실 있는 본사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본사업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저는 경기도 파주 윤후덕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예산 하고 결산 하다 보면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들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좀 감사드리는 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6년 예산안을 지출 구조조정 한 것에서 무려 27조 원을 구조조정을 했다고 그러지요? 지출 구조조정은 그 자체가 사실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성과 부분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27조……

○윤후덕 위원 그것도 2025년도의 사업 중에서 무려 4400개의 사업을 삭감하고 1300개의 사업을 아예 폐지를 했네요. 2025년 예산이 아직도 11월, 12월 남아 있는데도 아예 폐지를 해 버렸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내년도에는 어떻게 모르니까……

○윤후덕 위원 내년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내년도에는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가 별로 없는 사업들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성과 부분을 삭제해서 우리가 AI 대전환이라든지 고성과 부분으로 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출 구조조정하는 것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 파악해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보고 그리고 또 국회예산처에서의 분석보고서 그리고 예결위에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 또 보좌관들께서 이렇게 제출해 주고 또 심의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삭감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거기 속기록이나 이런 보고서에 기록돼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과감하

게 삭감을 했다 또 폐지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했던 분들 그리고 보좌관들께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2023년도 국회 결산은 저희들이 구조조정하는 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처음입니다.

○윤후덕 위원 8월 13일 날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유명한 사람이에요—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 ‘이거를 구조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데, 숫자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것 공개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공개하라고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기재부가 구조조정한다고 하면서, 지금 수십 년 했잖아요. 처음 공개한 거예요.

내년에도 공개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제 계속 공개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공개해야 됩니다.

○윤후덕 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공개한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윤후덕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 부총리께 제가 결산할 때, 그러니까 8월 며칠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R&D 예산이 4조 6000억이 삭감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2만 2000개의 연구사업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313개 사업을 중단·종료시켜 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축된 것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과기부장관님이 ‘우리가 TF 만들어서 조사하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고받았는데 아직 전혀 이것에 대해서 전모를 찾아내지,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좀 어때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조사하는 것을?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기정통부 내에 예산 삭감 TF를 꾸려서 일단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저희가 끝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 연구인력 이탈, 전체적인 영향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과기부총리가 2026년 R&D

예산안에 대해서 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넘어서 완전한 복원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 홍보한 거잖아요, 홍보.

그러면 2023년에서 2024년 4조 6000억의 삭감에 의해서 연구과제가 위축되고 아예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2026년에 제대로 복원시켰어요, 하나하나 찾아내 가지고? 안 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대부분 과제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장 피해가 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구, 지역 R&D 또 기업 지원이나 출연연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다 복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구의 전 베이스를 더 늘리고 그랬으니까 복원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313개의 중단된 사업을 이번에 좀 회생시켰어요,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중단됐던 것을 다시 회생했다기보다도……

○윤후덕 위원 아니,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했어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거기에 준하는 기본연구들이 다 복원이 됐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조사 계속해 보세요.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지금, 313개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줘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2026년 예산에 제대로 회생시켰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표를 좀 봅시다.

기재부가 2025년 9월 1일 날 국회에 보고하고 또 발표한 거예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중기 국가채무 전망의 표예요.

그런데 25년은 그렇고 2029년의 국가채무비율이 59.0%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60%까지 거반 가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기는 저희들이 혁신경제를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예산을 하면 공청회를 합니다. 이 공청회에는 여야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진술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리에 와서 그것 보니까 이 진술서 15페이지에 저 수치를 가지고, 2029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8.0%니까 이것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15페이지에 있어요. IMF지요, ‘국제통화기금은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할 경우 위험 수준으로 판단한다. 한국의 경우 2029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이 5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재정정책은 국제기준상 경고 구간에 진입한 셈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것도 교수인데.

그러면 부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맞는 얘기에요? 거짓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게 맞았다고 꼭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은 전망을 할 때 재정 규모를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이렇게 된다는 프로젝션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과기부총리나, 지금 AI 대전환이라든지 초혁신경제로 가서 그런 R&D가 성공하는 경우를 가정하지 않았습시다. 그런 게 성공한다면 저게 떨어지지요. GDP가 높아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프로젝션으로 간다면 저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하여튼 IMF가 권위가 있는 기관이잖아요. 경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겁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오류고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분모가 GDP잖아요—국내총생산이고—그 위의 분자가 부채의 총량이고. 그런데 사실은 GDP라는 것은 IMF나 유엔이나 이런 데서 5년마다 기준치를 변경하는 그런 국제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룰테면 GDP라는 것은 낡은 상품은 없어지고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은 채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GDP는 5년 후에 하면 이게 팽창을 해요. 이게 현실에 맞춰서 크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볼륨이 커져요.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24년 6월에 그렇게 하게 했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4년 6월 5일 날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민계정 GDP의 기준연도를 개편한 거예요, 5년 만에. 그랬더니 2023년에는 그 전 걸로 하면 부채비율이 64.9%인데 GDP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비율이 하락한 거예요. 3.5%p가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년도, 2022년도 3.5%p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3.0%가 하락했어요.

5년마다 돌아오는 GDP를 개편하는 시점이 2029년 6월이에요. 그러면 2026년의 결산을 가지고 GDP를 재조정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최소 3.5% 또는 4%의 비율이 하락해요. 그리고 그사이에 우리가 하는 게 뭘니까? AI 인공지능 가지고 피지컬 AI 이런 걸로 해서 확장재정이든 뭐든 해 가지고 GDP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APEC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하는 것을 진정시키고 또 우리도 미국하고 관세협정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도 이제 호조를 나타낼 수 있고 한국 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GDP가 당연히 커지지요.

그래서 2024년 6월에 GDP 재조정하니까 무려 7.6%가 증가했어요. 107.4%인가 107.6%가 증가했어요. 그만큼 파이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2029년 6월에 이 GDP를 다시 재조정하면 한 109%, 110% 이렇게 증가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이만큼 떨어져요. 한 5%p 정도는 떨어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시하니까 5년마다 GDP를 조정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 와서 알잖아요. 예산 대비로 해서 국가채무비율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결산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이렇게 계산한 것에서 보니까…… 결산을 하니

가 그렇게 되면 한 1%p가 하락해요, 그 차이가. 그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총지출이 다 지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때에는 26조가 지출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국가채무비율이 이렇게 또 하락이 돼요. 그걸 합치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 제시했던 58.0% 이런 것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설명한 것…… 심지어 기재부가 중기재정 전망을 제시한 것이, 2021년도에 기재부가 전망치를 낸 게 2025년에 58.5%였어요. 그러면 저걸 볼 때는 아주 뒤집어졌지요. 그런데 실제 2025년에 국가채무비율이, 금년이 얼마 돼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 밑의 것 봐요, 실제로는. 똑같이 중기재정 전망을 제시한 건데 2025년도에 같은 당국에서 49.1%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무려 9.7%p가 착시가 나타나고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5년마다 GDP를 재조정하는 것을 부기해서 명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하고 예산하고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중기재정 전망을 제시할 때도 제발 명기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국가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늘 긴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가채무 전망을 할 때는요 성장률도 과도하게 안 합니다. 지금 실질성장률을 거의 2% 내외에서 아주 실제로 이렇게 낮게 잡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소위 국가채무를 너무 적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록션 개념으로 한 거고.

○윤후덕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를 올려 가지고 이걸 확 떨어뜨려 줘야지만 또 저희들이 노력한 성과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국가채무가 늘지 않도록 촘촘히 따지고 예산도 성과를 올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그런데 부기하든지 같이 명기를 좀 해 주세요. 전망이라는 그 표만 돌아다니면 58.0%의 국가채무비율이, 이재명 정부의 2029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 정부는 부채만 만드는 정부가 되네 이렇게 되어 버려요. 표 하나도 부기하고 명기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윤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광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언 위원 저는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광상언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늦게 등장을 해 가지고 하나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각 정부마다 다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매년마다 교수들이 사자성어라는 걸 발표합니다. 혹시 교수신문에서 매년 발표한 올해 사자성어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걸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들어 보시고 어느 정부인지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재명 정부에 돌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지도자는 병이 있어도 의사에게 보이기 싫어하듯이 자신의 과오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다. 비판을 꺼렸습니다. 바른길 대신 굽은 길로 갔고 편법과 꼼수로 위기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를 숨기지 못해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국민을 속이고 눈과 귀를 막고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을. 그 혼탁한 시대는 마침내 온 세상을 흐리게 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가 아무리 맑은 척을 해도 이미 모두의 눈에는 진실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정부 얘기일까요?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 선정된 사자성어는 호질기의(護疾忌醫), 호질이 걸렸는데 즉 병이 걸렸는데도 의사한테 보이기 싫어한다. 과실이 있는데, 과오가 있는데 충고받기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2009년입니다. 방기곡경(旁岐曲逕), 셋길과 굽은 길을 의미합니다. 바른길을 좇아 정당하고 순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릇된 수단으로 억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 장두노미(藏頭露尾),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못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엄이도종(掩耳盜鐘), 도둑이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입니다.

2012년 거세개탁(舉世皆濁), 세상이 온통 혼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누군가의 무책임이 만든 비극 앞에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하고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다. 국민의 분노는 점점 커져 갔습다. 그러던 중 이익과 정치적 계산 앞에서 의로움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국정은 의로움과 도덕이 아니라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누군가는 권력의 이름으로 날뛰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들이 함부로 날뛰며 법과 상식 위에 군림하던 시기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은 체념으로 번져 갔습다.

어느 정부일까요? 저도 봐야 됩니다.

바로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입니다.

2022년입니다.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했지만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2023년 견리망의(見利忘義),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2024년 도량발호(跳梁跋扈),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꼭 없어야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임광현 국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올해 9월 달 제가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한 사례는 세금 15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의 집입니다. 이 집에 사는 체납자는 버젓이 고가의 외제차를 다섯 대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도 있었고 고급 시계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체납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수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애 등록도 못 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복지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국세청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할 때 발견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체납 현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누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2024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체납액이 110조 70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은 2024년도 예산안 612조의 무려 18%에 달합니다. 그리고 체납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데 같은 해 체납자 수는 113만 명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공무원이 담당하는 체납자 수가 매우 많습니다. 매년 조금씩 보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국세청 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체납자 수가 2021년에는 675명이었고 2024년에는 713명입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해도 60명 이상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해도 3명 이상 매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매우 많지요?

그래서 그런지 국세청에서는 지금 인력 부족을 말씀하시고 국가예산의 무려 거의 한 20%가량이나 되는 체납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혹시 맞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곽상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체납자가 너무 많고 체납액이 굉장히 다액이라서 국세청이 매우 고통받고 실제로 업무상 애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국세청을 괴롭히는 것이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합니다. 혹시 맞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곽상언 위원 제가 규정을 보니까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2억 원이 넘는 사람, 분들을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5만 2000명이라고 하고—2024년 기준입니다—전체 체납자 133만 명 중에 3.9%라고 합니다. 혹시 맞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곽상언 위원 그런데 비율은 3.9%밖에 안 되지만 체납액은 매우 많다면서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곽상언 위원 제가 체납액을 보니까 46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이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체납액이 42%나 된다는데 거의 절반이에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사실 체납에 있어서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110조 정도의 누적 체납액이 있는데 그중에 90조 정도는 저희가 정리보류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능동적·적극적인 체납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가끔 가다 전산 조회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전수 실태 조사를 해서 그중에 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체납 활동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체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계가 곤란해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은 복지시설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일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체납이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고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개청 이래 처음으로 담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상언 위원** 좋습니다. 그 이름이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이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박상언 위원** 이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상언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분류한다고 해요. 생계형 체납자인지, 일시적으로 납부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기피하는,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분류한다고 하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박상언 위원** 분류해서 체납자의 유형에 따라서, 그 분류에 따라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고의적 기피자의 경우에는 가택수색권을 부여하거나 은닉 재산을 추적하거나 그런 강제 수단을 부여한다고 하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박상언 위원** 또한 생계형 체납자, 너무 가난해서, 사실은 저도 과거에 변호사업을 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세금 낸 적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는데 자영업자들은 세금 낼 때마다 무척 고생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혹은 오히려 분할 납부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알게 된 국세청에서 연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재기를 도와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저희가 복지기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상언 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국세청이 올해 9월에 약 2주의 기간 동안 새로 국세 공무원 48명을 투입하셔서 이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범 운영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상언 위원** 혹시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 운영을 해 보시니까 실제 징수 효과는 어떠시던가요?

○**국세청장 임광현** 저희가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주간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체납자를 접촉을 해서 납부 안내하고 실태 확인하는 것만으로 3억 원 넘는 현장에서의 현금 정리를 했고요, 69억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정식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도입을 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실태를 확인하고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는지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징수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못 했던 것인가요?

○**국세청장 임광현**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인력은 많이 부족한데 체납자 수와 액수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신규 발생하는 체납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력 부족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행정력 부족을 조금 보완해서 혹은 충분한 행정력을 투입해서 고액상습체납자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면 실제 국세 징수효과는 매우 크겠네요?

○**국세청장 임광현** ‘매우’까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많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곽상언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 3년간 3000억 원 이상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근거는 있을까요?

○**국세청장 임광현** 저희가 이번에 시범 운영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투입되는 직원 수와 그다음에 대상자인 체납자 수를 했을 때 대략 연간 그 정도의 징수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앞으로 실시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불성실한 체납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려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견해도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폐업이나 실직 때문에 체납한 것이 아니라, 실직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안 냈는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세금 징수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100억 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의 집에, 체납자의 집에 갔는데 에르메스 백이 60개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곽상언 위원** 60개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래서 저희가 체납 특별기동반도 같이 출범을 해서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에 도피하는 사례도 있는데 해외까지 징수 공조를 해서, 하여튼 체납은 어디에 숨겨 놓든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세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을 공부하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다 보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생계곤란자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알려 주실 만한 사례가 좀 있으신지?

○**국세청장 임광현** 지난번, 아까 자료 화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인천에 거주하는 65년생 체납자셨는데 이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는 생계에 굉장한 곤

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 연계를 해 줬거든요. 그때 시범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여러 건을 실질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소득이나 무재산, 무소득, 실업, 폐업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지자체 복지 대상자에 연결을 해서 지금 지원 대상자로 검토 중이기도 하고 또 실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사유 때문에 체납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정보를 알아내려면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 지적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징수법 개정해서 그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법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체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국가가 그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 회피자니까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지요?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를 유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사후적인 조치고 사전적으로 이분들은 단순 실태 확인 업무 쪽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태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정도만 접근을 하게 할 거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징수를 하는 거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 2명이면 우리 직원 1명 정도가 팀장이 돼서 그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담당을 하게 함으로써 그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적인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언 위원** 지금 시간이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번에 시범 운영 결과, 그러니까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가지고 실제로 진행이 될 때 운영 매뉴얼을 꼭 만드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형수 위원 내년도 예산안 728조 그다음에 8.1% 증가된 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도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로 많습니다. 469개 사업에 7조 7987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지출구조조정을 많이 했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7조 원을 지출구조조정 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형수 위원 그런데 이 지출구조조정 한 세부 내역을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이 아닌 것을 마치 지출구조조정인 것처럼 한 사례도 많았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비율을 제가 따져 보니까 액수는 지금 27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예산안 편성 중에서 지출구조조정 액수는 27조 원이 가장 많은데 8.1% 증가한 금액을 가지고 비율로 해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아니에요. 올해는 3.71% 구조조정 했는데 23년에 3.77%, 더 높았습니다. 다른 연도도 3.46, 3.53,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지출구조조정이 신규사업 많이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조정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격려는 아니거든요.

(웃음소리)

다음에 국가채무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겁을 너무 많이 낸다고 하시던데 저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겁나는 것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국가채무 총규모가 1415조 원이고 51.6%입니다, GDP 대비. 물론 추세적으로 아까 5년마다 GDP 규모를 조정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3.5% 하락한다, 이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추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형수 위원 일단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이 대통령도 그렇고 또 운용하는 재정 당국의 분들도 그렇게 심각한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100% 얘기를 하셨고. 기축통화국은 100~120% 평균 정도 되지만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50% 내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기축통화국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는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이미 상위권입니다. IMF가 집계를 했는데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그러니까 11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 기준으로 11개국 통계를 내 봤더니 20년 말에 우리가 11개국 중에 7위였어요. 그런데 21년에는 5위가 됐습니다. 22년에는 4위가 됐고 29년에는 3위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 문제는 지금 이 표에 나오는 겁니다. 부채증가율입니다. 부채증가율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2030년이 되면 체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게 됩니다. 아까 이 표에 보면 25년 부채비율이 4위로 돼 있습니다. 11개국 중에 4위인데 2030년이 되면 이게 3위가 되고 증가율은 체크가 6.1, 한국은 4.7, 우리가 2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세가 걱정된다고 얘기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재정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지는 않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도 국가채무는 늘 하여튼 엄중함을 인식하고요 위원님하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준칙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이렇게 쭉 보면 2020년, 22년, 23년에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국가채무 60%, 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를 -3% 기준으로 해서 곱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고 22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3%로 하되 60% 넘으면 관리재정수지를 -2%로 낮춘다. 그다음에 23년에는 관리재정수지가 -2% 초과되면 세계잉여금 100%를 채무 상환에 쓴다. 이런 식으로 재정준칙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재정준칙 논의를 보면 관리재정수지 -2% 정도로 관리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하면 관리재정수지가 -4%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수치다. 우리가 준칙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 수치가 관리재정수지 -2%였는데 이게 -4%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있어서는 지금이 대전환기다, 경제의 대전환기인데……

○박형수 위원 대전환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AI라든지 R&D 진짜 역대 최고로 늘리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아끼다가는 진짜 경제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AI 부분이나 반도체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그 대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재정준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법제화해서 넘지 않도록, 일정한 수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그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지난 6월에 2차 추경안과 함께 제출했어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여기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구’라는 이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준칙을 단년도로 2%다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이걸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스펀(span)으로 하느냐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 고민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협의도 해 봐야 되고 또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지금 점점 박약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재부장관은 재정준칙을 추진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는 그런 방향성은 인정하고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서는 국회에서 그 법안도 나와 있으니까 아마 국회 논의가 되면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3년도에 재정수지를 2.6%로 줄이겠다 해서 재정 규모의 증가를 낮췄는데 이게 3.9%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숫자를 보고 진짜 재정을 쓸 때는 쓰고 줄일 때는 줄이자 하는 그런 식의 재정 전략을 썼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연도는 적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연도는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좀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지요.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이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썼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건전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준칙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형수 위원 그거 자체를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충분히 정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도 해 주시고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관세협상에 대해서 기재부장관과 산업부장관한테 여쭙볼 텐데 산업부장관이 좀 대답을 해 보시지요.

지금 예결위에서도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관세협상이 거의 계속해서 타결 임박하다 임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쟁점은…… 통상 분야는 다 됐다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핵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를 미국으로 하느냐 한국으로 하느냐 이것만 남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던데 맞는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고요……

○박형수 위원 예결위 전체 질의를 종합해 보니까 그런 뜻으로 들리던데.

일단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통상 분야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아직 사인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양측이 마무리된 수준입니다.

○박형수 위원 저는 그 얘기를 지난번 장관님한테도 들었을 때, 이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인할 때까지는 끝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손 놓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내가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00억 달러 납입 방식을 10년간 200억 달러 한도로 해서 납입을 하기로 했어요. PPT를 하나 보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외화 자산은 여러 군데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체에서 운

용하는 게 있고 주로 한국투자공사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용 수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200억 달러 중의 일부 부담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인데 저 수익률을 보십시오, 들쭉날쭉합니다.

2021년에 9.13, 22년에는 -14%,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수익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200억 달러를 매년 납부를 해야 된다, 월별로 어떻게 납부를 한다…… 이게 우리는 일본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산업부장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협상할 때 얘기를 해 봤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외환시장의 변동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일본과 다르게 좀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박형수 위원 일본은 그러니까 지정하는 날…… 아니, 투자처 결정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입금하기로 이렇게 돼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박형수 위원 우리도 그러면 며칠 내로 입금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저희 안에도 일본과 같이 영업일 기준 45일,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준으로 한 두 달 내에 입금하는 걸로 돼 있고 다만 그 시기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에는 조정 가능하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게만 해 가지고 변동성 심하고…… 우리는 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외환 조금 빠져나가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방식은 좀 부적합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기일을 더 길게 하거나 또는 월 한도를 아예 정하든지 여러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 우리의 외환 수익 자체가 불규칙하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투자처 선정 방식이 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말로 하면 누가 결정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좀 관여하고 제동을 걸 어떤 장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 투자위원회가 있고 협의위원회가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투자처 선정을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협의위원회는 뭐냐 하면 거기의 그 투자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걸 검토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그러면 협의위원회는 우리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을 하기로 돼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여기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비토를 하거나 ‘이것은 다시 검토해 봐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유보돼 있습니까, 그 양해각서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협의안에 일단 기준 자체가 상업적 합리성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상업적 합리성 그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것 굉장히 모호한 개념

이잖아요. 그게 무슨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다 상업적 합리성 갖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구체적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각 프로젝트별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투자되는 분야 그리고 법적인, 전략적인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단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관련해서 손실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난번 산중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에 우리가 명확한 제동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수익률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를 할 겁니다. 사양산업 같은 데 투자를 할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저게 없잖아요. 투자를 하지도 않고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가 안 돼 있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은 저희 쪽에 인프라 제공 그리고 구매처 보장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박형수 위원** 그런데 돈은 하나도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수익률이 나오는 곳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에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손해가 나는 게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에서도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에너지, 주로 미국에서 진짜 하고 싶은—조선 포함해서—분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걸 아무 데나 투자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물론 우리는 그런 선의를 믿어야 되는 것이긴 한데 그 선의를 믿고 우리가 협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하여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위원회가 선정한 그 투자처에 대해서 우리 협의위원회,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실제 운영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인프라 제공 얘기를 했는데 미·일 투자 양해각서에 없는 인프라 중의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니까? 비자입니다, 비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 때 봤던 그걸 해결하기 위한 비자 문제를 여기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혹시 넣어져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MOU상에는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내용상 성격이 좀 달라 가지고.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미 방침은 밝혔고요, 그 내용이 외교 당국 간에 되고 있어서 그 내용도 이번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확신은 못 하겠는데 발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MOU의 비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MOU냐 아니냐, 조약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내용

이 국민들께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기준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결정됩니다. 실제 사례들도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전에 EU하고 중국하고 투자협정에서 MOU를 맺었어요. 그때 EU도 재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받았습시다, 비준동의를 받았고, 일본과 호주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중국과 호주와의 투자협력 MOU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사례를 잘 검토를 해서 가지고……

비준을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한테 부담되고 일부를 또 외화 수익으로 보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저걸 해야 되잖아요. 법률을 만든다면서요. 법률을 만들거나 재정적 부담을 지을 때는 저 사례들에서 그래서 비준을 받은 것이거든요. 비준을 안 받겠다 그러는 것은 MOU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용을 다 공개하는데 굳이 비준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MOU 내용은 원문 포함, 번역본 포함해서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비준 관련 이슈는 양국이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같은 유사 사례였던 일본도 비준을 안 받는데, 미국은 안 받는데 저희만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의 움직임에 손발을 묶는 꼴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도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쪽은 안 받는데 우리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OU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MOU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제가 이번에 17개 지자체를 통해서 폐기물 위탁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전부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입찰조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지자체 폐기물 위탁사업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님 말씀 주시면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아직까지는 챙겨 보지를 못하셨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자세히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김위상 위원** 혹시나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등에 다양한 지자체 위탁사업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 특히 불공정한 입찰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신규 업체 진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위탁사업은 국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필수 공공 서비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위상 위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위탁사업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입찰 구조가 매우 폐쇄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사실상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구성되어 간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폐기물 관련 운영지침을 기후부에서 지자체로 제공하고 있는데 운영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폐기물 관련 위탁사업을 10년 가까이 동일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제안요청서를 보면 정량평가 항목에서 보유 차량, 운전원, 미화원 확보가 입찰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과거 용역 수행 실적도 25%나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은 사실상 신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전부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관님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이런 구조라면 신규 업체들이 진입하기 힘들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럴 것 같습니다만 지자체별로 그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운영지침을 기후부에서 제공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비용 조달도 어려울 것인데 입찰에 참여하려면 모든 부분에서 선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안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자금력이 풍부한 기존 업체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줄 수 있음에도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평가항목 중에 기술 능력에서 보면 정량평가가 25점, 정성평가가 50점으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량평가에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업체의 점수는 처음부터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기후부에서 폐기물 등 관련 대행계약에 관한 고시를 통해서 원가 계산 기준과 계약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위상 위원** 이러한 과도한 정량평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기준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기물 관련 계약에서 정량평가 비중을 조정하거나 또는 신규 업체가 공정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관님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말씀 주셔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적 성격들이 있어서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폐쇄적인 입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조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중소·신생 업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서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의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평택항과 병진 발전하는 이병진입니다.

관세청장님, 알리·테무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오는 항구가 어디입니까?

○관세청장 이명구 평택항·인천항입니다.

○이병진 위원 평택항입니다. 중국발 해외직구의 45%,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세관의 현실은 어때요? 1인당 엑스레이 판독하는 것이 한 1만 4000건이 됩니다. 인천항과 그다음에 인천공항의 3배에 달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 이명구 예.

○이병진 위원 그래서 심각하다. 인원도 부족하고 또 마약도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르는 직제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재부장관님, 평택항이 국내 몇 위 항이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부산, 광양, 인천…… 한 4위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병진 위원 원래 86년 3대 국제항으로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5위에 랭킹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보고 향후 30년, 60년을 내다봤을 때 평택항의 발전은 불문가지입니다. 물어볼 여지가 없다.

그동안 정부의 축으로 부산항이 발전하고 일본과 미국 중심의 무역이었다면 앞으로 평택항과 인천항이 중심이 되고 남북 화해·평화 시대에 평택항이 대체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교역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평택항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런 세관 문제도 심각하고 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만약에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렇다면 또 투자도 해야 되고 인력도 증원해야 합니다.

○이병진 위원 투자도 중요하지만 관세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중부권 평택과 같이 면접돼 있는 게 바로 아산·당진·천안 충청권입니다. 그리고 중부에는 음성·충주·제천까지 다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안성·평택·화성……

중부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은 관세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필요가 있으면 또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라든지 직제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재부라든지 행안부와 협의할 때 우리 청장께서 나서서 하시겠지만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진정 지역균형발전과 범죄 예방, 빈틈없는 평택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국민 세관 품질 향상 서비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병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 우리 대통령께서 ‘공직자는 일단 안 돼 말고 일단 돼’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도 그런……

○이병진 위원 파티션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해양부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은 국토부하고 해양부하고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2011년도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갈라져 버렸단 말이지요. 그때 평택항 계획이 잡힌 것 중에 철도 노선하고 국도 38국도입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8국도가, 평택항부터 시작해서 동해항까지 연결되는 우리 한반도 중심을 가르는 이게 38국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38국도가 말이지요 평택항으로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이게 의아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만약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병진 위원 그때는 계획이 됐었는데 국토부도 나 몰라라 하고 해수부도 나 몰라라 하면서 14년 동안 철송장 문제뿐만 아니고 철도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철도는 단선으로 돼서 이제 복선화가 돼야 되고 또 항구로 이어져야 될 과제가 있지만 먼저 철도보다 도로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용역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도 국토부하고 한번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병진 위원 한번이 아니고, 이것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PPT 두 번째 볼까요?

세계적인 항구들 보면 이렇게 도로망하고 철도망이 연결돼서 진정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물류의 숨통을 틔우고 있는데 평택항은 13년 동안 하지 못합니다.

재보충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요.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과 함께’ ‘무빙’ ‘미생’ ‘이태원 클라쓰’, 혹시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웹툰……

○**김용만 위원** 맞습니다.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인데요.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정작 콘텐츠의 원작자인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삶이 모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공정한 계약 구조 때문인데요.

보면, 혹시 위원장님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 아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전에 신문에서 기사로 작가에 대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맞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프로그램인데 23년에 이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님이 출판사랑 저작권 분쟁을 가지고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게 된 거예요. 그 충격 이후에 공정위가 웹툰이나 웹소설 업계의 약관·계약서를 전수조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 조항이 1112개가 확인이 되고요. 이거를 사업자들에게 시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불공정 조항을 전수조사해서 발견한 것은 잘하셨는데 작가들이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또 의원실로 제보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MG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웹소설·웹툰 업계에서 작가랑 사업자 간의 대금 지급 방식인데요. 미니멈 개런티(minimum guarantee)라는 것입니다. 약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원고를 납품을 하면 그 원고료를 대금으로 받는 것과 좀 다르게 MG라는 것은 작가가 일정 기대수익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성공해서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미리 지급해 준 MG 부분을 빼고 추가로 나누어 갖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잠재력 있는 작가들을 투자를 한 만큼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도 하고 작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나름대로 윈윈 제도다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보면 후차감 MG라는 거예요. 후차감 MG라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예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빨리 진행할게요.

출판사랑 작가가 수익금을 8 대 2로 나누기로 계약을 했어요. 작가는 출판사로 MG를 100만 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좀 해 봅시다. 그리고 작품이 나중에 성공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더 벌었어요. 그러면 이 매출이 이렇게 정산이 됩니다. 먼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인앱 수수료를 30%, 그러니까 300만 원을 떼 갑니다. 그리고 남은 700만 원에서 레진코믹스 같은 실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는 그 앱에서 또 한 40%, 280만 원을 가져가면 나머지 420만 원이 남습니다. 이 420만 원을 아까 얘기한 2 대 8, 8대 2로 나누는

건데요.

여기에서 선차감 방식이란 걸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4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먼저 뺍니다, MG를. 그렇게 되면 나머지 320만 원을 갖고 8 대 2로 나누면 작가에게 64만 원의 추가 수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의 후차감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420만 원이라는 것에서 먼저 출판사 대 작가로 8 대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출판사가 336만 원, 작가가 84만 원의 몫을 갖는 거예요. 84만 원의 몫에서 MG를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6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거지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불공정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는데, 작가들이 이걸 알더라도 이 지금 방식을 거부해 버리면 사실상 연재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후차감 MG 지금 방식을 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1000건이 넘는 불공정 조항을 확인하신 것은 공정위의 큰 성과인데요. 이 불공정한 후차감 MG 관행이라는 것은 약관법으로 다루지도 못하고,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약관법이 아니고 공정거래법으로 이게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직권조사는 물론이고 이런 짓을 하는 업체들에게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응당한 처분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보당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부총리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의 가슴 아픈 얘기 해 보겠습니다.

전북 김제의 32살 청년이 농업이 자신의 미래라고 믿고 정책자금 3억을 대출받아 인삼 농사를 시작했는데 농사를 망치자 논을 팔아 대출금 1억 9000만 원을 먼저 갚았습니다. 다시 땅을 임대해 콩과 밀을 심었지만 수해로 밭이 잠기고 생산비도 못 건졌습니다. 이 청년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며 지난 7월 자신의 밭 근처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20년 이후 청년농들의 정책자금은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 청년농의 상환 기간은 7년 또는 10년이며, 원금 상환이 시작되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부를 믿고 정부가 받으라는 정책자금 받았는데 자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빚더미에 나앉고 또 죽음으로 내몰려서야 되겠습니까?

5년 차 청년농부의 농업소득은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억 대출을 받은 청년농은 올해 당장 2352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청년농들은 상환일이 다가올수록 하루하루가 시한폭탄 초침 돌아가는 소리 같다 호소합니다.

청년농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빚을 갚겠다, 갚을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청년농들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0년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부총리님, 정부가 결단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책자금 상환기간 20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다른 부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 못 하는데 청년이라서 제가 진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꼭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다음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기능 회복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2년 한시 예산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현재 임금체불 등 극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방의료원이 안정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전환하고 필요 예산 지원을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이 대부분 개원한 지 30년이 넘어 병원 시설과 장비 등 노후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환자 안전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한 환경을 개선해서 산재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예산지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것 또한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지원은 16년째 100억, 전체 관리운영비의 1.7% 수준입니다.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정부 책임 등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복지부장관께서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최소한 인건비만이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 부분은 복지부장관님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꼭 상의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K-컬처 문화강국의 자부심 뒤에는 미래의 지드래곤, 방탄소년단을 키우는 학교예술강사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예산 삭감으로 학교예술교육 사업이 축소되고 교육강사들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지난 예결위 질의에 제가 말씀드렸고 추경에 일부 반영이 돼서 심폐소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학교예술 지원 사업비를 윤석열 정부의 삭감 전 수준, 이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요. K-컬처 미래에 투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하면서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애매하게 시간을 끝내서 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시 이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놓어준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따 3차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김정관 장관님, 조인트 팩트시트 안 나오는 이유가 원자력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하느냐 그 쟁점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한번 봐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 얘기는 했는데 서해평화도로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여야 간에 서로 이견이 없고 쟁점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PPT를 띄워 주시면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영종에서 시작해서 북도면 신도로 해서 강화로 간 다음에 강화에서 해주·개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도로는 올해 말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건너서 왔고요. 파란 도로가 한 11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붕 없는 5000년 박물관을 인천공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환승하고 공유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 통일시대를 맞아서 개성·해주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정부부처 간에 다 의견이 달라요. 보면 국토부가 21년도에는 국도 지정을 수용했다가 25년도에는 기재부가 반대해서 또 국토부도 반대한 것 같은데, 그런데 행안부는 사실 국도 지정이라든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하자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양쪽 대통령 공약으로도 확정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인천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에는 민자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국가도로망에 이것은 반영이 안 됐고 이렇게 되는데 민자로 하지 않게 되면 예타도 거쳐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저희들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민자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영종이 민자로 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지역 발전도 늦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당위성이 있는 거면 국토부가 기왕에 국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수용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부총리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신문에 ‘정년 연장 과속 입법에 청년 밥줄 끊길 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회적 합의에 6년 공들였는데 여당은 TF 발족 7개월 만에 강행 수순’ ‘청년·비정규직·중기, 논의에서 빠진 채 하고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이 연장 주장하고’ 또 ‘무리한 입법 때는 세대 갈등 폭발 우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년이 60세고 연금이 개시되는 게 65세라고 그러면 그사이를 메꿀 만한 잡(job)이 있어야지 생계도 가능하고 그런 어려운 보릿고개를 안 겪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동의합니다마는 이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제로섬이 되지 않나. 더군다나 AI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행할 수는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지 경제부총리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출생·고령화로 인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인력의 어떤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회적인 논의 또는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 이런 걸 거쳐서 결정되면 그나마 그래도 문제도 줄일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떤 합의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부산 사상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덕 장관님, 가덕신공항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 지난 10월 29일 날 세종 기자간담회에서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고수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물론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덕신공항은 부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부가 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건설이고.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대식 위원 장관님, 그런데 부산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공기를 줄이는 무리수가 아니라 공기를 이유로 무기한 자연이 될까 그것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말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절차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 국토부의 판단이고요. 다른 건 차질 없

이 진행되는데 다만 공기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4개월로 해야 된다는 분들 또 그 이상 해야 된다는 모든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계기관 거의 다 만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면담을 했고요. 현재 거의 국토부안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바로 가덕도공항에 대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부산시민들이나 또 경남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 사업이 늦어지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다. 다만 공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안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판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29년 개항은 일단 무리라고 봐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장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충분한 그런 공약을 하셨고 또 우리 부산이라든지 경남 또 서부경남 쪽에서는 전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덕신공항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건설회사가 현대건설로 했다가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 이후에 건설회사의 섭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현대건설에서 입찰 포기를, 108개월로 했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포기를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포기된 거고요. 다만 일반 기업들은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내게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안전을 놓고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주더라도 빨리 건설회사가 결정이 되고 또 부산시, 경상남도 전체가 같이 좀 합의를 해서 공기는 공기고 안전은 또 안전이고 국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국토부에서 보여 주셔야 되는데,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가덕도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새 정부에서 확실하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안전 문제를 둘러싼 공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향적인 검토를 하는 데 기초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났는데, 장관님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핵심기술이 지금 해외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이 그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올해 7월에 산업기술보호법도 개정을 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또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단순히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으로 아주 심각한 이슈여서 저희들도 검찰, 경찰 같이해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단순한 지적재산권이냐 산업재산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에서 좀 심도 있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부총리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대구의 가장 큰 두 가지 숙원 사업, TK 신공항과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취수원 관련해서는 김성환 장관님 매우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또 신경 써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자 부총리님께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 신공항은 민관 합동 공항입니다. 민군 합동 공항입니다. 민간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군공항도 있고, 이게 도심지 거의 한복판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자고 했는데 민간공항은 B/C가 꽤나 잘 나왔습니다. 1.03 정도 나와서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걸로 나왔는데 문제는 군공항이었습니다.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이건 원래의 성질상으로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건 사실 지자체가 새로이 군부대가 갈 지역을 다 사서 시설을 다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비용을 다 선투입하고 나중에 후적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을 채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다 안아야 하는 방식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그사이에 있는 지연 기간이 꽤 있습니다. 먼저 군부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새로 부지를 매각해서 돈을 매꿔야 되는데 그사이에 최소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10년 정도가 걸리고 군부대 공항이 거의 10조 가까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0조 정도의 금액을 10년 동안 자금을 조달하면 자금조달 비용만 해도 조 단위의 비용이 듭니다. 이자만 해도 5~6조 이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부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런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돼서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광주공항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국가가 자금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군공항이라는 게 사실은 대구시민들이 불편해서 옮겨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군사작전상으로도 옮길 필요가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에 있으면 야간 작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야간 훈련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이나 유사시에는 이게 주요 타깃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게 군사작전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군공항을 옮기는 거거든요. 민간공항은 옮길 수 있는 사업성이 충분히 이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지원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우재준 위원** 두 번째, 취수원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입니다.

대부분 대도시의 취수원은 상류에 있는 댐의 물을 바로 취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란 것은 처음에 비에서 내려서 상류에 저장된 상태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흐르기 시작하면 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조금씩 더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 지표수를 바로 취수하는 거의 유일한 대도시가 대구와 부산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은 대부분 상류 댐에서 관을 이용해서 바로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상류에 각종 공단들이 있습니다. 그 공단들에서 폐놀 같은 오염물질이 유출된 사례가 30년 동안 9번이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 하나가 취수원을 이전하자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상류 댐으로 하자, 공단 바로 위로 하자, 어떻게 더 여과가 잘 되는 방식으로 하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들도 있고 또 지역 간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제성이라는, 예타라는 방식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만큼 적어도 먹는물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이 추진될 때도 적어도 너무 경제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어떤 방식은 안 된다, 더 싼 방식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챙겨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우재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지역 활성화투자펀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한 측면도 있어서 서면질의할 테니까 잘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과기부에서 국립과학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이훈기 위원 현재 국립중앙과학관이 대전에 있고 부산, 대구, 광주에 각각 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탄소중립국립과학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천만 국립과학관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수도권이라 안 된다는데 그건 설득력도 없고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가 알기로도 수도권보다는 지역 우선 배정의 문제가, 그런 안배 때문에 인천에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6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없고. 그리고 전에 차관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그러면 인천에 있는 어린이들은 과학관도 없고, 그런 노벨상의 꿈을 키우지 말라는 것인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경제부총리님, 지금 2025년 6월 기준으로 6대 광역시 인구를 보면 부산이 325만, 인천이 303만, 대구가 235만, 대전이 143만, 광주가 139만, 울산이 109만이에요. 그래서 인천

이 거의 부산에 버금가는 인구거든요, 인구로 보면. 그리고 사실 과학관이라는 건 어떤 공간 개념보다 사람이 찾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영감을 얻고 과학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안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부총리님, 인천에도 국립과학관을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속히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인천에는 4개의 국립과학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관을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이훈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소규모의 과학관이고, 저도 얼마 전에 국립광주과학관을 갔는데 상당히 잘해 놓았고 저도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관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소규모보다.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천에만 없는데 그리고 인천뿐 아니고 그쪽 서남권 하면 거의 1000만 명의, 지금 과천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과기부장관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제가 아까 질의 때 애물단지가 된 지식산업센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년에도 거의 100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서민경제의 상징인 전통시장 애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 많이 있어요, 도시인데도. 그런데 전통시장 지원이 제가 보기에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 볼게요.

공모사업 중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여기 지원이 2020년에 한 225억 지원하다 내년에는 200억으로 더 떨어졌어요. 경쟁률도 한 3 대 1 되고. 그런데 여기에 한 5억 정도 지원이 돼요, 경쟁률은 3 대 1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전통시장이 한 1400개 되는데 이게 액수도 적고 선정되기도 어렵고 사실 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액수도 늘리고 좀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님, 워낙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지금 현재 예산상의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 주셨으니까 저희도 관심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얘기하고 복지쿠폰도 해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풀어 가지고 진작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조 원을 풀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민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말씀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아케이드 같은 경우의 사업을 중기부에서 하다가 지방정부로 이양을 했더라고요. 이양을 하면서 액수도 적어지고, 사실 되게 적은 돈을 지방정부에 내려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감당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중기부에서 좀 맡아 가지고……

그리고 아케이드 하나 하려면 한 30억씩 드는데 지자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받으면 한 5억, 10억도 못 받아요. 제 지역구에 있는 만수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9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다 그리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이 부분은 2020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파악해 보고 그리고 관련 부처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 성산의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기후부장관님과 농림부장관님께 동시에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대강 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녹조가 너무 심해서 그 녹조를 좀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보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 보 안에 있는 취·정수장 사업을 해서 걱정을 덜어야만 개방을 할 수 있어서 취·정수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림부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2개를 비교를 해 보니까요 이게 타이밍이 좀 다릅니다. 지금 낙동강만 8개 보를 봤는데요 기후부보다 농림부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반 정도 설계와 완공이 늦습니다. 그러면 기후부가 먼저 공사를 끝낸다 하더라도 농림부가 늦어져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반 정도까지 보 개방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성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달성보 보면 역시 길게는 3년까지 차이가 나고요 짧게도 2년 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또 합천창녕보 보겠습니다. 합천창녕보 역시 2년, 2년 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창녕함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양수장 사업이 여기는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심지어 4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기후부에서 공사가 끝나더라도 농림부 공사가 안 돼서 보 개방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결국 이것은 예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게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마쳐야만 빨리 개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것은 하류의 보들입니다. 상류의 보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하고 기후부하고 농림부가 같이 칸막이를 열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좀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협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텐데 기재부장관님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텐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밤이 깊어져서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너무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지자체 시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기초단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너무 좋은 사업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부담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지요. 결국 예산 문제인데, 남해군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15만 원씩 이렇게 하면 1년에 712억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군비가 42%라서 300억이고요 국비가 40%여서 285억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지금 남해군 예산자립도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좋은 제도고 반드시 해야 되는 제도지만 조금만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낮춰 줬으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절박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40% 부담인데 기재부장관님, 대개 국가가 보조사업을 하면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광역과 기초가 또 나머지 50%를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이 사업도 최소 국비 50%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위원님, 저게 보면은요 원래 국비가 40%고 도비가 30%,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비를 50%로 올려 줘도 또 도가 거기서 10% 줄여 가지고 한 52%, 8%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4:3:3 하는 것을 좀 강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는 데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가 완전히……

○허성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도 지금 18% 돼 있는데 최소 20%는 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간 국비를 10% 늘려 줘도 도는 하나도 부담 안 하면 군비가 또 드는 경우가 있어서요.

○허성무 위원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도 최소 20% 부담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원래는 3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믿는데,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 내면서 기초의 부담을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여 주는 그리고 국비의 비율이, 물론 정부도 어렵지요.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범사업이 성공해야만 본사업으로 연결이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내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허성무 위원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허성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제가 국회의……

장관님 어디 가셨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윤후덕 위원 들어올 거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윤후덕 위원 시간만 가네.

장관님 오시라 그래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연락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좀 이따 할게요. 기다릴게요.

○이소영 위원 다음 순서를 먼저 진행하는 게 어때요?

○위원장 한병도 그럴까요?

그러면……

○윤후덕 위원 다음 분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다음 분 먼저 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저도 국토부장관한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한병도 그러세요?

○박형수 위원 기다리세요. 저도 국토부장관한테 할 게 있어요.

○위원장 한병도 정말이에요?

○박형수 위원 예, 진짜예요.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잠시만 앉아 계시지요.

장관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치.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통화하시고 지금……

○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마지막에 국토부장관님 인기가 좋으시네요.

○윤후덕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한병도 지금 두 분 남으셨어요.

○윤후덕 위원 인기가 있네요.

○김대식 위원 그냥 차관한테 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아니, 개인적인 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네요. 그러면 저는 그냥 추가 보충질의에서 합쳐서 할게요.

○위원장 한병도 아니요, 추가 보충질의 없습니다. 두 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없어요?

○위원장 한병도 예.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지금 이 안에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장관님은 영문을 모르시고……

그러면 바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최근에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 가지고 시찰을 한번 갔다 오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다녀왔습니다.

○윤후덕 위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좀 어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부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말은 3위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거의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표현할 만큼 중국의 어떤 앞선 자율주행 기술을 보고 왔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국회의 모빌리티산업 지원포럼의 공동 회장이예요. 그래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자율주행에서 운전자가 개입하는 그런 정도의 한 2단계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고, 중국은 자율주행차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버리는 4단계 이상의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눈으로 본 건 그 수준을 넘어서……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시장 속을 자율주행차가 달리면서 불법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왔고요. 그래서 레벨4라고 하지만 상당한 격차가 있는 레벨4에 진입했다고 봤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또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후덕 위원 중국은 한 수억km 정도가 누적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69만km 그런 정도 밖에는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년 예산은 아예 확보도 못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일단 자율주행 관련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율주행의 특성상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걸 하려면 실제 도시 내에서 실증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증도시를 만드는 예산은 현재 이번 편성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

중액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후덕 위원** 장관님은 대통령님하고, 실세고 그런 예산을 정부예산에 딱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못하고 국회에서 반영을 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어떡해요, 이것.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한편으로 예산상으로 보자면 실증도시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제가 있어서……

○**윤후덕 위원** 도시 규모의 자율주행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기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규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게 굴러가 줘야 예산상의 어떤 그런 확보를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이젠 제 지역의 얘기인데 GTX-A 노선이 서울역까지 부분 개통돼 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삼성역하고 수서하고 동탄까지 빨리 완성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진 이렇게 보고 온 걸 보니까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개통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완전개통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고요. 일단 내년 6월 정도 해서 무정차 통과하는 것으로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윤후덕 위원** 내년 6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임시 개통을 하도록 하고요. 완전히 완성된 후에 최종 개통하게 되는데 내년 6월까지의 무정차해서 현재 GTX-A가 끊긴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삼성역에서 무정차하고 가는 것은 내년 6월에는 꼭 하겠다라는 얘기고, 삼성역에는 2호선이 있어요. 그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027년에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2027년도 초반도 있고 후반도 있고 그래요. 언제쯤에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중반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후덕 위원** 중반은 6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6월로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26년 무정차 통과 그다음에 27년은 임시 개통, 28년은 완전 개통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가능한 한 조금씩 당겼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최대한 땅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서울의 중앙 그리고 또 강남까지 가는데 빨리 개통이 되면 그만큼 교통 복지가 빨리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 장관님으로서 한 달이라도 좀 당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고요. 땅길 수 있는 만큼 땅기

도록 하여튼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자율주행 관련 예산은 제가 노력하고 해서 2026년에 꼭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장관님, 땅긴다는 이야기가 당긴다는 말씀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같은 전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장실 갔다 오셨으니까 안 가셔도 되지요, 이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갔다 왔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동안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형수 위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형 원전 2기하고 SMR 1기 하는 걸로 돼 있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올해 입지 선정까지 했어야 되잖아요. 신청 다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장관님은 12차 전기본 할 때 그때 같이 논의하겠다고 이러시던데, 이것 가지고 지금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12차 전기본 가지고 논의할 때 하면 내년에 시작해 가지고 이게 그 후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12차 전기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11차 전기본에 있는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부지 공모는 한수원에서 지금 하반기에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밟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부의 눈치를 보다가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눈치를 보느라고 밟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하겠다 이걸 지금 여기서 길게 논할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최소한 국민과의 약속이에요. 11차 전기본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그걸 국회에도 다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공모 절차도 밟겠다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지 또 장관님하고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 오늘 이 지적만 하고 넘어 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탄소중립 이런 목표하에서 수소경제로의 이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원전을 이용한 수전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로서는 핑크수소 생산밖에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가 완비가 돼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전

해 기술 자체가 우리가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겨우 10MW 정도의 실증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GW 단위로 할 수 있는 대형 수전해 기술이 아예 모자라거든요. 예기본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여기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이런 대규모 수전해 실증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데는 제 지역구인 울진이 최적지입니다. 신한울 3·4호기까지 지금 들어오면 10기의 원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한울 3·4호기에 따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청정수소 생산하려면 전력망이 썩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따로 지금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정수소의 가장 큰 수요처가 수소환원제철에 쓰이는 포항제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소는 되게 가벼워 가지고 수송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싼 거거든요. 배관망으로 지금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항제철까지 바로 깔 수 있는,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이 부분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울진에서 대형 수전해 기술을 빨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지금 울주에서……

○박형수 위원 울주가 아니고 울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박형수 위원 아, 그거는 시범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울주에서 지금 시범 실시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핑크 수소와 그린수소를 모두 실증을 해서 값싼 무탄소 수소를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장관님, 이 남북 9축, 10축 고속도로 얘기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형수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10축, 동서로 10축 이렇게 고속도로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1축부터 10축까지 중에서 1축에서 8축까지는 거의 다 됐어요. 남은 게 9축, 10축입니다. 9축은 양구에서부터 영천까지인데 이건 지난번에 임종득 위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구가 아주 적은 지역이라서 이 사업 추진하려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동해안 쪽으로 가는 이 10축 고속도로는 포항에서 영덕까지가 11월 7일 날 최근에 개통이 됐어요. 그 위로 삼척부터 속초까지는 이미 개통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만 미싱(missing)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진, 삼척 지구거든요. 울진, 삼척에서는 아직도 무장공비가 나오니까? 왜 여기만 안 하고 떼어 놓고, 이 10축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에서부터 속초 위에 고성까지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속초까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해서 수도권, 서울로 오는 거는 마음대로 지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 딱 미싱 구간이기 때문에 영덕부터, 영덕·

울진·삼척 이 구간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승규·김대식·김위상·우재준·윤후덕·조계원·이훈기·이병진·고민정·박희승·허성무·전종덕·이소영·박형수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배경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틀 동안 경제 부문에 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산회)

○출석 위원(47인)

강승규	고민정	곽상언	김남근	김대식	김상욱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재원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박희승	배준영	서범수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우재준	윤후덕	이강일	이병진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이종배
이훈기	임미애	임종득	전종덕	정진욱	조계원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차지호	천하람	최기상	최형두	한병도	허성무	황정아			

○청가 위원(1인)

김기웅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2차관 임기근

예산실장 유병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제2차관 류제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1차관 금한승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제1차관 노용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차장 목성호

국세청

청장 임광현

관세청

청장 이명구

차장 이종욱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산림청
청장 김인호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상청
청장 이미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욱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부위원장 남동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부위원장 권대영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